

발간등록번호

11-1260000-000062-10

외교백서

# 2021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2021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9 788986 948585  
ISBN 978-89-86948-58-5



# 2021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 목차

## 제1장

2021년 국제정세

006 제1절 국제정세 개관

## 제3장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 034 제1절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 037 제2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 043 제3절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 049 제4절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주변국 협력 외교

## 제2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교

- 022 제1절 글로벌 보건 및 백신 외교
- 027 제2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029 제3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 제4장

지역 외교

- 060 제1절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양 지역 외교
- 069 제2절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외교
- 078 제3절 미주 지역 외교
- 091 제4절 아프리카·중동 지역 외교
- 104 제5절 지역협의체 외교

## 제5장

경제-안보-기술 융합외교

- 114 제1절 경제안보외교 및 주요국 경제외교
- 124 제2절 지역 및 글로벌 경제외교
- 130 제3절 기후·환경외교 및 에너지·자원 협력
- 140 제4절 과학기술외교 및 북극 협력

## 제7장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 180 제1절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공공외교 추진
- 190 제2절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 193 제3절 외교 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 198 제4절 해외 체류 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211 제5절 해외 진출 우리 국민 편익 증진

## 부록

- 228 1. 외교부 조직도
- 230 2. 외교관계 수립 현황
- 233 3. 재외공관 현황
- 235 4.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 239 5. 2021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
- 240 6. 경제·통상 관계 현황

## 제6장

다자외교 및 개발협력

- 146 제1절 국제 평화·안보 증진 및 인권·민주주의 기여 노력
- 160 제2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
- 171 제3절 외교관계 및 대외활동의 법적 기반 확충

## 제8장

외교역량 강화 노력

- 218 제1절 조직 및 인사
- 221 제2절 교육·평가제도 및 연구 활동

- 244 7. 2021년 조약 발효 현황
- 246 8.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 248 9. 재외동포 현황
- 249 10. 운전면허 상호인정 현황
- 252 11.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 253 12. 2021년 주요 국제 관계 일지

---

# 01.

CHAPT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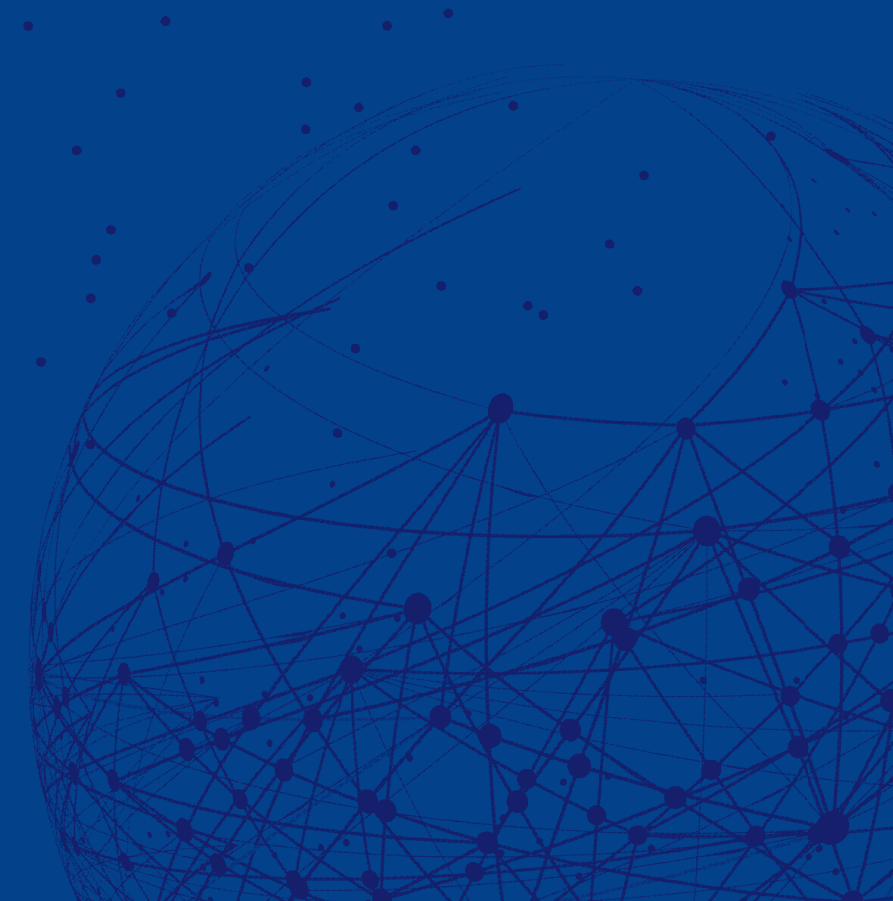
## 2021년 국제정세

---

006

제1절

국제정세 개관



## 제1절

## 국제정세 개관

## 1. 개관

2021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장기화하고 그 영향이 사회의 각 분야를 지배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한 국제 사회의 치열한 노력이 이어진 한 해였다. 코로나19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각국은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했으며,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2020 도쿄올림픽이 개최되었고, 유엔총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대면 외교도 재개되었다. 그러나 델타·오미크론 등 주요 변이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확산되어 백신·의료품 확보 등을 둘러싼 경쟁, 생산·소비의 위축,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으며,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국제정세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첫째,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전략 경쟁 구도가 전방위적으로 본격화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트너국과의 공조 및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협력을 강화했으며,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했다. 중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가치와 체제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등 대응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미국, 일본, 인도,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등 역내 국가는 물론이고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역외 주요 국가도 인도-태평양 구상 및 전략 등을 적극 추진했다.

둘째, 미얀마에서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이 구금되고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 이어진 반군부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1,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국 혼란은 계속되었다. 미얀마 정세를 둘러싸고 아세안은 ‘5개 합의사항’ 이행 진전 노력 등 아세안 중심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셋째, 중동 지역에서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했던 이란 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복원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주둔해 온 미군이 전격 철수한 직후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지역 내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 아프간 철군 등으로 미국의 중동 지역 관여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란 JCPOA 복원 협상 재개, 역내 중재자로서 이집트, 카타르 등의 부상 등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역내 질서가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넷째, 중남미 지역에서는 페루, 니카라과, 온두라스, 칠레 등에서 좌파 성향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소위 ‘핑크 타이드(pink tide)’ 재부상 현상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갖춘 이념적 주도국이 부재한 가운데, 반미·사회주의 등 이념에 기반하거나 노동자·원주민 등 특정 계층 중심의 지지보다는 부패 및 실업·빈곤·불평등 확산·코로나19 부실 대응 등 정책 실패에 따른 집권 세력 심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다섯째,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동진 방지 보장 등을 요구하며 11월부터 대규모의 러시아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하면서 서방국가와 갈등이 심화되었다.

여섯째,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경쟁 심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후 빈발, 식량 부족, 공급망 및 첨단 기술 확보를 둘러싼 경쟁 등이 첨예화하면서 경제-안보-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세계 경제 측면을 보면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접종이 확대되고 각국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여 5.9%<sup>1)</sup>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이

1) 통계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5.7%, 유로존이 5.2%, 중국이 8.1% 성장률을 기록했으며<sup>2)</sup>, 우리나라는 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간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했으며, 경제성장에 있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불균형도 노정되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수급 불균형으로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이 발생했으며, 이를 경험한 국가들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 문제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그 대비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 2. 지역별 동향

### 1)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20일 출범 이후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인종 간 평등, 기후변화를 최우선 4대 과제로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정비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쓰면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정책기조로 미국의 국내적 역량을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 법안을 추진했다. 한편 2020년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 결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12년 만에 민주당이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미국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의 4대 우선순위 과제에 따라 보건의료와 국내경제 분야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했다. 그 결과 백신 개발·보급 및 경기부양책 등을 담은 「미국구제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인프라투자·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Plan Act)」 등이 입법화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적 역량 재건과 동맹·파트너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지속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3월 「국가안보전략 잠정치침」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종식, 경제 위기 극복, 민주주의의 재건, 이민 제도 정비, 동맹·파트너 관계 재활성화, 기후위기 대응, 기술 분야 리더십 확보, 미·중 관계 관리 등 8대 우선과제를 설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미

국 주도의 현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역내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특히 대중국 관계 관리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으로 규정하고, 사안에 따라 경쟁·대립·협력의 원칙을 표명하는 등 미국 내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중정책을 추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4월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발표했고, 같은 해 8월 철수를 완료함으로써 약 20년에 걸친 아프간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

### 2) 중국

중국은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7.1)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절대빈곤 해소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실현을 선포했다. 3월에 개최된 양회(兩會)에서는 「경제·사회발전 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 등이 통과됐다. 또한 중국은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 중국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 ‘역사결의’를 발표하며, 2049년까지 ‘전면적 사회주의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해 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자연재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8.1%라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다.

대외적으로는 역내 안보, 가치·체제, 기술 등 측면에서 미국과 전략적 경쟁구도가 심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미국과 경쟁을 지속하면서, 주요국(러시아·아세안·EU 등)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방역·경제 협력을 강화했다. 국제무대에서는 ‘전 과정 인민민주’ 주창, ‘세계개발구상(GDI: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제안(9.21), 아프간 사태 논의 참여 등 중국식 가치·규범에 기반해 지역·국제 현안과 관련한 다자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갔다. 또한 ‘2020년대 기후 대응 강화에 관한 미·중 공동 글래스고 선언’을 채택(11.10)하는 등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그 밖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원활한 발효를 위한 노력,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추진 등 역내 경제통합 메커니즘에도 참여코자 했다.

2) 통계 출처: EU 통계청 및 각국 통계기관



### 3) 일본

2021년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전 정조회장이 신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되어, 10월 4일 일본의 제100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10월 31일 실시된 제49회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절대 안정 다수인 261석을 확보했다.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수습을 우선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경제정책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기치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안보담당대신 직위 신설 및 경제안보법 준비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물자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 민관 협력 등 경제안보 강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대외적으로 일본은 미·일 동맹 중심 기조를 유지·강화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4월 16일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경쟁력 및 회복력 파트너십[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CoRe) Partnership]'을 발표하는 한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강력한 미·일 동맹의 확인은 기시다 총리 당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통화(10.5)에서도 이어졌다. 또한 일본은 그간 견지해 온 대외정책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미국, 호주, 인도, 아세안과 결속을 다지고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미·일·호주·인도 4개국 협력체인 쿼드(Quad)에 참여해 2021년 두 차례(3.12, 9.24)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후변화, 에너지, 공급망 등 분야에서 공조를 추진했다. 아울러 G7을 비롯한 다자채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경제 면에서 일본 정부는 2021년 12월, 약 36조 엔의 사회보장비를 포함한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사상 최대치인 약 107조 6,000억 엔을 각의 결정했으며, 일본 내각부는 2021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집계했다.

### 4) 러시아

2021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집권 4기 5년차를 맞이한 러시아는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해 국가이익, 대내외 국가안보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문서인 '국가안보전략'을 갱신했다. 또한 9월 실시된 제8대 러시아연방 총선에서 여당 통합러시아

당이 전체 하원의원 450석 중 개헌 정족수 300석을 상회하는 324석을 확보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계속 유지했다.

러시아는 전략적 안정성 분야에서 미국과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5년 연장을 합의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루었으나, 야권인사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 구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지역 긴장 고조 등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서방과의 갈등과 대립이 크게 심화됐다. 반면 중국과는 '러·중 선린우호협력조약' 체결 20주년을 계기로 화상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개최하며 양국 간 결속과 유대를 강화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 경제는 2021년 글로벌 경제 회복 과정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며 강한 경기 회복을 달성했다.

### 5) 동남아시아

2021년 동남아시아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2.1) 이후 국내 정치적 혼란이 주요 지역 이슈로 등장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었다.

미얀마에서는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불복한 군부가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 등 핵심 인사를 구금하고 2월 1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전개되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군부의 강경 진압은 하반기에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서북부·동남부 소수민족 지역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 국민통합정부(National Unity Government), 시민방위군(People's Defence Force) 등 반군부 세력의 저항과 무력 투쟁이 지속되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현금 인출 제한과 환율 급등, 국제사회의 제재, 서방 자본 이탈 등의 요인으로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이 -18%를 기록하는 등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아세안은 이러한 미얀마 상황에 대해 ①모든 폭력 행위의 즉시 중단 ②관계자 간 건설적 대화 시작 ③아세안 의장 특사의 대화 프로세스 중재 ④아세안 재난관리·인도지원 조정센터(AHA Centre)를 통한 인도적 지원 ⑤아세안 특사와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및 모든 관계자 면담 등 5개 합의사항을 도출(4.24)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베트남에서는 2021년 제13차 공산당전당대회(1.25~2.1)를 통해 신지도부가 출범했으며,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외교 성과 등을 바탕으로 응우옌 푸 쥔(Nguyen Phu Trong)

당서기장, 응우옌 쑤언 폭(Nguyen Xuan Phuc) 국가주석이 동시 연임에 성공하면서 기존 통치체제의 안정성이 유지되었다. 신지도부는 경제 성장, 대외 위상 강화, 주권 및 영토 문제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태국에서는 2014년 쿠데타 이후 2019년 공식 취임한 빠랏웃 찰오차(Prayuth Chan-o-cha) 총리의 집권이 유지되었으나, 총리 사임, 헌법 개정, 민주화 개혁을 요구하는 중소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야당이 발의한 총리와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세 번째 불신임안(8.31)은 부결되었으나, 야당이 불신임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는 등 정국 긴장은 지속되었다.

라오스에서는 통룬 시슬릿(Thongloun Sisoulith) 전 총리가 제11차 라오인민혁명당 전당대회(1.13~15)에서 당서기장으로, 제9대 국회의원 선거(2.21) 이후 국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3.22)되어 안정적 집단지도 체제가 지속되었다. 라오스의 새 지도부는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힘쓰는 한편, 안정적 경제성장을 우선과제로 추진하며 중국·라오스 고속철 개통(12.3) 등으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도모했다.

캄보디아는 훈 센(Hun Sen) 총리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했으며 집권 캄보디아국민당 중심의 통치가 이어졌다.

말레이시아는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총리가 8월 사임하고, 이스마일 사브리(Ismail Sabri)가 8월 21일 제9대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이스마일 사브리 신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가운데, 9월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2025), 12월 외교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발전과 외교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기 행정부 중반에 접어든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정국이 지속되었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 영향 아래에서 역성장했던 경제는 2021년에는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4월 말 헝스위킷(Heng Swee Keat) 부총리가 차기 총리 내정자 직위에서 사퇴하는 상황에서도 리셴룽(Lee Hsien Loong) 총리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집권당인 인민행동당(PAP)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 등 민생 이슈에 적극 대처하면서 집권 유지를 위한 안정화 기조를 지속했다.

필리핀은 자국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 측 조치에 항의하면서 필·미 방문군지위협정(VFA) 파기를 통보했으나, 이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파기를 잠정 유예하는 등 기존의 균형·실리외교 노선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 6) 유럽

2021년 들어 유럽은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팬데믹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다. 주요 국가가 방역의 고삐를 완화하고 일상 복귀를 추진함에 따라 유럽의 경제도 회복세를 보였다. 국제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물류 대란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주요 글로벌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2021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5.2%<sup>3)</sup>를 기록해 코로나19 이전의 유로존 GDP 수준을 회복했다.

유럽의 주요국은 새로운 미국 바이든 정부와 대서양 동맹 회복에 전략적 중점을 두고 외교정책을 추진했다. 양측은 심화되는 미·중 갈등,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의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크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협력관계 재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9월 미·영·호주 간 군사동맹인 오키우스(AUKUS) 결성 등을 경험하면서, 유럽은 독자적 외교안보 역량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 모색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유럽은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여를 증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2021년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해군의 군함이 인도-태평양에서 다양한 군사 활동을 펼치며 이 지역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확대·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럽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관련한 전략 문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영국은 3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기조를 담은 종합 외교정책 문서인 ‘안보·국방·개발·외교 정책 통합검토 보고서’를 발표했고, 프랑스는 4월 기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갱신하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했다. EU는 9월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 계획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 7) 오세아니아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조치와 경제 회복 정책으로 리더십을 유지하는 가운데,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쿼드 등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모리슨 총리는 9월 15일 미

3) 통계 출처: 유럽통계청(Eurostat)



국, 영국과 오키스 결성을 공식 발표했으며, 9월 20일 미국을 방문해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9월 24일 첫 쿼드 대면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9월 11일에는 인도를 방문해 제1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나갔다.

뉴질랜드에서는 저신다 아던(Jacinda Ardern) 총리가 성공적 방역 등에 힘입은 견고한 지지율을 토대로 안정적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제야당인 국민당은 12월 민간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인 초선의 크리스토퍼 룩슨(Christopher Luxon) 의원을 신임 당 대표로 선출하고 당을 재정비했다.

## 8) 인도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에 대한 높은 지지가 유지되는 가운데, 모디 정부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인도는 2021년 3월 12일 화상으로 개최된 쿼드 정상회의에 이어 9월 24일 미국에서 개최된 첫 쿼드 대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9월 11일에는 호주와 제1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인도에서 개최하는 등 미국, 호주 등과 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인도는 12월 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정상회담과 최초의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9월 9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와 9월 17일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는 등 중국, 러시아와의 소통도 지속했다.

한편 인도는 2021년 중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최대 40만여 명에 이르는 등 심각한 대유행을 경험했으나, 백신 보급, 봉쇄조치 시행과 더불어 대규모 경제구제책을 발표하며 대응했다.

## 9) 중앙아시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1년 중앙아시아 국가 간 다자 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역내 호혜적 협력을 위한 분위기가 증진되었으며, 중앙아시아+역외국(C5+1) 형식의 협의체도 활발히 운영되었다.

2021년 7월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중·남아시아: 지역 연계성, 도전과 기

회’를 주제로 고위급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중·남아시아 간 지역적 연계와 아프가니스탄 역내 통합 등을 논의했다. 8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개최된 제3차 중앙아 정상회의(Consultative Meeting)에는 중앙아 5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해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교통·통신 협력 등 실질 협력,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과는 4월 C5+1 외교장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하고 아프간 평화협상,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C5+1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중국과는 5월 제2차 C5+1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7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방문해 실질 협력 강화,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9월 SCO 정상회의에서는 SCO의 기본 축으로서 중앙아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EU, 일본, 러시아, 인도 등은 중앙아 국가와 고위급 회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대응, 역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와는 11월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장관급으로 개최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1월 대선을 통해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정권이 출범했다. 새 정권은 4월 개헌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전환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2020년 9월 헌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 3월 28일 최초의 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했고, 4월 14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Gurbanguly Berdimuhamedov) 대통령을 상원의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21년 2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Serdar Berdimuhamedov) 건설산업부 장관을 우리나라 감사원에 해당하는 최고통제위원회 위원장 겸 부총리로 임명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2021년 10월 대선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이 재선되어 2기 정부가 출범했으며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 10) 중동

중동에서는 아랍-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에 이은 정치지형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대화를 시도했으며, 이츠하크 헤르초그(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했다.

JCPOA 복원 협상은 어려움을 겪었다. JCPOA 복귀에 적극적이었던 바이든 정부

와 협상당사국(P5+1)은 2021년 4월 핵합의 복원 협상을 재개했지만 이란의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정부와 합의에는 끝내 이르지 못했다. 이후 출범한 세이예드 에브라힘 라이시(Seyyed Ebrahim Raisi) 신정부와 11월에 협상이 재개되었으나 협상은 더딘 진전세를 보였다.

한편 1월 알울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우디, UAE, 이집트, 바레인 등 아랍권 4개국은 3년 반 넘게 단교 중인 카타르와 외교관계를 복원하기로 합의했으며, 알울라 합의 후 카타르와 여타국과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다. 예멘에서는 아랍연합군과 후티 반군 간 교전이 예멘 전역에서 지속되었다. 3월 아랍연합군을 주도하는 사우디가 예멘 평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티 반군은 이를 거절하며 예멘 전역에서 공세를 지속하고 사우디 영토를 대상으로 초국경 공격을 감행했다.

리비아에서는 3월 임시통합행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가 출범하고, 연말 대선과 총선 실시에 주요 정파 간 합의가 도출됐다. 이후 리비아 신정부 출범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있었으나, 선거를 둘러싼 정파 간의 갈등으로 결국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

## 11) 중남미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위기가 2021년에도 지속되면서 중남미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마존에서 기원한 감마 변이바이러스가 브라질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유행했으며, 하반기에는 페루에서 시작된 람다 변이바이러스가 아르헨티나와 칠레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2021년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남미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했으나, 그 결과는 개별 국가의 정치 지형과 경제 여건, 사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브라질, 파라과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부실이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불러일으켰으며,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 고위층의 방역 관련 스캔들이 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와 맞물려 여당의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4월 콜롬비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서민·빈곤층 불만이 누적된 가운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로 대규모 소요가 발생했고, 쿠바에서는 7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한편 아이티에서는 7월 7일 조브넬 모이즈(Jovenel Moïse) 대통령이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정치·사회 불안이 지속되었다.

2021년 중남미에서는 5개 국가에서 대선이 실시되었다. 에콰도르에서는 좌파 정부 15년이 막을 내리고 우파인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이 집권했고, 반대로 페루, 온두라스, 칠레에서는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니카라과에서는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부정선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좌파 정권이 연장되었다. 5개 국가 중 4개국에서 좌파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2018년부터 나타난 중남미 핑크 타이드(좌파 성향 정부 확산)는 2021년에도 이어졌다.

2021년 중남미 경제는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 코로나 백신 공급 지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연초의 예상과 달리 6.2%<sup>4)</sup>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회복해 갔다. 2020년 최악의 침체를 겪었던 중남미 국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디지털·인프라·그린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책 사업을 추진했다.

7월 개최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의에서는 핵심 의제로 대외무역협상 유연화와 대외공동관세 인하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회원국의 독자적인 양자 협상과 공동 관세 인하에 우호적인 브라질 및 우루과이와 이를 반대하는 아르헨티나 간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12월 개최된 태평양동맹(PA: Pacific Alliance) 정상회의에서는 무역 기술 장벽 제거, 디지털 세관신고,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싱가포르가 준회원국으로 공식 가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2022년 상반기에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21년 3월 파나마의 국내 절차 완료에 따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중미 5개국(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

## 12) 아프리카

2021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쿠데타·내전·테러 등으로 정세 불안이 심화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경제 회복도 여타 지역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2021년 한 해 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개국(차드, 기니, 말리, 수단)에서 쿠데타가 발생했고, 특히 말리와 수단의 경우 군부 정권이 2022년 예정된 대선을 연기함에 따라 민

4) 통계 출처: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주주의 후퇴 우려가 점증했다.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쿠데타를 일으킨 기니와 말리 군부 정권의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경제 제재를 단행하면서 역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했다. 한편 잠비아, 카보베르데에서는 선거를 통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니제르와 상투메프린시페에서는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이루어졌다.

2020년 11월 시작된 에티오피아 내전은 2021년 6월 에티오피아 정부의 휴전 선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군과 티그라이인민해방전선(TPLF) 간 교전이 지속되어 11월 에티오피아 연방정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정세 불안이 가중되었다. 2021년 말 반군의 티그라이주(州) 철수로 내전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 교전은 지속되었다.

보코하람(Boko Haram), 알샤바브(Al-Shabaab)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의 확장도 관찰되었다. 특히 사헬 지역의 G5국가(말리, 차드,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내 알카에다(Al-Qaeda) 연계 무장단체의 세력 확산과 차드호(湖) 유역 민간 대상 테러 공격도 계속되었다. 아프리카 동남부에서도 모잠비크 북부 카보델가도주(州) 등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발호해 외국인 투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2020년의 기저효과와 2021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일부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평균 10%대의 백신 접종률, 70%에 육박하는 GDP 대비 대외부채 비율, 정세불안 등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2021년 경제성장률(3.3%)이 글로벌 성장률(5.5%)<sup>5)</sup>에 비해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2021년 1월 1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공식 개시되어 아프리카 지역 역내 교역 확대 기대를 증가시켰다(2021년 12월 기준 54개국 서명).

### 3. 한반도 정세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세와 북한의 국경 봉쇄조치가 지속되고 남·북,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1.5~12)에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강대강·선대선’의 원칙을 내세우며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를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의 선결 조건으로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신년사(1.11)와 제102주년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남·북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한·미 정상회담(5.21)에서 양국 정상은 남·북, 북·미 간 기존 합의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남·북 대화와 관여·협력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이루어진 대북정책 검토 결과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립하고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를 추진해 나가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으며 북한에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했다.

한편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 기조하에 관련 활동을 지속하면서 대외적으로 ‘이중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북한은 2021년 단거리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종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영변 내 핵시설 가동 동향을 지적했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각종 교류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전통적 친선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는 북한 제8차 당대회,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7.1), 북·중 우호조약 60주년(7.11) 등 주요 기념일을 계기로 친서를 교환하며 역사적·이념적 연대를 강조했다. 러시아와는 러시아 국경일(6.12)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발송하는 등 북·러 간 우호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북·일 관계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경색 국면이 이어졌다. 10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에도 납치자 문제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을 두고 양측 간 대외 공방이 오가며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5) 통계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

# 02.

CHAPTER.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교

---

022

**제1절**

글로벌 보건 및  
백신 외교

027

**제2절**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

029

**제3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 제1절

## 글로벌 보건 및 백신 외교

##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

2021년에는 백신 개발과 확보, 접종이 코로나19 극복 노력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도 백신의 공평한 배분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었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계적인 백신 생산 증대와 원활한 배급에 기여하기 위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구성했다. 또한 정부는 9월 23일 유엔총회 계기에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해 코백스에 2억 달러 공여 계획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외교부는 코로나19 외교장관회의(11.10), 오미크론 대응 외교장관 화상회의(12.22)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에 지속 참여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방역정책, 재외국민 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등 7개국 외교차관 간 전화협약에 2021년 총 7회 참여했다.

외교부는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에 따라 우리 기업의 자체 백신 개발을 위한 해외 임상시험을 외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바이오 역량 강화를 목

적으로 하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재외공관망을 활용한 노력을 전개했다.

외교부는 백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범정부 백신도입 TF’ 활동의 일환으로 화이자사(社)와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 추가 구매 계약 체결을 지원했다. 다자 차원에서는 코백스를 통한 백신 도입을 지원해 총 251만 6,000회분을 도입했으며, 코백스 거버넌스 및 2021년도 계획 수립에도 참여했다.

한편 2020년 4월 외교부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신국제협력 TF’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내외 보건협력 업무를 관장하면서 재외공관이 파악한 각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동향을 관계부처에 전파하고, 주한 외교단 대상 브리핑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방역지침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견인했다.

## 2. 양자 보건안보 협력

외교부는 정부가 수립한 백신 접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양자 백신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미국, 이스라엘, 루마니아, 영국으로부터 총 514만 회분을 도입하는 등 백신 수급에 기여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미국으로부터 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을 도입하고 40만 회분을 추가로 도입(8.15)했다. 그 외에도 2021년 총 57회의 장관급 면담과 통화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외교부는 세계 국가의 지원 요청, 우리 재외국민 안전 확보, 신남방정책, 코로나19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에 110만 회분, 태국에 47만 회분, 이란에 100만 회분, 필리핀에 53만 9,000회분의 백신을 공여해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란의 경우, 제재 상황에서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WHO의 평가를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대이란 백신 지원에 동참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보건·질병위기가 외교안보 차원의 신안보 문제로 부각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넘어 재외국민의 보호와 정보 교류, 영사 조력 등의 외교적 조치를 포함하는 국가 간 협력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외교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2020년부터 10여 개국을 보건협력협정 집중 교섭국으로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해 2021년 6월 스페인, 8월 콜롬비아, 12월 우즈베키스탄과 협정을 체결했다.

### 3. 다자 차원의 보건안보 협력

외교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참여했다.

제73차 세계보건총회 코로나19 대응결의(Resolution on COVID-19 Response)에 따라 설치된 독립 전문가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현 국제보건규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 포괄적인 글로벌 대응체계를 수립할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1년 3월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해 새로운 국제조약 마련 등 국제보건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기고에 23개국 정상과 WHO 사무총장, EU 상임의장과 함께 참여했다. 이 공동기고에서 각국 정상은 새로운 조약을 통해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대응 역량과 미래 팬데믹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건정보체계, 데이터 공유와 연구, 백신·치료제·진단기기·개인 보호장비 등의 생산과 배분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국제조약인 팬데믹 조약 우호그룹의 일원으로서 2021년 5월 제74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WHO 보건위기 대비·대응 강화’ 결정안과 함께 ‘팬데믹 조약 관련 특별총회 개최’ 결정안을 공동 제안하고, 이들 결의에 따라 설치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관련 실무그룹 협상에 참여했다. 외교부는 우호그룹과 공조를 통해 11월 개최된 세계보건총회 특별회기에서 팬데믹 조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기구 출범 결정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Global Health Security)과 WHO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그룹(G4IDR: Support G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의 일원으로서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 대사급 회의(5월), 팬데믹 조약 관련 전문가 초청 라운드테이블(7월) 등을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선과 강화를 위한 우호그룹 간 공조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

다. 외교부는 유네스코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국 그룹(GCED: Group of Friends for Solidarity and Inclusion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의장국으로서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3.22)’, ‘제5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발전·건강한 삶을 위한 변혁교육 포럼(11.29~12.1)’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공동 개최해 코로나19와 관련한 혐오와 차별 대응 논의에 참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21년 4월부터 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SNS 캠페인인 ‘#LiveTogether’ 챌린지를 전개해 국제기구, 정·관계, NGO, 배우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는 등 인종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모두가 공존하자는 메시지를 알렸다.

아울러 외교부는 팬데믹의 예방과 대응에서 WHO가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보건규범 정비 논의에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WHO 보건위기 대응 강화 결의’에 참여해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팬데믹 대응에서 개방성 유지와 공평한 백신 접근 보장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WHO 회원국에 보다 강화된 의무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팬데믹 조약 체결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 4.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정부는 동북아 역내 국가가 코로나19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NEACHS: Northeast Asia Cooperation for Health Security)’를 추진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는 2020년 12월 출범한 이후 2021년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6개국 정부의 외교·보건 당국자가 참여하는 정부 간 회의를 네 차례<sup>1)</sup> 개최했다. 또한 한·몽골 간 의료방역 물품 공동 비축제를 시범 가동하고(8.17), 한·미·중·러·몽골 간 코로나19 대응 인력 공동 교육·훈련을 위한 웨비나(webinar)를 개최(10.19)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후원으로 참여국의 보건 분야 민간 전문가 간 트랙2 웨비나를 세 차례(6.4, 8.30, 12.16) 개최해 방역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 2·3차 과장급(3.30, 5.27), 4·5차 국장급(8.31, 12.16)



## 5. 코로나19 대응 개발협력구상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고자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Transparency, Resilience, Unity, and Safety Together)]’을 2020년부터 수행해 왔으며, 2021년에는 1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지원했다.

Building TRUST 구상은 국제사회의 회복력(resilience)과 안전성(safety together) 강화를 위한 구상으로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unity), 투명한 방식으로(transparency)’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한다는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이 구상에 따라 양자·다자 차원의 인도적 지원, 우리 정부의 감염병 대응 모델과 방역 경험을 기반으로 한 보건협력, 개도국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했다.

2020년 1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영국, 미국 등 고소득국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2021년 6월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 수요는 진단키트와 보호구 중심에서 백신, 산소발생기까지로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27개국에 1,300만 달러 상당의 진단키트와 산소발생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란에 약 340만 회분의 백신 현물을 공여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6월 G7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을 바탕으로 2021년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1억 달러를 추가로 기여했다. 2021년 말에는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해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아프리카 지역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에 1,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보건협력의 경우,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00만 달러 규모의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부·시민사회·국제기구의 협업을 바탕으로 ①코로나19 대응 의료시설 확충 ②진단장비와 의료기자재 제공 ③의료인력 교육·연수 ④현지 취약계층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2020년에 정책적 우선순위와 여타국 파급효과를 고려해 선정된 중점방역협력국 및 기구인 ①지역거점 4개국[인도네시아(신남방), 우즈베키스탄(신북방), 에티오피아(아프리카), 콜롬비아(중남미)], ②아세안 ODA 지원 대상국(베트남, 필리핀), ③AU 산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 등을 지원했다.

## 제2절

##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1. 재외국민 귀국 및 복귀 지원

2021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외국인 입국 금지·항공편 운항 중단·국경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재외국민이 세계 각지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2020년 3월 19일 제2차관을 팀장으로 ‘재외국민 귀국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재외국민의 귀국을 지속해서 지원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총 126개국에서 약 6만 4,000명의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했다.

이와 함께 해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국민이 거주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2021년 말 기준 총 46개국 재외국민 약 2만 3,300명이 거주국으로 복귀했다.

#### 1) 임시 항공편 운항 지원

2021년 12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에티오피아발 정기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자, 현지 공관은 에티오피아 항공사 측과 아디스아바바~인천 직항 임시 항공편을 협의해 우리 국민이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때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전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해 2021년 12월 말 기준 우리 재외 국민 총 116명이 에티오피아, 카메룬,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보츠와나, 말라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가나,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남수단, 코트디부아르, 나미비아 등지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 2) 현지 한인회 임시 항공편 임차 지원

정기 항공편이 중단되자 인도, 방글라데시 등의 현지 한인회는 재외국민의 귀국 수요를 파악해 임시 항공편을 임차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한인회-항공사 간 협의를 주선하고, 당국의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재외공관은 우리 국민이 임시 항공편으로 원활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공관 직원을 공항에 파견하기도 했다.

## 2. 재외국민 의료·방역 지원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재외국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외교부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코로나19 관련 의료·방역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외교부는 국군의무사령부의 협조로 화상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2021년 12월 기준 총 37개국 149명의 재외국민이 코로나19 관련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미얀마, 라오스,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는 외교행낭으로 산소 발생기, 신속진단키트 등 의료·방역물품을 운송해 재외국민이 현지 의료체계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재외공관에서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 제3절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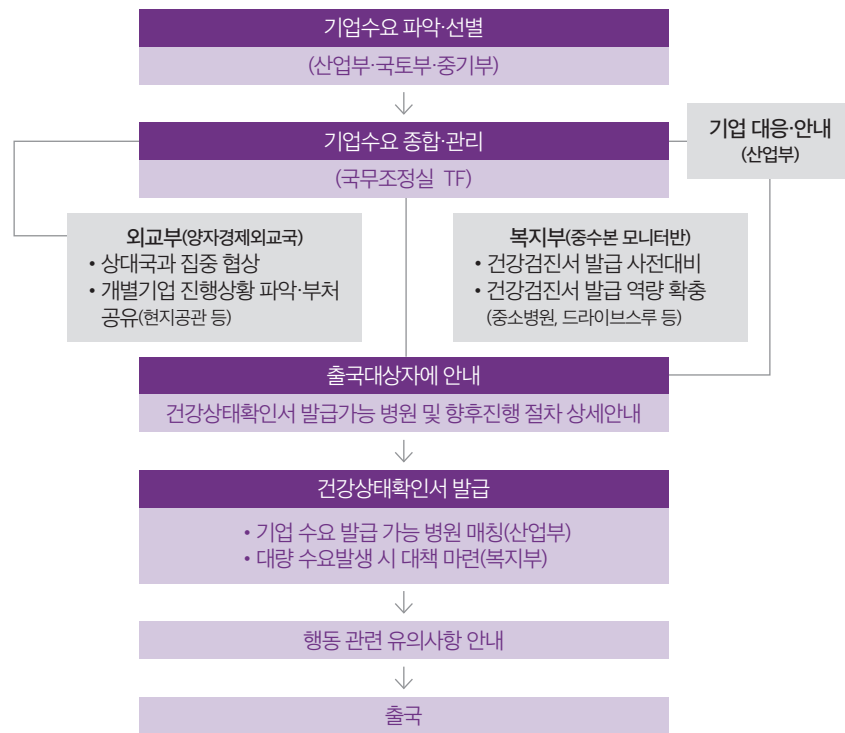
## 1. 기업인 예외적 입국 지원

### 1) 사안별 기업인 예외입국 교섭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에 발족된 기업입국애로해소 TF는 2021년에도 주요국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응해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을 위해 노력했다. 관련 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가 입국 애로 사항을 접수한 후 우선 협의 대상을 선정해 국무조정실 TF를 통해 외교부에 전달하면, 외교부는 해당 재외공관에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을 지시하고,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절차로 추진됐다.

상대국과 교섭이 성사돼 예외적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 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관련 부처에 출장 일정 등을 통보하고, 관련 부처는 기업인의 출국 1~2일 전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을 안내해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확인서 발급 완료 후에는 출국 전과 입국 후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말까지 기업입국 애로해소 TF를 통해 총 23개국에 3만 3,000여 명의 우리 기업인 입국이 성사됐다.

## 기업입국애로해소 TF 추진 체계



## 2) 기업인 예외적 입국 제도화

## (1)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

정부는 코로나19로 파급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0년부터 주 베트남대사관,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체 우리나라 기업인이 베트남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21년에는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시행(1.1)해 단기 출장자가의 무격리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노력했다. 4월경 베트남에서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재확산되어 단체입국 방식의 특별입국이 제한되자 정부는 외교장관의 베트남 방문(6.21~23) 등을 계기로 특별입국 재개를 요청하고 주베트남

대사관을 중심으로 교섭해 우리나라 기업인의 단체특별입국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 (2)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운영 지속

정부는 코로나19로 파급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 필수적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 1일부터 양국 간 기업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를 운영해 우리나라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약 6,000명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를 이용했다.

## (3) 신속통로 제도 확대 시행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개설 이후 정부는 기업인의 출장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기업인 예외입국 제도를 확대해 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과 신속통로 제도를 시행했다.

## 2. 방역물품(진단키트) 수출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각국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연결망 구축을 지원했다. 또한 진단키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량 확보, 운송 애로사항 등 문제의 해결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2021년에 화물 운송량이 급증해 진단키트 운송에 차질이 생기자 국토교통부의 협력하에 진단키트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은 2021년 185개국에 40억 5,800만 달러 규모의 진단키트를 수출했다.

---

# 03.

CHAPTER.

---

##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

034

**제1절**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037

**제2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043

**제3절**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049

**제4절**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주변국 협력 외교



## 제1절

##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 1.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확보

2021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남·북 관계 진전과 신뢰 구축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5.21)을 통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고, 한·아세안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8.7),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9.8) 등 주요 양자·다자 회의 결과 문서에도 남·북 대화와 협력 등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다양한 계기를 통해 남·북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 간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다.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1)에서는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대화와 협력임을 강조하면서 남·북, 북·미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다만 2021년 말까지 이러한 대북대화 및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호응은 없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대면 협의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북 관계 진전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과 각급에서 소통하며 이들 국가의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주한공관이 북한을 접입하는 국가의 모임인 한반도클럽(20개국)과 북한에 상주공관을 설치한 국가의 모임인 평화클럽(20개국) 소속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설명회(6.10)도 개최했다.

## 2. 북한인권 개선 노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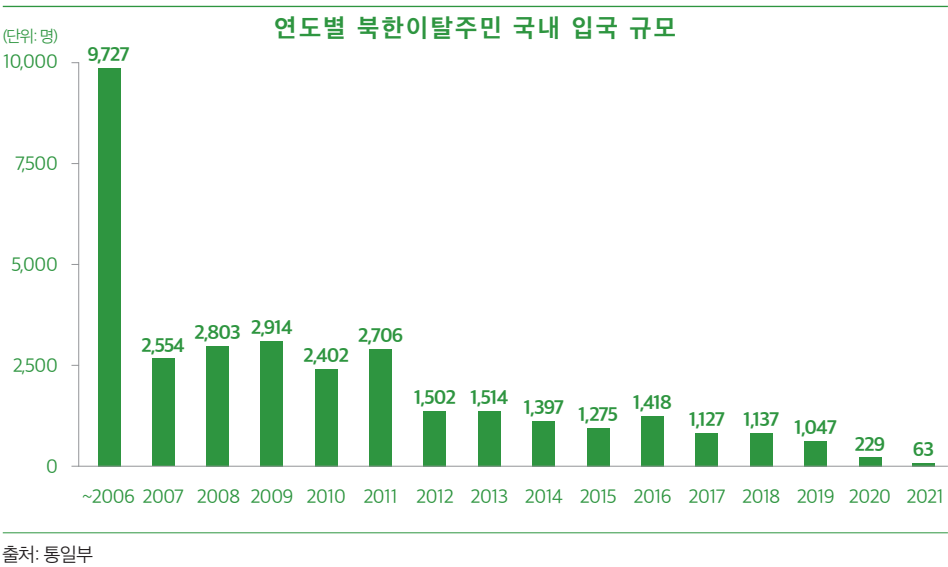
정부는 2021년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3.23), 제76차 유엔총회 3위원회(11.17)와 본회의(12.16)의 북한인권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참여했다. 또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상호대화(3.10, 10.22)와 북한인권 유사입장국회의(11.19) 등에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협력을 지속하고자 했다. 보건·방역과 식수·위생 분야에서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을 발굴·준비했으며,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식량·보건 분야 국제기구와 협조체제를 유지했다.

## 3.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

2021년에는 북한이탈주민 63명이 국내에 입국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의 여파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가 이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2021년 말 기준 국내 입국 누적 인원은 총 3만 3,815명이다. 정부는 해외 북한이탈주민이 자유의사로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체류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 협조를 통해 이들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지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전 해외에서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생활 여건 개선, 코로나19 방역물품, 입국 전 사전 적응 교육과 심리상담, 의료 지원 등을 제공했다.



## 제2절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

### 1.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 1) 미국 신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시기 한·미 간 공조

북한은 2021년 1월 5~12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력갱생 및 자력변영 노선을 재확인하고, 핵 억지력 고도화와 국방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하면서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강조했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부터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다양한 계기를 통해 밝히면서 대북정책 검토의 조속한 완료 의지를 내비쳤다. 안토니 블링컨 당시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청문회(1.19)에서 대북정책과 북한 문제 접근법을 완전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천명하는 한편, 취임 직후 NBC 인터뷰(2.1)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요청한 일이 바로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한·미 간 외교장관, 안보실장, 북핵 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여러 번 협의를 개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관여 정책 관련 공조를 강화했다.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공동성명(3.18)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으로 이들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대



북정책 검토에 관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관해 의미 있는 호응 없이 김여정 부부장(3.16),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3.17) 명의 등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한미 연합훈련(3.8~18)과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등이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비난하고 이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그 후 3월 25일에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의 시험 발사를 감행하고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3.30)를 통해 이를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규정하는 한편, 자신들의 자위권을 침해하는 시도에는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는 등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기자회견(3.25)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를 위해 모종의 외교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 문제가 최우선 외교 현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은 4월 30일 백악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공식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으며, 이를 모색하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둔 대북 관여 노력

5월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Sung Kim)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를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했음을 발표하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하고 실무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경우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입장으로서 6월 17일 전원회의에서 정세의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6월 22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 등 이후 담화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등 미국의 선행 조치 없이는 미국과 접촉에 나설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 통화(8.6)와 북핵 수석대표 협의(6.21) 등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8.10~26)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하면서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이했다. 같은 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발표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나아가 북한은 9~10월 극초음속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양한 신형 무기 시험을 감행하며, 제8차 당대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도 시현했다. 아울러 이를 국가의 주권적 권리이자 자위적 조치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에 응수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에는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9.21)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국가안보보좌관(10.26, 백악관 정례브리핑, 12.17, CFR 간담회 등)이나 성 김 대북 특별대표(9.29, 자카르타 외신기자클럽 화상간담회 등)를 비롯한 여러 고위 관료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참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 2. 국제공조 강화

### 1)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2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점진적으로 대면 외교를 추진하면서 유선·화상 협의 등 비대면 방식도 함께 활용했다.

일본과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했다. 양국은 정상, 외교장관, 북핵 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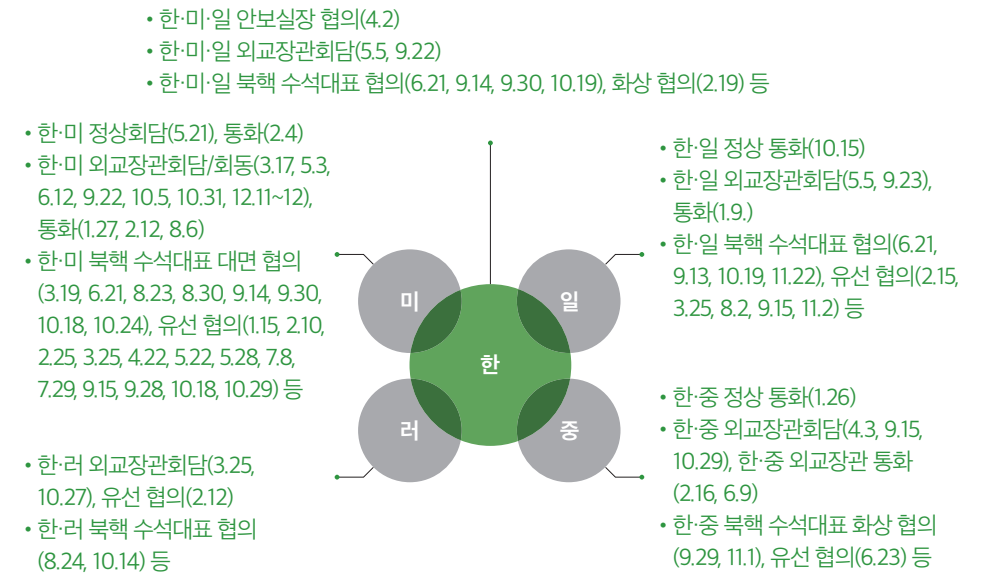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협력 방안을 수시로 협의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2021년 10월 15일 한·일 정상 간 통화에서 북한 문제 관련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외교장관 간 대면·유선 협의, 북핵 수석대표 간 수시 협의를 통해 북한 상황의 평가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공조를 유지했다.

또한 한·미·일 간에도 북핵 문제 관련 소통과 협력이 지속되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두 차례 대면 회담을 진행하고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가는 외교적 노력 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북핵 문제 관련 3국 간 공조 방안과 역내외 현안·정세와 관련해 협의했다. 3국 북핵 수석대표 역시 수차례 대면·비대면으로 협의를 개최해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미, 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중국과도 한 차례 정상 통화를 포함해 외교장관회담과 유선 협의,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등 각급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 나갔다. 중국 측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과 역할을 평가하고 대화 재개 지원을 거듭 표명했으며 우리 정부와 전략적으로 소통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나름대로의 역할을 발휘할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감안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도 외교장관과 북핵 수석대표 등 각급에서 교류를 지속했다. 러시아 측은 이러한 협의를 계기로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남·북 관계 증진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EU 및 주요 유럽 국가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독려했다. 두 차례의 한·EU 정상회담 및 한·EU 외교장관회담, 유선 협의 등을 계기로 EU 측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6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프랑스 국제관계전략연구소(IRIS) 콘퍼런스 기조연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웨덴 한반도 담당 특사 간 수시 대면 협의와 유선 협의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국제사회 내 여론 주도국인 주요 유럽 국가와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을 지속했다.

### 2021년 북핵문제 관련 주요국 협의 현황



## 2) 다자·국제무대에서의 지지 확보

정부는 주요 다자·국제무대 구성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주의를 환기하고,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북한이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등 국제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지하는 다수의 결과문서가 채택됐다. 아울러 유엔, 아세안, EU 등 다양한 국제사회 구성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2021년 북핵 문제 관련 주요 국제회의 문서	
회의 날짜	채택 문서
2021.1.6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공동성명
2021.5.5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공동성명
2021.6.11~13	G7 정상회의 코뮈니케
2021.6.25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2021.8.3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2021.8.3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2021.8.4	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2021.8.6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2021.9.8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공동의장성명
2021.9.24	IAEA 총회 북핵결의안
2021.10.26	한·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
2021.10.27	아세안+3 정상회의 의장성명
2021.10.27	EAS 의장성명
2021.11.4	한·비세그라드그룹(V4) 정상회의 공동성명
2021.11.25~26	ASEM 정상회의 공동성명

제3절

포괄적·호혜적 한·미 동맹

제3장.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1. 한·미 양국 고위급 교류 및 포괄적 전략 동맹

2021년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신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상 및 고위급 간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추진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2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한 데 이어 5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1979년 이래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했으며,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동남아·중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백신을 포함한 보건안보, 공급망, 기후변화, 첨단기술, 우주, 원자력 등 글로벌 차원의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공조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해 한·미 동맹의 유대와 역사를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 아래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 동맹 발전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했다. 한·미 외교장관 간 대면회담은 8회 이루어졌으며, 전략대화를 포함한 한·미 외교차관 간 대면회담을 3회 개최했다. 특히 2021년 3월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은 취임 후 우리나라를 함께 방문해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핵 및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및 외교차관협의회에 각 2회 참여했다.

2021년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 간 협력은 계

속되었다. 정부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아프간 내 우리 정부 조력자들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동맹 및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했다. 특히 미국은 아프간 현지 정세를 실시간으로 우리 정부와 공유하는 한편, 우리나라 군용기의 카불공항 이착륙을 지원함으로써 아프간 내 우리 정부 조력자들을 안전하게 국내로 이송하는 ‘미라클 작전’ 성공에 기여했다.

한편 정부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 관련 비밀문서의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 2020년 43건에 이어 2021년 35건이 추가적으로 비밀 해제되어 정부가 요청한 국무부 문서 총 80건 중 78건이 비밀 해제되었다.

한·미 주요 인사교류		
구분	일자 및 장소	내용
정상 교류	2021.5.21, 워싱턴DC	한·미 정상회담
	2021.2.4	한·미 정상 통화
장관 교류	2021.3.17, 서울	한·미 외교장관회담
	2021.3.18, 서울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2021.5.3, 런던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2021.6.12, 런던	G7 정상회의 수행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2021.9.22, 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2021.10.5, 파리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 약속회담
	2021.10.31, 로마	G20 정상회의 수행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2021.12.11~12, 리버풀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동
	2021.1.27, 2.12, 8.6(총 3회)	한·미 외교장관 통화
한·미·일 고위급 교류		
구분	일자 및 장소	내용
장관 교류	2021.5.5, 런던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2021.9.22, 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차관 교류	2021.7.21, 도쿄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2021.11.17, 워싱턴DC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2. 미 의회·학계 대상 아웃리치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코로나19 대응 등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미 의회에 설명하고 미국 여론 주도층을 대

상으로 정책공공외교 활동도 전개했다.

2021년 미 의회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 한반도 평화 촉구, 전문직 비자 쿼터,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법안과 결의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또한 정상 방미 시(5월)에는 미 상·하원 모두 방미 환영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외에도 미 의회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조기 타결, 백신 지원, 한반도 평화 및 종전선언 지지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앞으로 아홉 차례 발송했다.

정부와 미 의회 인사들 간 교류도 연중 활발히 이어졌다. 정상 방미 계기 하원 지도부 간담회(5월), 미 상원 대표단 방한(6월),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하원의원 대표단 방한(7월), 미 하원 보훈위원회 대표단 방한(11월) 등 의회외교가 지속되었다. 한·미 의회 간 교류·협력도 계속 이어졌다. 국회의장·미 하원의장 화상회담(3월), 외통위원장·미 상원 외교위원장 화상회의(3월), 국회 평화외교포럼대표단 방미(6월), 국방위원장 방미(7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 방식의 교류가 진행되었다.

한편 정부는 체계적·효율적 대미 정책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유관부서·부처와 정례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해 운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 학계·여론주도층 등을 대상으로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 등 관련 정부 정책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공공외교 활동이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미 외교협회(CFR) 대담회(9월), KF-CSIS 한·미전략포럼(11월) 간담회에 각각 참여해 한·미 관계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미 여론주도층의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했다. 또한 정부는 미아시아정책연구소(NBR) 등 미 싱크탱크 주관 차세대 정책 전문가 대상 간담회(4월, 10월) 등 미래의 유망한 오피니언 리더 대상의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미국 내 한국 전문가 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3. 한·미 동맹 현안 해결 노력 경주

한·미 양국은 3월 7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특히 향후 협정 공백 발생 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무급휴직 발생 시 생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나라 근로



자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했다.

또한 정부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함으로써 1979년 이래 유지해 온 우리나라 미사일·우주발사체 역량에 대한 자율규제를 완전히 해제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2021년 3월 18일 서울에서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제11차 SMA가 조기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동맹 현안의 호혜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 지역 현안은 물론이고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협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국장급에서도 양자정책대화(BPD: Bilateral Policy Dialogue/3월, 6월, 9월)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현안을 협의했다.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1년 5월과 9월 각각 제19차(워싱턴DC) 및 제20차(서울)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그리고 12월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서울)를 대면 개최했다. 이를 통해 양측은 2022년 중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 Capability) 평가 시행에 합의하는 등 전시작전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현안 관리 및 운영 개선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처리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은 중요한 한·미 동맹 현안으로서, 외교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기지 반환을 협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특히 2021년 한·미 양국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인 조성될 용산기지 부지의 반환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7월 29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공동성명을 통해 2022년 초까지 약 50만㎡의 용산기지 부지 반환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정부는 미군기지 관련 오염 문제 해결 및 환경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지속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3.18) 등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서도 기지 반환 경과를 점검하고, 기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SOFA 채널을 통해 주한미군과 긴밀한 방역협력 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2021년에 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주한미군 방역협력에 대한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7.2~4)에 맞춰 부산시, 경찰, 주한미군 등과 공동으로 해운대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SOFA 합동위원장(외교부 북미국장·주한미군 부사령관), SOFA 특별합동위원장(외교부 북미심의관·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등 고위급 SOFA 채널도 적극 활용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백신 접종 문제, 주한미군의 백신 접종 이력 국내 인정 문제 등의 다양한 방역 현안을 해결했다.

외교부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 민군관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20년에 이어 출범한 ‘위고(WeGo) 서포터스 2기’ 120명(한국인 61명, 미국인 59명)은 한·미 동맹 지식교류 발표회(7.31), 퀴즈대회(8.21), 말하기대회 및 토크쇼(9.25) 등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조사 3년차를 맞은 ‘미군기지 인근 지역주민 대상 민군관계 관련 인식조사’도 현장 방문과 비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 아울러 SOFA 사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SNS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포함한 총 255건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했다.

외교부는 2021년 10월 14일 개최된 한·미 SOFA 민군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정부의 민군관계 사업 현황과 활동 내용을 미국 측과 공유하고 각각의 민군관계 증진 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되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의 민군관계가 주한미군 평택시대 도래, 미군기지 반환, 코로나19 같은 새로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가 소재한 경기도와 평택시가 수행하는 각종 민군관계 사업(굿네이버스 프로그램)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계속했다.

2021년 9월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는 개소 5주년을 맞이했다. 외교부는 평택시·주한미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념행사를 진행해 평택 지역에서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간 소통과 이해를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SOFA 국민지원센터의 지난 5년간의 활

동과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동 센터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모색했다.

한·미 양국은 2021년 20여 개 분과위원회 채널을 통해 주한미군 훈련 중 사건사고 방지, 미군기지와 훈련장 주변 소음 피해 경감, 미군기지 환경 관리 강화, 대구시 군공항 이전 등 다양한 SOFA 현안 협의를 지속했다. 아울러 총 44건의 SOFA 합의문을 대외 공개했다.

제4절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주변국 협력 외교

1. 한·일 관계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한·일 간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사 문제 해결과 실질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분해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했다.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우리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에도 정부는 10월 15일 한·일 정상 통화를 비롯해 각급 차원에서 협의와 소통을 지속했다. 한·일 정상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의견을 같이했다. 1월 9일 한·일 외교장관 통화,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10주기를 계기로 이뤄진 외교장관 간 서신 교환에 이어 5월 5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 외교장관회담(9.23), 한·일 외교차관회담(7.20, 11.17), 한·일 국장협의 등도 개최되었다. 한·일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 참석 계기 방일(7.14~15), 한·일의원연맹 산하 조선통신사위원회 방일(11.16~20) 등 정계 교류도 이루어졌다.



한·일 주요 인사 교류		
구분	일자 및 장소	내용
정상 교류	2021.10.15	한·일 정상 통화
	2021.1.9	한·일 외교장관 통화
	2021.5.5, 런던	G7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2021.9.23, 뉴욕	유엔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2021.7.20, 도쿄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
	2021.11.17, 워싱턴DC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
장·차관 교류	2021.7.14~15	한·일의원연맹 합동간사회의 참석 계기 방일
	2021.11.16~20	한·일의원연맹 산하 조선통신사위원회 방일
	2021.11.2, 화상	제53회 한·일 경제인회의
기타 인사 교류		

정부는 외교당국 간 협의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202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회의’를 출범시켰다.

한편 독도 및 여타 과거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했다. 일본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 연설(1.18),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2.22),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3.30), 외교청서(4.27)와 방위백서(7.13) 발표 등 계기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침략전쟁 미화의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일본 지도층의 공물 봉납과 참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당시 일본 정부가 약속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1년 7월 22일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후속조치 불이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결정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양국 간 민간교류는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었다. 2021년 인적 왕래 총인원은 약 3만 4,00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던 2020년(약 91만 9,000명)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례 교류행사인 ‘한·일 축제한마당’을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온라인 공모전 등 시민 참여형 디지털 공공외교를 전개했다. 이수현 의인 20주기 추모영상 제작, 교토국제교의 고시엔 선전 관련 메시지 발신 등을 통해 한·일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1년 한·일 간 총교역액은 약 847억 달러(수출 약 300억 6,000만 달러, 수입 약 546억 4,000만 달러)로 2020년의 약 711억 2,000만 달러에 비해 증가했다. 한국의 대일본 투자는

2020년 16억 1,000만 달러에서 2021년 약 9억 9,000만 달러로 감소했으나, 일본의 대한민국 투자는 2020년 7억 3,000만 달러에서 2021년 11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2. 한·중 관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속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유연하게 활용해 양국 간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또한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활동도 추진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상호이해를 보다 증진하기 위해 노력했다.

양국 정부는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각 급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양국 정상은 통화(1.26)에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를 선포했으며,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30년간 한·중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2021년 12월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중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12.2)했다.

한·중 양국 외교장관은 상호방문을 포함한 세 차례의 대면 외교장관회담(4.3, 9.15, 10.29)을 개최했고, 두 차례의 통화(2.16, 6.9)도 이루어졌다.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상호 간 긴밀한 소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교장관 간 소통의 정례화를 포함해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8월 24일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일에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장 방한 계기에는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정상이 2021년에 선포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또한 2021년에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12.23)가 개최되어 한·중 관계, 한반도 문제 및 지역·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간 의원외교도 가동되어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 12차 합동회의(11.16)에서 양자 관계 및 의회교류, 문화교류 및 관광 활성화,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제교류 측면에서 한·중 간 교역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 3,015.4억 달

리(수출 약 1629.2억 달러, 수입 약 1386.2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24.9% 증가해 수교 30년 만에 양국 간 교역액이 수교 당시보다 약 50배 증가했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교역 대상국(수출·수입 1위),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수출 3위, 수입 1위)의 지위를 유지했다. 2021년 중국의 대한 투자는 18.9억 달러로 2020년 19.9억 달러에 비해 약 5% 감소했으나, 우리의 대중국 투자는 122.3억 달러로 2020년 46.9억 달러에 비해 약 2.6배 증가했고, 대중 투자 누계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상호 방문객이 모두 급감했으나, 신속통로 등을 통해 필수인력의 상호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협력의 일환으로 중국 창춘에 조성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내에 ‘한·중 도시관’이 2021년 개관(9.23)했다. 한·중 도시관은 양국 간 도시·산업·무역 촉진 등을 위한 전시관으로 지자체관과 기업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총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또한 양국은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11.30)에서 ‘한·중 경제협력공동계획(2021~2025)’을 채택하고, 한·중 수교 30주년 계기 중장기적 구제 협력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외교장관회담(4.3)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을 위해 민간 후호 정서의 지속적인 증진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6년 만에 개최된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9.15)에서는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 사업목록을 채택하는 한편, 공식 로고와 표어(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 홍보대사 등을 확정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제8차 중국군 유해 송환식(9.2)’을 개최했다. 그리고 양국은 매현 윤봉길 기념관 내 야외 전시물 교체(8.10) 및 진강 임시정부 사료진열관 안내판 설치(8.31) 등 중국 내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협력했다.

주중공관들은 한·중 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 기념 공익 합창곡(함께하는 미래) 공동 제작, 화중지역 스토리텔링 온라인 공모전, 한류 팬영상대회(나의 아이들을 추천합니다), 한·중 수교 29주년 기념 2.9km 온라인 걷기 행사(동심동행: 同心同行) 등을 진행해 양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한·중 주요 인사 교류		
구분	일자 및 장소(형식)	내용
정상 교류	2021.1.26	한·중 정상 통화
	2021.2.16	한·중 외교장관 통화
장·차관 교류	2021.4.2~3, 샤먼	외교장관 방중
	2021.6.9	한·중 외교장관 통화
	2021.9.14~15, 서울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방한
	2021.10.29, 로마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2021.11.30, 화상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 외교부 제2차관 - 중국 상무부 부부장
	2021.12.23, 화상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2021.4.14, 화상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국장급)
기타 인사 교류	2021.9.15, 서울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 개최 - 외교부 차관보 -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2021.11.16, 화상	한·중 의회 간 정기교류체제 12차 합동회의
	2021.12.2~3, 텐진	국가안보실장 방중

제3장.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 3. 한·중·일 3국 협력

2021년 한·중·일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5.3), 교통물류장관회의(8.20), 문화장관회의(8.30), 특허청장회의(11.30), 환경장관회의(12.7), 보건장관회의(12.21) 등 6개 장관급 회의를 비롯해 다수의 정부 간 협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또한 외교부는 3국 발달장에 미술작가 13인이 참여한 ‘한·중·일 발달장에 미술작가 특별전(7.8~10)’ 및 3국 협력에 관한 자유 주제 논문을 공모한 ‘3국 협력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9~12월 초)’를 통해 3국 협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서울 소재 3국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설립 10주년을 맞아 기관, 학계, 재계, 청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여섯 차례 진행하고, 10주년 기념 사진전(4.19~28)을 개최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4.27),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5.3~6.20), 한·중·일 저널리즘 세미나(6.21) 등을 개최했다.

4. 한·러 관계

2021년 한국과 러시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비대면 방식을 통한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지속했다.

한·러 정상은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서 발표(11.3)한 축사를 통해 양국의 실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유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러 외교장관은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수교 30주년 기념 ‘한·러 상호교류의 해’의 개막식(3.25, 서울)과 폐막식(10.27, 모스크바)에 공동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개최된 외교장관회담에서는 긴밀히 발전한 양국 관계와 더불어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의가 증진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 조선, 보건 등 한·러 간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러 주요 인사 교류		
구분	일자 및 장소(형식)	내용
총리급 교류	2021.9.2~4, 화상	제6차 동방경제포럼 - 경제부총리,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영상 축사
	2021.2.12	한·러 외교장관 통화
장관 교류	2021.3.25, 서울	러시아 외교장관 방한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 -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 공동 참석
	2021.10.27, 모스크바	외교장관 방러 계기 한·러 외교장관회담 -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폐막식 공동 참석
	2021.3.29, 서울	제4차 한·러 국방전략대화
차관급·차관보급 교류	2021.4.27~29, 화상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
	2021.7.23, 모스크바	제1차 한·러 국제청장회의
	2021.8.23, 서울	제19차 한·러 정책협의회
	2021.9.2~3, 화상	제6차 동방경제포럼 북방위원장 및 통일부장관 비대면 참석
	2021.10.27, 모스크바	제13차 한·러 관세청장회의
	2021.11.1, 서울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계기 외교부 제1차관·러 극동북극 개발부 장관 면담
	2021.12.17, 화상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러 경제개발부 장관 회담
의회 교류	2021.5.22~26, 모스크바	국회의장 러시아 방문 - 러 상원의장(5.26), 하원의장(5.24)과 회담
	2021.10.13~15, 상트페테르부르크	국회 대표단 제3차 유라시아 여성포럼 참석
	2021.11.4, 울산	러 상원 대표단 한·러 지방협력포럼 의회 세션 참석

한·러 양국 부총리는 2021년 12월 7일 ‘제19차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조선, 산업단지, 서비스·투자 FTA 등 ‘9개 다리’ 중점 협력 분야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의 지평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는 한편, 수소, 북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1년 11월 3~5일 울산에서는 한국의 17개 지방자치단체와 18개 러시아 극동·북극 지방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기존 러시아 극동연방관구 소속 11개 지역에 더해 북극지역 7개 지방정부가 새롭게 참여했으며, 양국 지방정부 간 경제, 문화·예술, 과학, 교육, 북극항로, 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했다.

2021년 한·러 간 총 교역액은 약 273억 달러(수출 약 100억 달러, 수입 약 173억 달러)를 달성하며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 대상국,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제7위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5. 한·몽골 관계

2021년 한·몽 정상은 화상 정상회담(9.10)을 개최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①정치·안보 ②경제·통상·투자 ③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④문화·관광·인적 교류 ⑤국제무대 및 지역협력 5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 확대해 나가는 내용을 담은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몽골 내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유통·물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지원 등 한·몽 간 연계성을 증진하고, 사막화 방지, 대기오염 등 실질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첨단기술과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의 상호보완적 경제 관계를 활용해 그린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몽 양국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이어 나갔으며,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NEACHS)와 몽골 주도의 울란바토르 대화 연계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교류 측면에서 한·몽 간 교역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 4억 달러(수출

약 3.8억 달러, 수입 약 0.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인적 교류 측면에서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양국 간 상호 방문객이 급감했으나, 한·몽 양국은 양국 간 임시항공편 운항 등을 통해 필수적 인적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외교부는 민·관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주한몽골대사관, 사단법인 한국몽골학회와 함께 ‘한국·몽골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3월 26~27일 개최했다.

한·몽 주요 인사 교류		
구분	일자 및 장소(형식)	내용
정상 교류	2021.9.10, 화상	한·몽 정상회담
총리 교류	2021.7.27, 서울	한·몽 총리 면담
장·차관 교류	2021.5.12, 서울	한·몽 외교차관 면담
	2021.11.4, 서울	외교부 제2차관-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기타 인사 교류	2021.9.8. 빈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 한·몽 국회의장 면담

6.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동북아시아는 역내 국가의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 의존도를 고려할 때 공동의 이해관계를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이다. 이에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하고 역내 협력과 번영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협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내 주요국인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몽골, 미국, 러시아와 역외 대화 파트너인 EU, 아세안 등 국제기구 민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10.6~7)했다. 포럼에서는 ①동북아 평화협력의 가능성과 비전 ②동북아 재난·재해 대응과 지역협력 ③동북아 경제협력과 RCEP ④철도공동체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을 의제로 다루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은 역내 다자협력을 위한 다양한 민간 차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포럼에 이어 역내 주요국인 일본, 중국, 몽골, 미국, 러시아 정부 인사들을 초청해 2021 동북아 평화협력 정부 간 협의회를 대면회의로 개최(10.20, 서울)했다. 정부 간 협의회에

서는 포럼의 주요 결과를 공유하고, 역내 다자협력 진전을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언을 검토하는 동시에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북아 다자협력에 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차원의 자발적·자생적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내외 민간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민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추진했다. 2021년에는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추진 방향 및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민관 네트워크 구축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국내 관련 연구기관과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의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지역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 04.

CHAPTER.

---

## 지역 외교

---

060

**제1절**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양  
지역 외교

069

**제2절**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외교

078

**제3절**

미주 지역 외교

091

**제4절**

아프리카·중동 지역 외교

104

**제5절**

지역협의체 외교



## 제1절

아세안 및  
서남아·태평양 지역 외교

## 1. 신남방정책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내외 정책 환경과 신남방 국가의 신규 수요를 반영해 2020년 11월 신남방정책 플러스<sup>1)</sup>를 발표하고 7대 협력 분야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를 추진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협력을 강화해 신남방 국가에 진단키트, 산소발생기 등 4,0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했다. 아울러 2021년 12월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국내 비준을 완료하고, 8월 인도네시아에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설치하는 등 신남방 국가와 경제협력 기반을 확대했다. ‘2021년 한·메콩 교류의 해’ 등의 계기를 활용한 문화교류도 지속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정상들은 2021년 10월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한·아세안 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인적·문화 교류, 경제협력 및 여타 실질 협력의 확대를 추진했다. 또한 양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필수적 인적 교류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했다.

1) 신남방정책의 3P(People-Prosperity-Peace 공동체)와 비전을 유지하는 가운데 7대 협력 분야(보건, 교육, 문화, 무역투자 확대, 인프라 개발, 미래산업 육성, 비전통안보 협력)를 중심으로 제반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포용적 동반 성장 축진을 도모한다는 구상

정부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등의 원칙이 존중된다면 어떤 지역협력 구상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하에 각국의 지역협력 구상과 신남방정책 간 연계협력을 추진했다.

정부는 2021년 미국, 호주, 프랑스, EU 등과 정상 및 장·차관 등 고위급 회담을 통해 신남방정책과 각국의 지역협력 구상 간 연계협력에 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 호주(2월), 미국(5월), 프랑스(7월, 11월), EU(11월) 등과 각각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개최해 아세안 관련 협력 방향과 동남아시아 주요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보건, 연계성,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해양 등 아세안의 수요를 반영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 2. 아세안 지역 외교

## 1) 태국

한·태국 양국 정상은 2021년 5월 28일 통화에서 한국과 태국이 전통 우방국으로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동부경제회랑(EEC: East Economic Corridor) 개발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가능성과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협력을 체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두 차례 통화(4.5, 4.30)를 통해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 방역 분야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한·태국 장관급 보건안보 대화 신설 및 2021년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사업 추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8월 26~28일 외교장관 태국 공식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양국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 미래산업, 녹색 파트너십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 2) 베트남

베트남 신지도부 출범 이후 우리 정상이 7월 15일 응우옌 푸 쯡(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하여 쯡 당서기장의 연임을 축하했으며, 9월 21일(제76차 유엔총회 참석 계기) 응우옌 쉘언 푸옥(Nguyen Xuan Phuc) 베트남 국가주석과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차례 교류를 통해 1992년 이래 한국과 베트남이 상호 최적의 파트너로서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향후 30년을 위한 미래비전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7월 22일 국무총리는 팜 밍 쩡(Pham Minh Chinh) 베트남 신임 총리와 통화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무총리는 12월 14일 베트남 신지도부 출범 이후 공식 방한한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백신 공여와 요소수 수급 협조 등을 통해 양국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적극 협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양자 관계, 실질 협력, 코로나19 대응과 회복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외교장관은 4월 28일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신임 베트남 외교장관과 통화한 데 이어 6월 21~23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해 응우옌 쉰언 폭 국가주석과 팜 밍 쩡 총리를 각각 예방했으며, 한·베트남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했다.

이같은 교류를 통해 양국은 2022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인을 포함한 필수인력의 원활한 입국 등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3) 인도네시아

3월 1일 양국 외교장관 간 통화 이후 외교장관은 6월 24~2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6월 25일 레트노 마르수디(Retno L. P. Marsudi) 외교장관과 회담을 열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온 것을 평가하고, 국방·안보와 무역·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보건, 경제, 개발협력, 방산, 재외국민 보호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한·인도네시아 삼각협력 양해각서와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에 서명했다.

외교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4월 9일에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KF-21/IF-X 전투기 공동개발사업 등 상호 호혜적인 실질 협력을 계속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4) 싱가포르

양국 외교장관은 4월 13일 통화하고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미얀마에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 미얀마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싱가포르 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한편 외교장관은 6월 24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발라크리쉬난 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평한 백신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을 포함한 보건·방역 분야에서 다자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한·싱가포르 간 신속통로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과 여행안전권역 시행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 5) 라오스

8월 28~29일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 외교장관은 8월 28일 살름사이 쯔마싯(Saleumxay Kommasith) 라오스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판감 비파반(Phankham Viphavanh) 총리를 예방했다.

외교장관회담에서 양 장관은 양국 협력 방안과 주요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그리고 1995년 재수교 후 양국 관계에서 이룩한 많은 발전에 공감하며, 특히 한국의 대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6) 캄보디아

9월 6~8일 프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이 공식 방한했으며, 9월 8일 양국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협력 및 관계 발전을 논의하고 국제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양 장관은 한국의 ODA가 캄보디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많이 기여했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맞춤형 ODA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양 장관은 한·캄보디아 FTA의 신속한 타결을 평가했으며, 이후 양국 간 시장 자유화 촉진과 교역 규모 증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2021~2022 한·메콩 공동의장국으로서 한·메콩 협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 7) 브루나이

양국 외교장관은 5월 4일 주요 7개국 협의회(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으며, 4월 1일과 8월 18일 두 차례 통화해 한·아세안 협력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지역 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2021년 아세안 의장국 겸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의 협력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과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건설·관광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미얀마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미얀마 관련 아세안 특사로 임명된 에리완 유소프 장관의 활동을 우리 정부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8) 필리핀

양국 외교장관은 5월 12일 통화한 데 이어 12월 12일에는 제2차 G7 협의회 외교·개발 장관회의를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해 양국 협력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필리핀 측은 한국이 코로나19 상황 초기부터 일관되게 의료품 및 백신 등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한국과 필리핀이 방산 협력, 한·필리핀 FTA 타결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며, 이러한 우호관계를 반영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9) 말레이시아

양국 외교장관은 2021년 5월 25일 통화하고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보건·의료, 지능형 도시,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미얀마 정세와 관련해, 폭력을 중단하고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인 대화 개시 등 2021년 4월 24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10) 아세안 사무총장

외교장관은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과 통화(2.25), 면담(6.25)하고 경제 회복, 보건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와 미얀마 상황 등 지역정세에 관해 논의하고 역내 평화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 3. 서남아·태평양 지역 외교

#### 1) 호주

우리 정상은 2021년 12월 12~15일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와 12월 13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으로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양자협력과 지역·국제 협력 등 양국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하기로 하고, 경제와 통상, 국방, 방산 협력 증진 등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 광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으며, 탄소중립, 5G 등 정보통신기술과 우주 협력,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측은 호주와 1조 원대 규모의 K-9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호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협력 및 수소 경제 등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공조 방안, 미타(MIKTA) 국가 간 협력,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1년 10월 31일 한·호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간 다양한 글로벌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성명을 공동 발표하고 우주 분야, 국방·방산과 핵심 광물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9월 13일 서울에서 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양측은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하고, 양자 관계와 역내 정세, 환경, 기후변화,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또한 양측은 이 회의를 계기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외교·안보, 한반도·지역 이슈, 코로나19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2) 인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외교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외교장관은 수브라마냐삼 자이산 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과 3월 9일 통화하면서 양국 관계, 코로나19 대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76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한·인도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관계, 인적 교류 증진, 한반도 정세, 실질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양 장관은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 간 시너지효과 강화를 위해 다방면에 걸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재개도 추진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민간 분야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 3) 파키스탄

외교장관은 8월 20일 샤 마흐무드 쿨레시(Shah Mahmood Qureshi) 파키스탄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양국 관계, 다자 분야 협력 방안 그리고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이 확대되어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후변화, 평화유지 등 다자협력 분야에서도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4) 방글라데시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 독립 50주년 및 국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3월 25일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 측은 방글라데시 국부로 추앙받는 셰이크 무지부르 라만(Sheikh Mujibur Rahman) 전 대통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을 공유한 양국이 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했다.

## 5)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국내 이송(미라클 작전)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내의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탈레반이 통제하는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 직계존속 등 총 391명을 국내로 이송했다.

이들은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아프가니스탄한국대사관에 신변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①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②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③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 ④다른 나라도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을 국내로 대거 이송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8월 이들의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외국 민간 전세기를 이용해 이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8월 15일 카불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 민간 전세기 취항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군수송기 3대의 투입을 전격 결정했다. 카타르로 철수했던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직원 등 외교부 선발대는 8월 22일 카불공항에 다시 들어가 미국 등 현지 우방국 관계자와 협의하면서 이들의 집결과 카불공항 진입을 사전에 준비했다. 이어 군수송기는 8월 23일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고, 8월 24일부터 카불과 이슬라마바드를 왕복하면서 아프간인들을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우방국 그리고 아프간 문제에 영향력이 있는 주변국과 수시로 긴밀히 협조했다.

## 제2절

##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외교

### 1. 유럽 지역 외교

#### 1) 영국

한·영 정상은 2021년 6월 3일 통화하고, 6월 13일(G7 정상회의 계기)과 9월 20일(유엔총회 계기)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G7 정상회의 및 COP26 의장국인 영국과 활발히 교류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한·영 FTA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영 외교장관은 2월 23일과 9월 15일 두 차례 통화하고, 5월 6일 제6차 한·영 전략 대화에 이어 6월 12일에도 회담했다. 영국 측 리즈 트러스(Liz Truss) 외교장관과는 취임 이후 11월 1일, 12월 12일 두 차례 한·영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G7 외교·개발장관회의의 참석 계기 5월 6일 개최된 제6차 한·영 전략대화에서는 한·영 FTA 이행 등 경제 분야 협력 방안과 추진 방안을 점검하는 등 양국 관계를 비롯해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과 관련해 심도있게 협의했다.



## 2) EU

우리 정상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영국 콘월에서 6월 12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10월 30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같은 교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공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양측이 기후·환경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했으며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디지털 기술과 신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양측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EU측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외교장관은 3월 8일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통화하고,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영국 런던에서 5월 5일 보렐 고위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양자 관계와 코로나19 대응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무역·투자,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와 지역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3) 프랑스

양국 정상은 6월 13일과 10월 30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6월 13일 회담에서 프랑스 측은 핵심 기술 분야와 보건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우리 측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10월 30일 회담에서 프랑스 측은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을 환영했고, 우리 측은 프랑스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며 양국이 탄소중립과 관련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장관은 3월 26일 장이브 르드리앙(Jean-Yves Le Drian) 프랑스 유럽·외교부장관과 통화하고 10월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 같은 교류를 통해 양 장관은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건, 정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4) 독일

양국 정상은 6월 12일(G7 정상회의 계기)과 10월 31일(G20 정상회의 계기) 각각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장관은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외교장관과 4월 9일 통화한 데 이어 5월 5일 런던에서 개최된 제1차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했다. 이어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신임 외교장관과는 12월 12일 리버풀에서 개최된 제2차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개최했다. 세 차례 교류를 통해 한·독일 양국 장관은 양자·다자 협력, 한반도와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G7 정상회의·G20 정상회의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5) 오스트리아

우리 정상은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오스트리아 대통령 초청으로 6월 13~15일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했다. 세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총리와의 6월 13일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으며, 6월 14일 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는 기후·환경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와 국제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의정서’, ‘문화협력협정’, ‘청소년 교류 이행 약정’, ‘교육협력의향서’ 총 4건의 협정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경제·문화·예술·교육 분야 등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6) 스페인

우리 정상은 6월 15~17일 스페인을 국빈 방문했다. 방문 기간 중 6월 16일 페드로 산



체스(Pedro Sánchez) 스페인 총리와 회담하고,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한·스페인 인더스트리 4.0 협력 양해각서(MOU),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 한·스페인 청정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 한·스페인 보건협력협정을 체결하고 디지털 산업,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7) 헝가리

우리 정상은 11월 2~4일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야노시 아데르(János Áder)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와 각각 회담했다.

아데르 대통령과의 11월 3일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고, 정부·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 양해각서(MOU), 보건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미래산업과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문화 분야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해 기록관리 분야 양해각서(MOU), 문화예술협력 양해각서(MOU), 청소년교류·가족정책 협력 공동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외교장관은 페테르 시야르토(Péter Szijjártó) 헝가리 외교장관과 10월 6일과 11월 3일 두 차례 대면회담과 12월 8일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비세그라드그룹(V4) 협력, 교역·투자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 8) 그리스

한·그리스는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았으며, 양국 외교장관 간 11월 24일 통화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 9) 교황청

우리 정상은 10월 29일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란치스코 교

황과 면담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기꺼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 10) 네덜란드

양국 정상은 7월 7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자 관계 발전 방안과 실질 협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등 실질 협력을 증진시키고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11) 덴마크

5월 30일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한국과 덴마크가 녹색 미래를 함께 선도해 나가기로 했으며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한·덴마크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부 간,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고 해운 협력, 해양 디지털 국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12) 룩셈부르크

외교장관은 10월 6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장 아셀보른(Jean Asselborn) 룩셈부르크 외교·유럽부 장관과 회담하고 2022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정부·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13) 슬로바키아

우리 정상은 11월 4일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2차 한·V4 정상회의 계기에 에두아

르드 헤게르(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이 그간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자동차, 수소경제, 방역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2022년 하반기 V4 의장국인 슬로바키아와 한·V4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14) 슬로베니아

9월 20일 제76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슬로베니아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관계, 한반도 정세, 글로벌 협력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우리 측은 2022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슬로베니아가 주한대사관을 개설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외교장관은 6월 8일 공식 방한한 안제 로가르(Anže Logar) 슬로베니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한·EU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 15)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5월 14일 루이지 디 마이오(Luigi Di Maio)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관계, G7·G20 등 다자 협의체를 통한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파리에에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10월 5일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관계, 코로나19 대응, G20 정상회의 등 상호 관심사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 16) 체코

우리 정상은 11월 4일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2차 한·V4 정상회의에 참석한 안드레이 바비시(Andrej Babiš)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원전, 코로나19 백신·암 치료법 등 보건 분야,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외교장관은 7월 9일 야쿱 쿨하넵(Jakub Kulhanek) 체코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관계, 인적 교류, 교역·투자 증진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17) 크로아티아

외교장관은 10월 5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을 계기로 고르단 그를리치 라드만(Gordan Grlić Radman) 크로아티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간 전기차 등 미래 성장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 18)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메블뤛트 차부쉬오올루(Mevlüt Çavuşoğlu) 튀르키예(구 터키) 외교장관과 3월 5일과 8월 18일 두 차례 통화하고, 10월 22일에는 공식 방한한 차부쉬오올루 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미타(MIKTA) 등 국제무대 협력 강화, 한반도와 지역 정세 등과 관련해 협의했다. 회담 직후 양 장관은 이종과세방지협약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다.

## 19) 폴란드

우리 정상은 11월 4일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2차 한·V4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와 회담을 개최해 양국이 2013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서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과학기술, 인프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2. 중앙아시아 지역 외교

## 1)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2021년 1월 한·우즈베키스탄 화상 정상회담 개최 및 12월 우즈베키스탄 대통

령 국민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켰다.

우리 정상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1월 28일 화상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무역협정 협상 개시에 합의하고 산업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방안, 보건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12월 17일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팬데믹 시대 경제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과 2022년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 우호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장관은 3월 29일 압둘아지즈 카밀로프(Abdulaziz Kamilov)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양국 현안과 코로나19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7월 30일에는 카밀로프 외교장관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으며,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계기로 두산베에서 11월 30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보건, 교육 등 실질 협력과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했다.

## 2) 카자흐스탄

우리 정상은 8월 17일 국민 방한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카자흐스탄 간 경제협력 프로그램인 ‘프레시 윈드(Fresh Wind)’ 추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봉환되었다.

## 3)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은 11월 18일 라시드 메레도프(Rashid Meredov) 대외관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된 것을 평가하고 녹색성장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계기에 11월 30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4)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은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계기로 11월 30일 루슬란 카자크바예프(Ruslan Kazakbayev)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개발협력, 투자, 농업,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

## 5) 타지키스탄

외교장관은 11월 29일 타지키스탄을 공식 방문해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양국 현안과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시로지딘 무흐리딘(Sirojiddin Muhriddin) 외교장관과 만나 2022년 한·타지키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3월 주두산베분관이 주타지키스탄대사관으로 승격된 것을 환영했다. 회담 이후 양국 장관은 한·타지키스탄 이종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 신북방정책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지역과 연계성을 강화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외교다 변화 전략이자 대외경제 정책이다. 외교부는 러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정상·고위급 교류가 신북방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021년에는 8월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민 방한, 12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민 방한 등 정상급 교류와 함께 3월과 10월 한·러 외교장관 상호 방문, 11월 한·중앙아 협력포럼 장관급 격상 개최 등 고위급 교류가 진행되었다.

#### • ODA 중점협력국가 선정

- 정부는 1월 제3기 ODA 중점협력국(2021~2025)으로 중동·CIS 지역에서는 기존 중점협력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에 더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를 신규 선정했다.

## 제3절

## 미주 지역 외교

## 1. 중남미 지역 외교

## 1) 정상외교

## (1)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우리 정상은 2021년 8월 25일 국빈 방한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Iván Duque Márquez) 콜롬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2021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 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했으며,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아 포괄적·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 (2)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11월 21~24일 카를로스 알바라도(Carlos Alvarado)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으며, 11월 23일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심화시키기로 합의하고, 코스타리카의 경제발전 전략과 한국의 디지털·그린뉴딜 정책을 연계해 녹색기술, 생

물다양성,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미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와 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중미경제통합은행(CABEL: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한·중미 FTA 등을 통한 대중미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코스타리카 측 지지를 재확인했다.

## (3) 한·중미통합체제(SICA) 화상 정상회의

6월 25일 SICA 8개 회원국 정상 및 정부대표, SICA 사무총장<sup>1)</sup>이 참석한 한·SICA 화상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기술 이전과 혁신을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한·중미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한·SICA 회원국 간 제도적 협력 기반을 다져나가기 위해 상시적 협력기구인 한·SICA 협력센터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SICA 협력기금을 재조성해 자연재해, 보건의료, 식량안보 등 회원국의 당면과제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ICA 회원국의 지속가능 경제발전 전략과 한국판 뉴딜의 상호 연계를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모든 당사국에 발효한 한·중미 5개국 FTA가 교역과 투자 증진은 물론이고 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참석한 정상들은 한·SICA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한국과 SICA 간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다.

## (4) 한·코스타리카 정상 통화

1월 22일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우리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져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코스타리카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제공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정책이 코스타리카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다면 향후 협력 방안 모색을 희망했다.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2021년도 상반기 SICA 의장

1) 카를로스 알바라도(Carlos Alvarado) 코스타리카 대통령(의장국), 알레한드로 자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파나마 대통령,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안토니오 브리세뇨(Antonio Briceño) 벨리즈 총리, 펠릭스 우요아 가라이(Felix Ulloa Garay) 엘살바도르 부통령, 카를로스 알베르토 마데로(Carlos Alberto Madero) 온두라스 총괄국무조정장관, 올란도 솔로르사노(Orlando Solorzano) 니카라과 산업개발통상장관, 비니시오 세레소(Vinicio Cerezo) SICA 사무총장 등



국 수입을 계기로 양국 간 SICA 차원의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 (5) 중남미 4개국 장관 접견

우리 정상은 2021년 3월 16일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한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브라질 4개국 장관을 접견하고, 친환경·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파트너이자 신뢰할 만한 동반자로서 한국과 중남미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 2) 총리급 외교

국무총리는 10월 28일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참석을 위해 방한한 7개국 차관을 접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중미 미래지향적·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중미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중미 7개국 차관들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각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질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했다.

## 3) 장관급 외교

외교장관은 2021년에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5개국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증진, 국제무대 협력 강화,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1) 한·칠레 외교장관회담

7월 21일 안드레스 알라만드(Andres Allamand) 칠레 외교장관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한·칠레 FTA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어 왔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칠레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알라만드 장관은 한·칠레 FTA가 변화된 국제 경제 상황에 맞게 개선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가능한 한 2022년부터 개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 (2)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9월 24일 제76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장관과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어 양국 관계와 실질 협력 확대 방안, 지역 정세 등에 관해 협의했다.

우리 측은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조속한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의 멕시코 인프라 사업 진출 관련 에브라르드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장관은 중미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미 지역 사회·경제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 (3) 한·콜롬비아 외교장관회담

외교장관은 11월 10일 한·PA 그린경제 포럼 참석을 계기로 공식 방한한 마르타 라미레스(Marta Ramírez) 콜롬비아 부통령 겸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와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2022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정부,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콜롬비아 측은 한국의 PA 준회원국 가입이 양국 간, 한·중남미 간 경제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4) 한·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면담

외교장관은 3월 19일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포럼을 계기로 방한한 로돌포 솔라노(Rodolfo Solano) 코스타리카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 (5) 한·과테말라 외교장관 면담

외교장관은 3월 19일 한·중남미 디지털협력포럼을 계기로 방한한 페드로 브롤로 빌라(Pedro Brolo Vila) 과테말라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양자 관계, 코로나19 이후 실질 협력, 지역 협력 등 양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4) 양자 협의회 등 고위급 교류

정부는 2021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에콰도르,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파나마,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각급에서 양자 협의를 개최했다.

일자 및 장소	행사명	내용
2021.3.17, 서울	한·과테말라 외교차관 면담	양국 관계 평가, 코로나19 이후 실질 협력, 한·중미 지역 협력 등 논의
2021.4.19, 보고타	한·콜롬비아 외교차관회담	고위급 교류 확대, 포스트 코로나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2021.4.21, 산호세	제4차 한·코스타리카 고위정책협의회	포스트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한 무역투자,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 실질 협력 방안 협의
2021.4.23, 멕시코시티	한·멕시코 외교차관회담	통상투자, 보건의료 분야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 협의 등
2021.8.24, 서울	한·콜롬비아 외교차관 면담	양국 관계 평가, 한·중남미 지역 협력 등 논의
2021.10.7, 서울	제12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양국 관계 평가, 실질 협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국제·지역 현안 등 논의
2021.10.11, 과테말라	과테말라 외교차관 면담	중남미 디지털 협력 사절단 파견 계기 디지털 및 그린 분야 실질 협력 증진, 한·SICA 협력 확대 방안 논의
2021.10.13~14, 페루	페루 외교장관 및 차관 면담	중남미 디지털 협력 사절단 파견 계기 양국 간 실질 협력 및 확대 방안 협의
2021.10.26, 서울	한·과테말라 외교차관회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계기 양국 관계 평가, 실질 협력 증진, 개발 협력 확대 등 논의
2021.10.26, 서울	한·엘살바도르 외교차관회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계기 한·SICA 협력 확대 방안, 인프라 협력 등 논의
2021.10.27, 서울	파나마 통상산업부 차관 면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계기 양국 관계,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 및 한·중미 FTA 포함 경제 협력 방안 등 논의
2021.10.27, 서울	한·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면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계기 디지털·친환경 경제, 중미 협력 등 논의
2021.10.27, 서울	한·온두라스 외교차관 면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계기 중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방안, 기반시설 협력 방안 등 논의

일자 및 장소	행사명	내용
2021.10.27, 서울	한·도미니카공화국 외교차관 면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계기 대중미 협력 방안, 대카리브 협력 확대 방안 등 논의
2021.10.27, 서울	한·벨리즈 외교차관 면담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계기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 논의
2021.11.10, 서울	한·에콰도르 외교차관 면담	한·PA 그린경제 포럼 계기 양국 관계, 경제통상 협력,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 등 논의
2021.12.2, 서울	한·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차관 면담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계기 양국 관계, 실질 협력, 한·카리브지역 협력 방안 등 논의

5) 의회 간 교류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대표단이 11월 7~15일까지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의회 대면 외교를 수행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계기에 서한 전달 등 20건의 비대면 외교를 통해서도 중남미 지역 의회와의 교류 활동이 지속되었다.

2021년 한·중남미 의회 간 대면 외교	
일자	내용
2021.3.16	코스타리카 외교장관, 우리 국회의장 예방
2021.11.7~15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멕시코, 코스타리카 방문
2021.11.23	우리 국회부의장, 코스타리카 대통령 면담

6) 중남미 지역기구와 협력

우리나라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 and Latin America Cooperation),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태평양동맹(PA), 미주기구(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등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각종 지역 기구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했다.

### (1)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과 협력

1999년 9월 공식 출범한 FEALAC은 동아시아(16개국)와 중남미(20개국) 지역 3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정부 간 유일한 다자협의체다. 그간 우리나라는 FEALAC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2021년은 FEALAC 사이버사무국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외교부는 코로나19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제21차 FEALAC 고위관리회의(SOM) 개최(화상)를 주도하고 FEALAC 다자신탁기금 운영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세션을 주재했다. 9월 15일에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설립 10주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11차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화상)을 개최했다.

한편 FEALAC의 대외 홍보 강화와 우리 국민의 참여를 통한 국민외교 실현을 위해 대학생 등 청년층으로 구성된 FEALAC 국민대표단을 2021년 5~12월 운영했으며, 11월에는 FEALAC 사이버사무국 10주년 기념전시회와 2021 FEALAC 온라인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 (2)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와 협력

ECLAC은 중남미 지역의 경제 발전과 사회 개발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위원회로, 우리나라는 2007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공동 연구, 전문가 교류,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ECLAC과 대중남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왔다.

특히 2021년 4월 29일에는 한·ECLAC 기금으로 중남미 제조업 디지털화 웨비나를 개최해 팬데믹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정부의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8월 5일에는 자연기반 농업 해법 웨비나를 개최해 농업 분야에서 자연기반 해법과 생물다양성을 활용한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12월 15일에는 한·ECLAC 실무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한·ECLAC 간 협력기금 사업 운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ECLAC과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협력 체제 구축과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도모했다.

### (3)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협력

한국과 MERCOSUR 간 무역협정 타결을 위해 2020년 2월 몬테비데오 제5차 협상에 이어 2021년 6월과 8월 각각 화상으로 제6차와 제7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외교부는

한·MERCOSUR 무역협정이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국내 관계 부처는 물론이고 각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MERCOSUR 회원국 언론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 (4) 태평양동맹(PA)과 협력

PA는 2012년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 간 역내 경제 통합, 경쟁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교역 확대를 지향하며 결성한 경제협력체로, 외교부는 중남미 해외시장 확대의 주요 근간인 PA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고자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1년 11월 외교부는 서울에서 5개국(PA 4개국과 정회원국 가입 추진국 에콰도르) 장·차관급 고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PA 그린경제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PA 회원국 소재 우리 공관을 통해 지속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

### (5) 미주기구(OAS)와 협력

OAS는 미주 지역 국가 간 연대·협력 제고를 위해 1948년 창설된 지역기구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상임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한·OAS 협력 기금을 통해 선거참관단 활동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미주 지역 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외교부는 2021년 6월 9일 제5차 상임옵서버 특별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논의했으며,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51차 미주기구 총회에 참석해 OAS와의 협력과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 (6) 중미통합체제(SICA)와 협력

SICA는 중미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와 문화적 통합을 위한 자유,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 달성을 목적으로 1991년 출범해 중미 8개국이 참여하는 지역기구이며, 우리나라는 2012년 역외옵서버로 가입했다.

정부는 2021년에 SICA 출범 30주년과 제1차 한·SICA 정상회의 25주년을 맞아 11년 만에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6년 만에 제13차 한·SICA 차관급 대화협의체를 개최해 중미 지역과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4월 22일 외교부 제1차관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중미 8개국 외교차관과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해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도모와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한 SICA 회원국들과의 연대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위험성에 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태평양 지역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6월 2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에서는 한·SICA 정상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어 SICA와의 미래지향적 협력 로드맵을 마련했다.

### (7)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

10월 28일 한·중미·미 3자가 함께하는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을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중미 7개국 차관, 미국 부통령실과 국무부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외교부 제1차관은 특별 라운드테이블 개최가 한·미 정상회담(5월)에서의 중미 북부 3개국 이주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발표와 한·SICA 정상회의(6월)에서의 중미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 합의 이래, 우리 정부의 대중미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으며 활발한 고위급 교류, 우방국과 전략적 공조,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및 협력센터 설치를 통한 제도적 플랫폼 확대 등을 통해 한·중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중미 7개국 차관들은 향후 교역·투자, 농업, 친환경 인프라, 디지털 정부 분야 등에서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높은 기대를 보였다. 그리고 미국 대표단과도 대중미 협력에 관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 7) 한·중남미 포괄적 협력

### (1) 2021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포럼 개최

외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2021년 3월 17~18일 서울에서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디지털 혁신과 포용을 향한 한·중남미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중남미 국가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교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내 인사와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5개국 장·차관 8명이 참석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7개국 고위 인사들은 사전 녹화 방식과 실시간 온라인 방식을 통해 참여했다.

### (2) 한·PA 그린경제 포럼 개최

외교부는 11월 10일 서울에서 ‘한·PA 그린경제 포럼’을 개최했다. 5개 국가(PA 4개국과 정회원국 가입 추진국 에콰도르) 장·차관급 고위인사가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녹색성장 혁신 파트너십 확대’를 주제로 한·PA 그린경제 추진 동향, 한·PA 에너지전환, 수소경제, 한·PA 순환경제, 산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3) 중남미 인프라·방산·디지털 사절단 파견

외교부는 관계부처, 기관 및 기업들과 함께 중남미 측 수요를 기반으로 경제협력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다. 2021년에는 6월 2~12일 멕시코, 온두라스, 파나마, 페루에 인프라 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122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과 인프라·디지털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8월 3~7일에는 콜롬비아에 방산 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고위인사(대통령, 부통령, 국방장관, 공군부사령관)와 면담하고 국방과 방산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10월 10~16일 과테말라와 페루에 외교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결제원 등 민간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Team Korea) 디지털협력 사절단을 파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분야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4) 중남미 진출 기업 간담회 및 지상사 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6월 28일 중남미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진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현지 우리 공관과 협력 및 주한대사관과 협력 강화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했다. 또한 6월 4·8·10일, 10월 14일 중남미 현지에서 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진출 기업을 지원했다.

### (5) 한·중미 북부 농업 협력 포럼 개최

외교부와 농촌진흥청 합동 농업협력사절단은 7월 9일 과테말라시에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미 북부 3개국 농업 분야 장·차관들과 함께 한·중미 농업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3개국의 외교 및 농업 분야 장·차관과 농업·산림 분야 기관 관계자들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했으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정부의 대중미 협력 확대 의지를 토대로 농업·산림 분야 상생 협력을 시작으로 중미 북부 지역의 지속가능한 포괄적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6)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외교부는 12월 1일 카리브공동체(CARICOM: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국가연합(ACS: Association of Caribbean States)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괄적 디지털, 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양측 참석자들은 소규모 도서국가로서 카리브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취약성, 개발재원 접근 제약 등의 이해와 함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 도전과제로 부상한 보건의료,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7)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개최

외교부는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12월 8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미시장 진출 확대’를 주제로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민·관 전문가들과 중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기업인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중미 지역 경제 전망과 시장 동향, 2021년 3월 전체 발효된 한·중미 FTA의 활용 방안과 유의사항, 국가별 진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8) 대중남미 국민외교 강화

(1) 화요라틴광장 개최

외교부는 2021년 화요라틴광장을 총 5회 개최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남미와 관련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일자 및 장소	주제	주요 내용
2021.5, 대구	찾아가는 라틴광장 -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외교정책, 청년 중남미 진출 정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제도 등 소개
2021.7, 서울	중남미 이야기 - 중남미 사회 불평등과 시위 확산	대구 가톨릭대학교 임수진 교수 강연
2021.10, 서울	중남미 이야기 - 중남미 문학과 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구호 교수 강연
2021.11, 서울	중남미 이야기 - 카리브의 히스파니올라섬	홍지영 박사 강연
2021.12, 서울	중남미 이야기 - 중남미 미술기행	안진옥 반디트라스 커뮤니케이션 대표 강연

(2) 중남미 논문 공모전 개최

외교부는 국내 대학(원)생들의 중남미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중남미 지역 전문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LASAK)와 공동으로 5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9회 중남미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12월 18일 우수자에게 시상했다.

(3) 2021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 개최

중남미 진출과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이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전면 화상으로 진행되었다. 9월 24일 개최된 2021 청년 중남미 진출 포럼에서는 통상, 환경, 개발 협력 등 중남미 진출 유망 분야와 건설·인프라, 제조·무역 업종을 소개하고 해외 진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4)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외교부는 한인의 쿠바 이주 100주년을 기념해 쿠바 한인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 국민의 쿠바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3월 25~31일 ‘쿠바 한인 100년의 발자취’ 제하의 사진전과 11월 25일 쿠바 정책 세미나, 11월 26일 한·쿠바 차세대 대화를 개최하고 기념백서를 제작했다.

(5) 포르투갈어 경연대회 개최

외교부는 국내 포르투갈어 외교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브라질 등 포르투갈어권 국가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주한브라질대사관, 한국·브라질소사이터, 포르투갈·브라질학회 등과 공동으로 2021년 12월 13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10회 전국 포르투갈어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대상 수상자에게 외교부장관상을 시상했다.



## 2. 한·캐나다 관계

정부는 고위급 간 통화·대면 회담 개최 등을 통해 캐나다와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 2021년 2월 17일 외교장관은 마크 가노(Marc Garneau) 글로벌부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한·캐나다 실질 협력,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민주주의, 자유무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한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두 차례(5.5, 12.12)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협력, 코로나19 대응, PKO 장관회의 등 국제 평화·안전·인권 증진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외교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제18차 한·캐나다 포럼 개최(11월)를 지원해 양국 민간 분야 전문가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다.

### 제4절

## 아프리카·중동 지역 외교

## 1. 국가별 교류협력 현황

### 1) 중동

#### (1) 리비아

2021년 10월 31일~11월 2일 외교부 차관보는 리비아를 방문해 리비아 부총리 등 주요 정부 인사와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한·리비아 간 우호관계가 최근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계속되어 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차관보는 리비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향후 리비아 안정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다양한 재건 사업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 (2) 모로코

8월 15~16일 외교부 제1차관은 모로코를 방문해 모로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경제·통상, 보건, 개발, 기후변화, 산림,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공동위 등 기존 정부 간 협의체를 활성화해 이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3) 바레인

9월 2일 국무총리와 바레인 하원의장은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경제, 디지털, 문화, 보건 등 전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리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며, 우리 기업의 바레인 인프라(핵심 기반시설) 사업 참여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6월 7일 외교장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레인 문화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에너지·건설 협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위급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등 투자, 경제 협력 강화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문화 협력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 (4) 사우디아라비아

9월 23일 양국 외교장관은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회담을 개최했다. 양 장관은 두 나라가 굳건한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점을 평가하고, 2022년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방문 추진과 정부·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한·사우디 공동위원회,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등 양국 간 소통 채널을 강화함으로써 실질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동 정세 및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 (5)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10월 28일 서울에서 국무총리와 UAE 연방평의회 의장이 회담을 개최했다. 회담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총리는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 활동에 UAE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양국 외교장관은 수차례 통화(2.15, 10.16 등)를 하고 양국 관계 현안을 논의했다. 2월 15일 이루어진 통화에서 양 장관은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급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10월 16일 이루어진 통화에서는 양국이 각각 추진 중인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 개최 시기를 논의하는 한편, UAE 외교장관은 우리나라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추진과 관련해 양국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외교장관은 10월 8~11일 UAE 방문을 계기로 10월 10일 UAE 왕세제를 예방하고, 한·UAE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한·UAE 관계 발전 방안 및 에너지·보건·농업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이후 외교장관은 두바이 방문 계기, 10월 9일 UAE 외교·국제협력부 특임장관 겸 두바이 엑스포 조직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와 관련해 UAE 측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아울러 장관은 2020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을 둘러보고, 코트라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만나 격려했다. 또한 장관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진출기업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 (6) 예멘

정부는 예멘 내전 종식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관련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예멘 후티 반군에 민간인과 민간시설 대상 공격 중단 및 유엔이 주도하는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예멘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예멘 국민을 위한 쌀 지원 등으로 총 1,9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 (7) 오만

9월 14~15일 외교부 제2차관은 오만을 방문해 오만 외교장관 및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오만 외교장관은 오만 주도로 1996년 설립된 중동담수화연구소에 대해 정부가 꾸준히 재정적 기여를 해주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 (8) 이란

2월 24일 양국 외교장관은 양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통화를 가졌다. 우리 측은 2021년 1월 4일에 한국케미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당국에 의해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 선장과 선박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영국·미국·독일 등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등 사건의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며, 그 결과 한국케미호는 95일 만인 4월 9일 억류가 해제되었다.

국무총리는 4월 11~12일 양일간 이란을 공식 방문해 이란 제1부통령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평화 및 항행의 자유를 강조했으며,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과 상호 관심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8월 5일 세이예드 에브라힘 라이시(Seyyed Ebrahim Raisi) 제13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정부 대표로 외교부 제1차관을 파견했다.

또한 외교장관은 9월 30일 이란 신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이란 신정부 출범과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양국 현안과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에 관해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대이란 제재 상황에서도 허용된 인도적 교역을 추진함으로써 이란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을 수출했다. 그 결과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대이란 인도적 교역 실적은 2021년 12월 기준 약 5,500만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유엔, 미국 등과 협의를 통해 이란이 2021년 6월 유엔 분담금 약 1,600만 달러를 원화동결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9) 이스라엘

7월 16일 한·이스라엘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양 정상은 양국이 코로나19 백신 스와프를 이룬 것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국이 방역에서, 이스라엘은 접종에서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양국 간 경험 공유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3월 8일에는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간 통화가 이루어졌다. 양 장관은 양국 간 FTA가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스라엘 신정부 구성(6.13) 이후인 8월 4일 외교장관은 이스라엘 신임 외교장관과 통화해 한·이스라엘 FTA 체결에 따른 교역·투자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2021년 5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 무력충돌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당사자들이 긴장고조 행위를 자제하고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5월 21일부로 무력충돌 당사자 간 교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자 이를 환영하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정부는 팔레스타인 내 인도적 위기 상황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15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 (10) 이집트

한·이집트 외교장관은 2021년 9월 23일 뉴욕에서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와 실질 협력,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이어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정상급 인사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양국 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FTA 체결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관은 이집트가 정부의 2021~2025년 ODA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되는 등 양국 개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룩소르-하이담 철도 현대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이집트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 밖에도 장관은 이집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이집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11) 카타르

1월 13일 외교부 제1차관은 카타르를 방문해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및 카타르 외교부 외교담당 국무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국은 한·카타르 협력관계가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건설, 에너지, 보건 등 분야 및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8월 17일에는 양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갖고 한·카타르 간 전방위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장관은 특히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카타르 도하로 철수한 주아프가니스탄한국대사관의 원활한 외교 활동을 위한 카타르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9월 13일 외교부 제2차관은 카타르를 방문해 외교담당 국무장관 및 자치행정 환경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아프간 사태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차관은 아프간 사태 악화에 따라 도하로 임시 이동한 우리 대사관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카타르가 외교적 편의를 제공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11월 3일에는 서울에서 제1차 한·카타르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교역·투자, 신재생에너지,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의 실질 협력 확대 방안, 국제기구 선거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중동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12) 튀니지**

11월 3일 외교부 차관보는 튀니지를 방문해 튀니지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해 양국 관계 및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2) 아프리카****(1) 가나**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7월 8~10일 아크라를 방문해 외교차관, 재무차관, 아프리카 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양측은 정무, 경제, 개발 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기니만 해역 문제 등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 감비아**

11월 18일 감비아 외교장관이 제6차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참석차 방한한 계기에 양국은 한·감비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개발 협력,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자 관계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감비아가 2016년 12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를 달성해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한 점을 평가하고, 감비아의 민주주의 정착과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3) 나이지리아**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18~19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외교국무장관, 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면담했다. 양측은 한·아프리카 간 호혜적 협력 확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경제 관련 협정 체결 추진 및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을 통한 양국 간 경제 교류 기회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측은 기니만 해상안보 확보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편 10월 14일 제6차 한·나이지리아 차관급 공동위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양국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개발, 문화·영사, 국제무대 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기니만 해역에서 해적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함께하고 기니만 해역 안보 증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4) 르완다**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10일 르완다를 방문해 르완다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실질협력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르완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기술(IT) 및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차관은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에 대해 설명하고, 르완다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5) 말라위**

외교부 아프리카 협력대사는 9월 29일 말라위를 방문해 외교장관, 사무차관을 각각 예방하고 양국 간 교류·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에 대한 말라위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6) 모잠비크**

한·모잠비크 양국은 우리 기업이 생산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시설물(FLNG facility) 출항 명명식 참석차 모잠비크 대통령이 방한한 계기에 경남 거제시에서 11월 15일 정상 오찬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한·모잠비크 관계, 경제 협력, LNG 분야 우리 기업 진출 확대 등 양국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리 측은 모잠비크 진출 우리 기업 및 교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모잠비크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7) 세네갈**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17~18일 세네갈을 방문해 대통령을 예방하고, 경제계획·협력부장관 및 외교차관과 면담했다. 양측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이룩한 국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 왔다고 평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보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우리의 ODA 중점협력국인 세네갈에 대한 해상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친환경, 디



지텔 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세네갈 발전을 위한 공헌 의지를 표명했다.

#### (8) 수단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6월 27~29일 수단을 방문해 수단 총리, 외교장관을 각각 예방했다. 조정관은 수단 측의 민주적 평화 달성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과도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을 위한 수단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조정관은 수단 외교차관과 제8차 한·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다. 또한 조정관은 수단 투자·국제 협력부 장관과 양국 주요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단 비즈니스 협력포럼에 참석했다.

#### (9) 에티오피아

한·에티오피아 양국 외교장관은 7월 1일 통화하고 양국 관계 현안과 협력, 국제무대에서 협력, 에티오피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휴전 선언 발표가 에티오피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티그라이 지역 내 인도적 위기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 지역으로 인도적 접근이 제한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에티오피아 측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외교부 아프리카 협력대사는 9월 23~25일간 에티오피아를 방문해 AU 상주대표 위원회 의장단 및 AU 집행위원회 면담, AU 부집행위원장 면담을 갖고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 (10) 우간다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8~9일 우간다를 방문해 외교부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해 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차관은 우간다의 국가 발전계획인 ‘우간다 비전 2040(Uganda Vision 2040)’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차관은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에 대한 우간다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11) 카메룬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11~12일 카메룬을 방문해 외교부 영연방 부장관과 제4차 한·카메룬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양측은 2021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이 경제·개발 협력·영사 및 문화·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풍부한 자원 및 젊은 인구층 등을 보유한 카메룬의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카메룬 내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 참여 등을 통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카메룬 정부의 주한 카메룬 상주대사관 개설 결정을 환영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 (12) 콩고공화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7월 7일 콩고공화국 브라자빌을 방문해 외교장관, 국제협력·민관협력진흥부 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한·콩고 간 정부·경제·개발협력·국제무대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중부 아프리카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콩고 측은 콩고공화국이 농업, 교육, 관광, 핵심 기반시설(인프라), 산업 분야의 민관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이들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을 위한 구체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 (13) 콩고민주공화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7월 5~8일 콩고민주공화국 킌사사에서 대통령 및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콩고민주공화국 측은 코로나19 대응 및 나라공고 화산 폭발 피해 복구 등과 관련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민주콩고의 교육, 보건, 농업, 에너지, 수력발전 등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정관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과 민주콩고의 투자 환경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를 위해 2005년 서명된 한·민주콩고 투자보장협정 문안 개정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해 우리 기업들의 민주콩고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 (14) 아프리카연합(AU)

외교장관은 AU 집행위원장과 7월 7일 통화하고, 한·AU 및 한·아프리카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국이 2005년 AU 옵서버 자격을 확보한 이래

한·AU 관계가 상호호혜적으로 발전중인 가운데, 특히 우리 측의 아프리카 평화·안보 분야 지원 및 대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10배 이상 증액 등을 통해 한·AU 및 한·아프리카 협력 관계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협의를 나가기로 했다.

## 2. 대중동 우호협력 증진

### 1) 주한아랍대사단 간담회

외교부 제1차관은 2021년 6월 3일과 11월 24일 두 차례 주한아랍대사단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코로나19 이후 한·아랍국가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외교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아랍국가 간 관계가 공고해졌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양측 간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의료, 과학기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 2) 제17차 한·중동 협력포럼

제17차 한·중동 협력포럼이 11월 8일 외교부, 한국·아랍 소사이어티(KAS: Korea-Arab Society), 제주평화연구원(JPI: Jeju Peace Institute), 에미리트전략문제연구소(ECSSR: Emirate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Research) 공동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한·중동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동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해 온 1.5트랙 포럼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제17차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대변화 시대의 한·중동 협력 파트너십 방향’이라는 주제하 ‘변화하는 중동과 한국의 관계: 미래로 향하는 도전과 기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중동 협력’이라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변화하는 중동 정세 속에서 한국과 중동 지역 간 지속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3) 제14회 아랍문화제

제14회 아랍문화제가 ‘아랍과 서울 그리고 신기루’라는 주제로 6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국민의 대면 참여로 진행된 2021년 아랍문화제에서는 아랍의 사막과 신기루를 모티브로 도심 속 광활한 사막을 구현해 아랍의 문화와 이미지를 우리 국민에게 소개했다.

### 4) 한·아랍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

한·아랍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나라 청년과 국내 거주 중인 아랍 청년 중 아랍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운영자와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79개 팀이 참가해 최종 6개 팀이 수상했으며, 스타트업과 아이디어 부문에서 각 1위를 한 팀에는 상금 외에도 두바이 엑스포 방문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되었다.

### 5) 제14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

제14회 한·아랍 우호친선 카라반이 8월 21일 아이돌 그룹 비아이지(B.I.G)의 온라인 라이브 케이팝(K-POP) 공연으로 개최되었다. 공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랍 현지에서 콘서트 개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6) 한·아랍 미래협력포럼

한·아랍 미래협력포럼이 8월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아랍 협력의 새 지평’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포럼은 한·아랍 협력의 현재와 미래, 역내 국제관계 변화와 전망, 한·아랍 협력 발전을 위한 과제와 기회라는 주제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중동의 지정학적 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한·아랍국가 간 다양한 협력을 모색했다.



## 7) 수교 60주년 기념 로고 공모전

2022년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모로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아랍 소사이터티(KAS)는 외교부 후원으로 ‘수교 60주년 로고 공모전’을 개최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147명이 154개의 로고를 출품했으며, 해당국 주재 우리 대사관과 주한대사관 등 총 6개 대사관과 KAS의 심사를 통해 3개 작품이 각각 대표 로고로 선정됐다.

수교 60주년 기념 로고 1위 입상작(수교 일자 순)



## 3. 여타 양자·다자 협의 개최

### 1) 제1차 한·UAE 영사 공동위원회

6월 23일 UAE 아부다비에서 재외동포영사실장과 아랍에미리트 영사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제1차 한·UAE 영사공동위가 개최됐다. 양측은 양국 간 영사공동위 신설 및 정례화에 합의하고, 영사분야 협력을 위한 ‘한·UAE 영사공동위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하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을 통한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상대국 내 자국민 보호 등 영사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영사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2) 제3차 한·AU 국장급 정책협의회

2월 25일 제3차 한·AU 국장급 정책협의회가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양측은 제5차 한·아프리카 포럼 준비사항, 한·AU 협력기금 등 양측 공동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3) 제3차 한·앙골라 국장급 정책협의회

10월 22일 서울에서 제3차 한·앙골라 국장급 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양측은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국제무대에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 기업의 활동 지원 및 양국 간 논의 중인 투자보장협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 4) 제9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11월 18일 제9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양국은 대중동 정책과 최근 중동 정세 변화 요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 5) 한·EU 중동문제 라운드 테이블

6월 25일 외교부는 EU 대외관계청(EEAS,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과 한·EU 중동문제 라운드 테이블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중동정세의 지형변화’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행사에 한국과 유럽연합의 민·관 중동전문가들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해, 최근 중동 정세 변화 요인과 그 함의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 제5절

## 지역협의체 외교

## 1. 아세안(ASEAN) 관련 다자협의체

## 1)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10월 26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역내 보건·백신 협력, 경제 회복 방안, 한반도 등 지역·국제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관련 공동 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지난 4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10월 27일 개최된 제2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대응 등 그간의 협력 성과와 향후 아세안의 보건 역량 강화 및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입각한 경제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정상성명’<sup>1)</sup>을 채택했다.

같은 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서 우리측은 아세안 10개국,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정상들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EAS 협력 점검과 미래 방향, 지역·국제정세를 논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EAS에서 정상들은 ‘정신건강 협력에 관한 성명’, ‘관광

1) 아세안+3 정상들은 코로나19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역내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성명’,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sup>2)</sup>을 채택했다.

## 2)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앞서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8.3), 제22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8.3), 제11차 EAS 외교장관회의(8.4), 메콩우호국 장관급회의(8.5), 제28차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8.6),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9.8)<sup>3)</sup>가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8월 3일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과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그간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 간 협력의 기본 틀로서 공고히 자리매김해 온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코로나19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개최된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통한 백신 공급 확대와 공평한 접근 보장 노력을 소개하고, ‘아세안+3 필수의료물품 비축제’ 논의에 참여했다. 또한 경제 회복력 강화와 포용적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8월 4일 아세안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 역내 18개국 참여하에 개최된 EAS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한반도, 미얀마, 남중국해 등 역내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 등 당면 과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AS 차원의 공조를 강조했다. 아울러 신남방정책과 역내 주요국 지역협력 구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8월 5일 개최된 메콩우호국 장관급회의에서는 참가국 및 국제기구와 메콩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공동언론성명을 채택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을 강조했다.

2)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회복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함으로써 녹색전환을 향한 EAS 회원국의 의지가 더욱 결집될 수 있도록 했다.

3)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 개최: 공식 방한 중인 프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외교장관과 대면으로 공동 주재했으며, 여타 메콩 국가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8월 6일 아세안과 미국, 중국, 일본, EU, 북한 등 총 27개국이 회원국인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 미얀마, 남중국해 등 지역 내 다양한 안보 관련 현안과 비전통안보 방안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이버 공간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ARF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차기 ARF ICT 안보 회기간 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9월 8일 개최된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는 10주년을 맞이하는 한·메콩 협력 성과와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한·메콩 협력 심화 방안을 다루는 한편, 국제정세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보건, 기후, 인프라,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참가국들은 한·메콩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의 증진을 위해 ‘한·메콩 교류의 해’를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2. 한·비셰그라드그룹(V4: Visegrad Group) 협력

V4는 중유럽 4개국(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의 지역 협력체로 안보,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11월 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제2차 한·V4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양측은 과학기술·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하고 한·V4 간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 3.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Asia-Europe Meeting)

국무총리는 2021년 11월 25~26일 ‘동반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주제로 실시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본회의의 세션 II(코로나19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에서 우리 측은 ASEM 출범 25주년을 축하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을 위한 아시아·유럽 간 협력에서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리트리트 세션(국제·지역 현안)에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과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며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설명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ASEM 정상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제13차 ASEM 정상회의에서는 리트리트 세션 직후 폐막식을 개최하고 2021년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된 ASEM 고위관리회의(SOM)에서 확정된 의장성명, 포스트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회복에 관한 프놈펜 성명, ASEM 연계성 제안 등 3개 결과문서를 채택하고 폐회했다.

## 4. 므타(MIKTA)

우리나라는 2021년 한 해 동안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소다자 협의체 므타의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우리나라 의장국 수임을 종료하고 호주에 차기 의장국을 인계했다. 므타는 2021년 호주의 의장국 수임 중 두 차례의 외교장관회의, 세 차례의 고위관리회의 등을 통해 각급에서 교류를 지속했다. 또한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관한 공동입장 16건을 발표했다. 아울러 호주 측은 제76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므타 차원의 정상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믹타 관련 주요 행사

일자 및 장소(형식)	행사명	내용
2021.1.20, 화상	제10차 므타 고위관리회의	외교장관회의 준비 및 우리나라의 의장국 활동 결과
2021.2.3, 화상	제18차 므타 외교장관회의	공동 커뮤니케 채택 및 호주로 의장국 인계 ※ 우리나라 의장국(2020년 2월~2021년 2월) 임기 종료
2021.6.15, 화상	제11차 므타 고위관리회의	호주 측 향후 의장국 활동 계획 청취 및 차기 외교장관회의 준비
2021.8.19, 화상	제12차 므타 고위관리회의	외교장관회의 준비 및 의제 등 구체 사항 협의
2021.9.22, 뉴욕	제19차 므타 외교장관회의	지난 8년간의 협력 성과 평가 및 미얀마 정세,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보급, 양성 평등 의제 논의, 므타 신규 슬로건 채택
2021.9.22, 서면 발표	믹타 정상급 공동발언	열린 사회, 다자주의 그리고 민주적 가치에 관한 5개국 정상들의 신념과 의지 확인

## 1) 고위급 협력

정부는 호주로 의장국 인계를 위해 2021년 2월 3일 제18차 므타 외교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호주 정부는 9월 22일 뉴욕에서 제19차 므타 외교장관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했다. 회원국들은 미얀마 정세,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대응, 양성 평등 등의 의제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확인하고 신규 슬로건을 채택했다.

## 2) 국제무대 공동보조

므타 회원국들은 2021년 튀르키예 자연재해 위로(9.8), 아프간 정세(9.10), 아프간 인도 지원(12.17), 인도네시아의 2022년도 G20 의장국 수임 축하(12.21)에 관한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유엔 등 각종 국제무대의 주요 회의를 계기로 여성과 장애인 인권, 코로나19 대응, 개발협력 등에 대한 공동발언을 진행했다.

## 5.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Organization of the Black Sea Economic Cooperation)

BSEC은 1992년 튀르키예 주도로 흑해 연안국의 교역과 경제협력 확대 등을 위해 설립된 지역경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17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4차 BSE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BSEC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 6.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과 분쟁 예방을 목표로 1992년 출범한 지역협력체인 CICA에 2006년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0월 11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개최된 제6차 CICA 외교장관회

의에서 백신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노력, COP28 유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아프가니스탄 안정 등 아시아 지역 내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CICA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9월에는 에너지안보 분야 조정국으로서 수소에너지 세미나를 개최해 회원국 간 수소 분야에서 신뢰 구축 조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7.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우리나라는 태평양도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3년 주기로 14개 태평양 도서국과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해에는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11.16)에서는 개발 협력, 기후·환경, 해양·수산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태평양도서국 협의체를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외교장관회의 개최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

## 8. 한·중앙아 협력 포럼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포괄적인 교류협력과 우의 증진을 위한 민간 합동 다자협력체이다. 2021년 11월 30일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제14차 포럼이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중앙아 협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외교부와 타지키스탄 외교부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2020년 제13차 포럼에서 외교장관급으로 격상함에 따라 제14차 포럼에는 우리나라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외교장관과 카자흐스탄 외교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포럼에는 산림, 에너지, 디지털, 보건 등 4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앙아 5개 관련 기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고, 참여국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을 위한 한·중앙아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자연과 공존', '미래 기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사람 중심의 성장' 등 한·중앙아의 미래 협력 비전에 합의했다.



## 9.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인도양은 전통적으로도 세계 에너지·물류 수송의 요충지로서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상당하며, 현재 주요 국가의 지역구상과 맞물려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우리나라는 환인도양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2018년 IORA<sup>4)</sup>에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한 이래, 매년 각종 회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다. 2021년에는 제21차 IORA 각료회의(11.17), 제23차 고위관리회의(11.15~16) 등 고위급 협의체는 물론이고 제2차 청색경제실무그룹회의(4.12), 제2차 IORA 관광분야 코어그룹회의(12.21) 등 다양한 실무협의체에 참석했다.

한편 우리 정부 주도로 마련된 정책 교류 플랫폼인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가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IORA 청색경제(Blue Economy)<sup>5)</sup> 파트너십’을 주제로 개최된 제2차 한·IORA 파트너십 세미나(7.8~9)에서는 ①수산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②지속가능한 해양 교통 연결성 증대 ③청색경제의 잠재성 실현 등 세 가지 의제를 논의했으며, 한·IORA 간 상호 이해와 실질 협력 증진 기회를 모색했다.

## 10.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우리나라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보유한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SAARC에 옵서버로 참여했다. 또한 2010년부터 SAARC 회원국과 미래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AARC 회원국 정부 관계자와 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를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제12차 한·SAARC 파트너십 세미나(11.23)에서는

한·SAARC 기후변화 협력 증진 방안을 주제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와 남아시아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 인도양 연안국가 간 경제·사회 분야 협력을 위한 지역협의체로 1997년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로 출범했다. 23개 회원국과 10개 대화상대국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2018년 11월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했다.

5) IORA의 8대 우선협력 분야 중 하나이다.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을 통해 경제성장과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해양생태계 보존을 달성한다는 개념으로, 어업, 해운·항만, 해양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World Bank, 2017).

---

# 05.

CHAPTER.

---

## 경제-안보-기술 융합외교

---

114

**제1절**

경제안보외교 및  
주요국 경제외교

124

**제2절**

지역 및 글로벌  
경제외교

130

**제3절**

기후·환경외교 및  
에너지·자원 협력

140

**제4절**

과학기술외교 및  
북극 협력



## 제1절

경제안보외교 및  
주요국 경제외교

## 1. 경제안보외교 강화

## 1) 글로벌 공급망 논의 참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다자무역규범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2021년 10월 31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공급망 회복력 글로벌 정상회의’에 주요국(한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14개국) 정상들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①투명성 ②다양성과 개방성 및 예측가능성 ③안전성 ④지속가능성의 4개 핵심축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12월 11~12일 영국 리버풀에서 개최된 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외교장관이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급망 복원,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협의했다.

## 2) 주요국과의 경제안보 협력

한국과 미국은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

망 조성, 디지털 첨단 분야 협력 심화,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중심적인 디지털·기술 생태계 보호에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중대형 배터리 등 핵심 제품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등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미국의 <공급망 100일 검토보고서> 발표 전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12월 17일 개최한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양자·다자간 협력 증진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보건, 백신, 핵심 광물 등 분야에서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민간과의 조율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는 요소 수급 차질과 관련해 중국 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기계·전자 부품의 수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11월 30일 개최한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교류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중 간 원활한 교역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6월 12일과 10월 30일 한·EU 정상회담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협력 및 배터리 등 첨단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고, 12월 13일 한·호주 정상회담을 통해 호주 정부와 핵심 광물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력도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독일·네덜란드·싱가포르 등 주요 유사입장국과도 공급망 디커플링 문제에 대응한 경제안보 협의체 신설 추진 등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 3) 조기경보·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외교부는 급증하는 경제·안보·기술·가치 융합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 1일 ‘경제안보 TF’를 출범하고, 요소수 수급 불안 대응을 계기로 11월 19일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확대 개편했다. 경제안보 TF 산하에는 공급망, 디지털·신흥기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분과를 신설했다.

한편 외교부의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12월 3일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공급망 리스크 등 경제안보 현안을 조기에 포착하고 총괄적으로 분석·조정·대응하는 ‘조기경보·위기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요소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구축된

범부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대외 부문을 재외공관망 중심으로 강화했다. 2021년 11월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 및 주요 광물자원 수입 대상국을 선정해 23개 재외공관에 '경제안보 핵심 품목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핵심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도 공급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 정부의 정책, 지정학적 요인, 정세 등 대외환경 동향을 조기에 포착해 분석함으로써 경제안보 대응 강화를 추진했다.

## 2. 주요국과 경제외교

### 1) 미국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6위 교역 대상국으로, 양국 간 총 교역액은 2020년 1,316억 달러에서 2021년 1,691억 달러로 29% 증가했다. 외교부는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공급망, 백신, 첨단기술, 보건, 기후변화,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협력도 도출했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대등하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 또한 외교부는 12월 17일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해 공급망, 백신, 기후변화, 첨단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를 점검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했으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제4차 및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7월 21일 개최된 제4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서는 공급망과 기후변화에 관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2월 16일 개최된 제5차 포럼은 제3차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간담회와 통합해 개최되어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한·미 간 인적 교류 확대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 2) 중국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교역 대상국으로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일 뿐만 아니라 다양

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한·중 간 교역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3,0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수입·교역 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다. 이에 외교부는 양국 간 경제 등 분야에서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21년 9월 2일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년) 준비 점검,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 추진,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 등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분야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국 내 진출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11월 30일에는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중 간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정부는 문화 콘텐츠 교류의 활성화,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적극 당부했다. 이 회의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EU, EU 회원국 및 영국

우리나라와 EU 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총교역액은 1,29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EU는 우리나라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양측 간 3대 협정<sup>1)</sup>에 근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가고 있다. 외교부는 2021년 2월 9일 제17차 한·EU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교통, 개인정보보호,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한·EU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으로서 이 협정이 양자 간 경제·통상 관계 확대·심화에 기여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EU 간 연계성 협력을 구체화하고 G20, WTO 등 다자 차원의 공조와 함께 기후변화, 환경, 인권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2021년 4월 29일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원회, 6월 16일 제6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 12월 9일 제33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경제·

1) 한·EU 자유무역협정, 한·EU 기본협정,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협정



실질 협력 강화,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공급망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지역 협력과 다자주의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및 전환기간의 종료 후에도 양국 교역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한·영 FTA를 타결해 2021년 1월에 발효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 생산 공조 등 공급망 차원에서도 협력을 지속했다.

#### 4) 일본

2019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 등으로 초래된 양국 관계의 어려움은 2021년에도 계속되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조속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러한 양국 관계의 어려움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일 정상 통화(10.15), 외교장관회담(5.5, 9.23) 및 통화(1.9), 외교차관회담(7.20, 11.17) 등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각급에서 외교적 소통 노력을 지속하며, 경제협력 확대를 포함한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일 간 총 교역액은 대일 수출과 수입이 모두 확대되면서 2020년 711억 2,000만 달러에서 2021년 847억 달러로 19% 증가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며, 우리나라는 일본의 제4위 교역 대상국으로 서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 5) 아세안 및 인도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파트너로, 2021년에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모두 확대되어 총 교역액이 2020년 대비 23억 달러 증가한 1,766억 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신남방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캄보디아 FTA에 정식으로 서명(10.26)하고 한·필리핀 FTA(10.26)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12.15) 협상의 타결을 이뤘다.

또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지역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2021년 6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과 12월 RCEP 비준 등을 통해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해 나갔다.

아울러 외교부는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10.7)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한 무역·투자 정책 및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과 인도 양국은 한·인도 외교장관회담(9.21) 등을 통해 양국 관계 및 경제협력 관련 논의를 지속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교역액이 2020년 약 168억 달러에서 2021년 약 23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양국은 기존의 중점 투자 분야인 제조업 등을 넘어서서 보건의료, 디지털, 첨단기술, 환경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성장이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부문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수입규제 조치 대응

코로나19의 영향이 2021년 신규조사 개시 건수의 감소(2020년 38건→2021년 15건)로 이어지긴 했으나, 2015년 이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매년 200여 건을 유지하는 등 여전히 다수의 수입규제 조치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을 대상으로 누적된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총 215건(조사 중 33건 포함)으로 그중 반덤핑 조치가 161건, 상계관세 조치가 10건, 세이프가드 조치는 44건이었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정부대표단 파견, 정부 서한 전달, 정부입장서 제출, 고위급 면담 시 의견 개진,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 등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인도 스테인리스 냉연강관 반덤핑 규제 종료, 인도 SBR 상계관세 미부과, 필리핀 자동차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GCC 철강 세이프가드 미부과, 태국 알루미늄 포일 세이프가드 조사 종결, 남아공 형강 등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미부과, 인도 건식 실리카 반덤핑 미부과, 인도 고무노화방지제 반덤핑 미부과, 태국 아연도금철판 세이프가드 미부과 등의 성과를 얻었다.

또한 외교부는 미국, EU, 영국, 인도, 중국, 튀르키예 등 15개 재외공관에 현지 대응반을 설치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수입규제 동향 상시 모니터링, 주재국 규제당국 간 협의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확대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2021년 수입규제대책반의 주요 활동

##### • 수입규제 조사 절차 각 단계에서 업계 입장 수렴

- 수입규제 조사 개시 이전, 조사 개시, 예비 판정, 공청회 개최, 최종 판정 등 각 단계를 망라해 관련 업계 및 협회와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해 업계 입장을 파악하고 정부 측 대응 논리 개발
- ※ 관련 업계 및 관계부처와 대책회의 29회 실시

##### • 수입규제국과 정부 간 양자협의

- 주요 수입규제국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해 정부 간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업계 및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 요청
- ※ 수입규제대책반 및 재외공관 현지대응반 공청회 참석 3회, 조사당국 면담 13회 등

##### • 서한 전달 및 정부입장서 제출

- 주요 수입규제 현안에 대해 상대국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서한 전달 및 조사 대응을 위한 정부입장서 제출
- 양자 고위급 면담 시 수입규제와 관련한 정부 측 입장 제기
- ※ 정부 서한입장서·답변서 15건 발송

## 4. 경제협정 체결 및 개정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실질적 혜택 확대를 위한 경제협정 네트워크 확대·강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정부는 11개의 경제협정(항공·이중과세방지·사회보장·경제협력·과학기술·세관·해운)에 서명하고, 8개의 경제협정(투자보장·항공·이중과세방지·사회보장·세관)이 발효됐다.

2021년에는 투자보장협정 발효[짐바브웨(4.7)]로 우리나라 투자자 보호 및 상대국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고, 항공협정 서명[조지아(2.4), 파라과이(5.19), 우즈베키스탄(각서교환, 11.8)]과 발효[조지아(5.16), 핀란드 개정(5.28), 한·EU 수평적 항공협정(11.1)]를 통해 항공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우리나라 항공사의 해외 운항권을 확보했다.

또한 사회보장협정 발효[우루과이(11.1)]와 서명[베트남(12.14)]을 통해 우리나라 해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경감과 연금수급권 강화에 기여했고,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오스트리아 개정(6.14), 튀르키예 개정(10.22), 타지키스탄 개정(11.30) 등]과 발효[베트남 개정(1.20), 캄보디아(1.29)]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조세 부담 경감에 이바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협력협정에 서명[몬테네그로(11.5)]해 경제협력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고, 전통 우방국인 튀르키예와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10.22)해 호혜적 과학기술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그리고 스페인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서명(6.16) 및 발효(12.24)를 통해 세관 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그와 동시에 국제항로표지지구협약에 서명(4.15)해 항로표지의 표준화와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 운항·기술 교류에 기여했다.

## 5. 해외 진출 기업의 활동 지원

### 1)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

외교부는 정상외교, 외교장관회담, 경제공동위원회 등 주요 고위급 외교행사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은 우리 기업에 해외 수주 정보 제공, 입찰 활동 지원 등을 적극 실시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기업 해외 수주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28개 수주 유망 지역의 재외공관에 민관 협력체인 ‘해외건설 수주지원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은 현지 정부의 고위급 인사 간 네트워크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 11월에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21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의 국제 인프라 외교행사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됐음에도 총 11개국과의 고위급 간 면담, 47개 기관·다자은행과 해외 투자청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설명회, 일대일 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 2)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외교부는 2021년 9월 「재외공관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훈령 제166호)을 제정해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지원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외교부는 유엔 조달시장 진출 지원, 수출 홍보사업 수행, 각종 시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활동을 지속했다. 유엔 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유엔조달시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조달청·KOTRA와 공동으로 2021 공공조달 수출상담회(11.15~26)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 활동을 추진했다.

한편 외교부는 농식품의 소비 저변 확대와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4월 농식품부와 업무협약협정을 체결한 이래, 세계 각국 주재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 매년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수출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31개 재외공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각국의 경제 동향, 박람회·전시회 등 경제 행사 및 입찰 관련 정보 등을 국내 유관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현지 시장 정보 제공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기여했다.

## 3)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외교부는 현지 법률 상담 제공, 재외공관 주도의 기업지원 사업 진행, 각종 사례집 발간 등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21년 총 84개 공관에서 재외공관·주재기업 간 협의체인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운영해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기업과 소통했고, ‘기업지원 활동 강화 사업’을 통해 통관 애로, 인허가, 미수금 회수 등의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외교부는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지 노동법, 환경법, 세제, 통관 등의 각종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공관을 통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

고 그 외에도 법률 세미나 개최, 책자 발간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한편 중국, 동남아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지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업이 현지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CSR 활동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한편 주재국 정부와 언론에 우리 기업의 CSR 활동 내용을 홍보했다. 2021년에는 26개 공관이 우리 기업의 CSR 활동을 지원했다.

## 4)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외교부는 미국, 중국, 일본, 제네바, 벨기에 주재 공관을 비롯해 40개 재외공관을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으로 운영해 왔으며 특허청 산하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해외사무소와 협력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재외공관의 지식재산권 담당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협업해 중국 지역 지식재산권 담당관 회의(비대면)와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지식재산권 담당관 회의(11.26, 대면·비대면 혼합)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과 침해 대응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재외공관이 자체적으로 현지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했으며, 2021년에는 7개 공관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관련 세미나와 설명회 개최, 피해 현황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대응 방법과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 매뉴얼인 <재외공관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 증보판을 발간해 전 재외공관에 배포했다.

한편 KF 마스크의 해외 선호도 상승으로 KF 허위표시 마스크 해외 유통이 한국 마스크 수출과 브랜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자, 외교부는 재외공관, IP-DESK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KF 허위표시 마스크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

각 공관은 우리 기업에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를 안내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 제2절

지역 및 글로벌  
경제외교

## 1. 주요 7개국 협의체(G7)정상회의 참석

2021년 G7 정상회의는 다자주의의 약화, 팬데믹, 기후변화 등에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 권위주의의 확산으로 민주주의 국가 간 위기의식이 대두되는 가운데 G7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기대 속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을 초청, 2021년 6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대면으로 개최됐다.

G7 정상들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재건’을 주제로 경제 회복, 지정학, 외교정책(이상 G7 단독회의), 보건, 열린사회와 경제, 기후변화·환경(이상 G7+초청국 확대회의)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로 G7 정상선언문과 열린사회 성명, 장관 성명 등 8건의 결과문서가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G7 정상들은 2022년까지 10억 회분의 백신을 제공해 선진국·개도국 간 백신 격차를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별 목표 달성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2030년까지 세계 육지·해양의 30%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가의 공평한 백신 접근을 강조하고, 개도국 지원 공약(2022년까지 2억 달러 규모)을 통해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아울러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EU 등과의 양자회담 및 아스트라제네카사(社) CEO와 면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백신 개발과 생산, 수소경제, 디지털 분야, 녹색 산업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2. 이탈리아 로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국제경제협력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가 2008년 출범 이후 16번째로 2021년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2021년 G20 회의에서 정상들은 ‘사람(People), 환경(Planet), 번영(Prosperity)’이라는 대주제하에 ①국제경제·보건 ②기후변화·환경 ③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심으로 G20 분야별<sup>1)</sup> 의제와 관련해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G20 정상선언문과 20개 이슈별 장관선언문, 실무그룹문서를 포함해 총 50여 건의 결과문서가 채택됐다.

G20 정상들은 보건·국제경제·기후위기 등 당면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의 시급성과 선진국·개도국 간 공조 필요성의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의 차등적 충격을 고려한 개도국 지원, 식량안보, 백신의 공평한 배분, 여성 권익 강화 등의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국제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및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70% 백신 접종 목표 지지, 디지털세 합의 환영, 2021년 말까지 해외 비저감 석탄발전시설 신설에 공적금융 제공 폐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코백스 공여와 양자 공여를 통해 대개도국 백신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기후위기 해결의 시급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고 ‘국제 메탄 감축 서약’에도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대한 지속적 기후 재원 지원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포용적 회복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다.

##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발해 1993년 빌 클린턴(Bill Clinton) 당시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상 간 협의체로 격상된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실현을

1) 국제경제, 국제금융체제, 국제조세, 보건, 개발·식량,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양성평등, 인적이동, 고용·노동, 금융규제, 통상·투자, 인프라, 디지털 경제, 문화·관광, 반부패



추구하는 최고 정책 공조의 장으로서 위상을 구축했다.

2021년 11월 12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28차 APEC 정상회의(의장국: 뉴질랜드)에서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Recovering from Covid-19 to Build Prosperity for All Our People and Future Generations)’을 주제로 코로나19 여파의 회복과 역내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APEC 정상들은 2020년에 합의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이행계획인 ‘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 계획에는 역내 공동 번영과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 핵심 요소로 반영됐다. 또한 정상들은 2021 APEC 정상선언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통합 논의를 포함한 경제 회복,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백신 공급망 역할 수행, 보건 무상원조 확대 등 글로벌 보건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국내 탄소중립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간 이동 촉진 관련 APEC 보고서 발간을 주도하고, 역내 보건위기 대응과 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CEO 서밋을 통해 APEC 국가와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기술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활동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회원국 간 정책 조정 및 협력을 통한 세계 경제의 성장과 무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규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2021년 가입 25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OECD 내 활동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국내의 다양한 제도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왔으며,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해 왔다. 최근에는 OECD 내의 신흥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의 경제 발전상에 걸맞도록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각료이사회의 부의장국을 수임하며, 의장국 미국 및 공동부의장국 룩셈부르크와 함께 각료이사회 개최 준비에 참여했다. 10월 5~6일 파리에

서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공통의 가치: 녹색의 포용적 미래 구축(Shared Values: Building a Green and Inclusive Future)’을 주제로 각 회원국이 국제조세 문제, 탄소중립 달성 등 녹색 미래 구축, 디지털 전환 대응 등 포용적 미래 구축 논의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 속 포용적 회복, 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기민한 국제적 공조 대응을 강조하는 한편, 전 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백신 기여, 공적원조 확대 계획,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다.

## 5.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활동

UNESCAP(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지역 62개국이 회원국인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아태지역의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UNESCAP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2021년 4월 26~29일 제77차 UNESCAP 총회가 ‘아태지역 협력을 통한 위기로부터의 보다 나은 회복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태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디지털 협력, 녹색 회복 추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 6. 세계경제포럼(WEF) 참여

WEF(World Economic Forum)는 1971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출범한 글로벌 민간 포럼(일명 다보스포럼, Davos Forum)으로, 각국의 정계·재계·학계·언론계 지도자가 참석해 세계 경제·사회적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21년 1월 25~29일 화상으로 개최된 다보스 어젠다 주간은 ‘신뢰 재건을 위한 중요한 해(A Crucial Year to Rebuild Trust)’를 주제로 10여 개국 정상이 초청되어 국가별 특별회의가 진행됐다. 우리 정상은 1월 27일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

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과 같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동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설명했다.

## 7. 세계무역기구(WTO) 활동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협상의 결과로 1995년 설립된 이래 국제통상규범 협상과 이행, 분쟁 해결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이 되어 왔으나 최근 반세계화 정서와 보호주의의 대두에 따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WTO는 새로운 무역규범 도출을 위한 협상, 규범의 이행과 모니터링, 분쟁의 해결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8년부터 WTO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상소기구 공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 외에도 수산보조금과 전자상거래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WTO 차원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우리나라는 71번째 GATT 체약국이자 WTO 설립부터 함께한 원회원국으로서 WTO 개혁에서 활발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분쟁 해결 기능을 개선하고 상소기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회원국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자상거래, 수산보조금, 투자원활화 등 협상 분야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협상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2020년 11월 출범한 복수국 간 협의체인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에서도 제안서 논의를 주도하며 이 협의체의 각료성명 발표(2020.12.15)에도 기여했다. 한편 WTO 외연 확장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을 위한 작업반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 8.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활동

UNCTA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개도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 증진을 위해 1964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와 개도국 대상 기술협력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6월 21일~7월 2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결과, 우리나라는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서방 고소득 국가)로 이동했다.

10월 3~7일 제15차 UNCTAD 총회가 ‘불평등과 취약성으로부터 모두를 위한 번영을 향해’라는 주제하에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10월 5일 사전 녹화된 국가별 연설을 통해 복원력 있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정부의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 제3절

기후·환경외교 및  
에너지·자원 협력

## 1. 기후변화 외교

## 1) 국제 기후변화 대응 선도

2021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1년 9월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계기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추가로 갱신하겠다고 발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12월 유엔에 제출했다.

## 2) 기후협상 기여

2021년에는 COP26가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했다. 또한 파리협정 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해 개도국을 위한 선진국의 적응 관련 기후재원 기여액을 2배 이상 증액하는 데 합의했으며,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규칙의 잔여 쟁점을 합의하기에 이르러 제6조(국제탄소시장체계) 이행규칙 등을 담은 '글래스고 기후 합의'를 도출했다.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체계), 재원, 적응, 투명성 등 90여 개에 달하는 의제 협상에 참여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제별 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또한 우리가 제안한 '청년기후서밋'의 정례화 개최 구상이 COP26 결과문서인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 '장래 COP 의장국에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토록 요청'하는 문안으로 반영되었다. 정부 대표단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면서 협상에 참여했으며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파리협정 이행준수위원회,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이사회 등에 정부·민간 전문가가 진출했다.

## 3) 국제협력 확대

정부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의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한 다자 차원의 논의에 참여하면서 양자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 간 포괄적 협력 기반 마련과 국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 등을 위해 양자 기후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5월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한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아세안과의 기후변화·환경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2021년 9월 16일 화상으로 개최해 대기오염, 해양환경, 산림, 기후변화 분야의 정책·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 2. 녹색지속가능발전 외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녹색전환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 그린뉴딜 발표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경험

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1)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우리나라는 녹색경제 분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에 참여하고 있다. P4G는 녹색경제 관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5대 중점 분야(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서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로 2017년 9월 유엔총회에서 덴마크 주도로 공식 출범했다. 2021년 12월 기준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2개국 정부와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경제포럼(WEF), 세계자원연구소(WRI),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기구·협의체 5곳과 민간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최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제2차 P4G 정상회의)는 2021년 5월 30~3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이란 주제로 열린 제2차 P4G 정상회의에는 세계 각지에서 총 67명의 지도자(정상급 인사 46명, 국제기구 수장 21명)가 참석했다.

제2차 P4G 정상회의는 결과문서로 채택한 서울선언문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균형 있는 참여를 이끌어 냈다. 서울선언문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파리협정 이행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실천 선언, 석탄 해외금융지원 철폐, 시민사회와 기업 및 미래세대의 역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계획, 2025년까지 그린 ODA 비중 대폭 확대, P4G 신규 공여(400만 달러), GGGI 공여 확대(500만 달러) 등 녹색전환을 위한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 공약도 발표했다.

나아가 정부는 제2차 P4G 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 정상회의 전·현·차기 개최국인 덴마크, 우리나라, 콜롬비아로 구성된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해 협력을 강화하고, P4G의 장직을 수입해 P4G 활동에 참여했다.

## 2)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녹색전환 협력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국제기구인 GGGI의 설립을 주도했다. GGGI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의 건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지원과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미국국제개발처, 영국 국제개발부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국제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2021년까지 GGGI 회원국이 38개에서 41개로 확대되었으며, 아랍에미리트(UAE)의 2022~2023년간 신규 공여(300만 달러) 공약, 도하 GGGI 사무소 개설 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한 정부는 2021년 5월 개최된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GGGI에 500만 달러 규모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기로 공약해 향후 개도국의 맞춤형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했다.

또한 총회·이사회 부의장국(2021~2022년 임기), 상임이사국 역할 수입을 바탕으로 GGGI 운영프로그램 소위원회(Management and Program Sub-Committee), 총회·이사회 참여 등 GGGI의 운영 방향성과 전략 수립 및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했고, 2021년 10월 개최된 GGGI 제10차 총회와 제14차 이사회에서는 반기문 의장의 연임이 확정되었다. 우리나라는 GGGI와 협력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 2050년 탄소중립 목표, P4G 정상회의 등을 소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기후재원 조성 등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GCF는 2015년 이후 2021년 12월까지 총 190개 이상의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승인(총 사업 규모 370억 달러)했으며, 2021년에는 제28차(3.16~19), 제29차(6.28~7.1), 제30차(10.4~7) 이사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GCF 사무국 소재국이자 제4기 이사국(2022~2024년)으로서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참여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부가 위치한 CTCN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의 이행기구로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개도국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협력 선도와 국내 기후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 2021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환경계획 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2022년 CTCN 협력연락사무소가 우리나라(인천 송도)에 설립된다.



### 3) 양자협력(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우리나라는 2012년 10월 덴마크와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을 체결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녹색기술 증진과 전 지구적 녹색성장을 위해 각료급 녹색성장 동맹회의를 매년 개최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각료급 회의가 순연되었으나, 양국 정상은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5월 30일 한·덴마크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21년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 출범 10주년을 기념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에서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Green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했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녹색성장동맹 회의를 통해 녹색산업, 에너지전환, 친환경 선박·해운, 순환경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민간 분야의 협력을 촉진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로 출범한 GGGI와 덴마크 주도로 출범한 P4G 등 녹색성장 의제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 더 나아가 양국은 녹색성장동맹 회의를 통해 바이오에너지, 친환경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MOU를 체결했다.

## 3. 환경협력 강화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미세먼지, 생물다양성과 같이 초국경적 이슈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생물다양성 보전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 등 주요 국제 이슈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 1) 동북아지역 환경 협력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9.7)’은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채택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로 제2회 푸른 하늘의 날 정부기념식이 2021년 9월 7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외교부는 제2회 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 각국 전문가가 참석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상호작용,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 대응 협력 현

황 및 강화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차원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므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양자협력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등 지역 협의체 논의에도 참여했다. 아울러 NEASPEC의 틀 안에서 설립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North-East Asian Clean Air Partnership)은 역내 대기오염 공동 대응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로, 정부는 2021년에 NEASPEC 국가연락관(NFP) 회의 및 NEACAP 과학정책위원회(SPC) 등에 참여해 ‘2021-2025 NEACAP 작업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2) 글로벌 환경 협력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는 대기, 생태계, 해양, 유해폐기물과 화학물질, 산림과 토지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산재했으며 각 분야에서 160건 이상의 환경 관련 국제협약이 유엔, OECD 등의 지원 아래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화학물질과 유해폐기물의 국제적 관리, 해양환경 보전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 논의와 대응에 동참해 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다자환경회의에 참여했다. 2021년 진행된 제5차 유엔환경총회 제1부(2.22~23),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1부(10.11~15), 부속기구 온라인회의(5.3~6.9), 제15차 바젤협약과 제10차 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온라인 당사국총회 제1부(7.26~30) 등 생물다양성·화학물질·폐기물 관련 국제 환경 협력 논의에 참여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3가지 생물다양성 보전 이니셔티브인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Leader's Pledge for Nature), 생물다양성보호지역 확대 우호국 연합(High Ambition Coalition for Nature and People), 세계 해양 연합(Global Ocean Alliance)에 가입해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는 데 동참했다.

정부는 국제사회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해양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에도 기여했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된 서울선언문을 통해 해양플라스틱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2021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장관급 회의(2021.9.1~2)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해양플라스틱 저감 노력을 설명하고 유엔 차원의 플라스틱 대응 논의에 협력할 것을 공약했다.

### 3)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분 대응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파손된 원자로 건물 내로 유입된 빗물과 지하수 등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되면서 후쿠시마원전에서는 원전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측은 그간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원전 오염수를 보관해 왔으나 1,000여 개의 저장탱크 용량(약 137만 톤)이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원전 오염수 처분 가능성이 대두되어 왔다.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 측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방출 검토를 시사한 이후,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이 사안에 대응해 왔다. 또한 일본 정부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 이해당사자들과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관해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해 왔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정화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2023년 봄 무렵부터 해상에 배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방침 발표 직후 외교부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 후에도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5.5) 등 일본과 양자·다자 접촉 계기에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방침 결정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한·일 외교당국 간 원전 오염수 관련 소통을 지속했다. 12월 3일에는 후쿠시마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이 발표한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의 방사선 영향평가 보고서 관련 한·일 실무급 브리핑 세션을 개최했다.

2021년 12월 21일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을 위한 기술적 이행계획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하고 인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특히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추진 중인 IAEA와 긴밀히 소통하며, IAEA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분의 전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IAEA는 2021년 7월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 전문가 11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우리 측 전문가도 국제 전문가의 일원으로서 이 태스크포스에 포함됐다. 나아가 11월에는 전 세계 환경방사능 분석실험실 네트워크(ALMERA: Analytical Laboratories for the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Radioactivity)에 소속된 우리나라 연구소가 IAEA와 일본이 공동 수행하는 후쿠시마 주변 해양환경 모니터링 관련 분석실험실 간 상호비교 사업(ILC: Inter-Laboratory Comparisons)에 참여하게 됐다.

## 4. 에너지·자원 협력

### 1) 에너지 관련 국제사회 논의 참여

외교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UNESCAP 등 국제기구와 G20, APEC 같은 국제 다자협의체의 에너지 관련 논의에 참여해 왔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노력에 동참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를 모색했다. IRENA 이사국으로서 2021년 1월 제11차 총회 및 제21차(5월), 제22차(11월) 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국들과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및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외교부는 2021년 3월 제7차 베를린 에너지전환 대화, 9월 유엔 2021 고위급 에너지 대화에 참석해 국제경제의 그린 회복(Green Recovery)을 위한 에너지전환 노력, 그린뉴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녹색기후기금 기여금 증액 등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

## 2) 주요국과의 에너지안보 외교

외교부는 주요 국가와 에너지안보 정책, 에너지 공급망, 에너지 분야 제3국 및 다자협력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전개했다. 2021년 미국과 한·미 LNG 회의(1.14, 화상), 한·미 차관보급 에너지 대화(4.7, 화상), 한·미 전력 분야 탄소중립 회의(7.2, 화상), 한·미 에너지안보대화(9.30, 워싱턴DC)를 개최해 양국 간 에너지 각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고, 해소를 위한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정부는 11월 우리 에너지 당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 영국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과 함께 전략비축유(SPR: Strategic Petroleum Reserves) 공동 방출에 동참할 것을 발표했다.

## 3) 에너지외교 인프라를 통한 민간 에너지·자원 협력

외교부는 에너지전환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희소금속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3월 우리 희소금속·배터리 업계 해외 진출 지원 간담회와 4월 우리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해외 진출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 간담회에는 관련 민간 기업, 공기업,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외교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9월 30일에는 국제 수소에너지 콘퍼런스를 개최해 IEA 및 미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 인사들과 수소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국의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 정책 기술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외교부는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을 지정하고 에너지·인프라 전문관을 채용해 에너지 외교 인프라를 구축·관리하고 있다. 46개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공관은 에너지·자원 행사 개최,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현지 동향 수집, 입찰 정보 파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각 공관에서 수집한 최신 에너지·자원 정보를 ‘일일 국제에너지자원동향’, ‘특집 국제에너지자원동향’, ‘국제에너지자원 입찰정보’로 작성해 제공했다.

## 4) 물 관련 국제사회 논의 참여 및 물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OECD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WGI) 회의(1.18~20, 화상), 스톡홀름 국제물주간(8.23~27, 화상) 등 국제사회의 물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또한 아시아 내 물 이슈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나라가 물 분야 리더십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포럼을 계기로 ‘아시아 물 이슈 확산과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아시아 연대’ 세션(6.24, 제주)을 개최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리나라 물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상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우선 러시아를 대상으로 물 산업 진출 사업상담회(2.24~25, 화상)를 개최해 물 산업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및 러시아 기업 14개사가 참여해 바이어 수요 매칭을 통해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러시아 상하수도협회와 모스크바 상하수도공사 등 현지 기관에 우리 기업을 소개하는 특별 간담회도 개최했다. 6월에는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물 산업 협력간담회 및 사업상담회(6.7, 대면·비대면 혼합)를 개최해 한·카자흐 물 기업 28개사의 기업 매칭을 진행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민간 기업이 현지에 직접 방문해 외국 기업을 접촉할 수 없음을 감안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모스크바, 알마티 무역관과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업체와 협력 가능한 현지 업체를 발굴하고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

## 제4절

과학기술외교 및  
북극 협력

## 1. 과학기술외교

외교부는 2019년 10월 발표한 ‘과학기술외교전략’ 이행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 오던 과학기술 거점공관을 개편·확대하고, 거점공관의 역할을 과학기술 선도국의 과학기술 관련 동향 파악과 과학기술 협력 의제의 발굴·추진 등으로 강화했다. 2021년 12월에는 과학기술 거점공관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공관별 과학기술외교 중점 추진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과학기술 주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과학기술외교 추진 방향의 정책적 권고안을 마련하고자 2021년 6월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를 발족했으며 과학기술외교정책, 데이터·정보통신·인공지능, 탄소중립, 우주 등 4개 분과에 각 5명씩 총 20명의 전문가를 임명했다.

또한 외교부는 주요 과학기술 이슈와 관련해 국내외 관계자들 간 소통 및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과학기술 관련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협력대사직을 신설했다.

한편 과학기술외교의 본격화 기반 강화 차원에서 과학기술외교의 의제화를 통한 국내외 관계자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술외교 동향과 한국의 기술외교 발전 방안을 주제로 ‘2021 글로벌기술외교포럼’을 개최했다. 피터 글럭먼(Peter Gluckman) 국제과학자문위원회 회장, 안 마리 엔토프트 라르센(Ann Marie Engtoft Larsen) 덴마크 외교부 기술대사 등을 포함한 국내외 과학기술외교 분야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한 이 포럼에

서 참석자들은 미·중 갈등하에서 기술의 국제정치화 현상, 신기술의 발전과 외교적 함의를 살펴보고 아세안 국가와 기술외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2021년 미국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인공지능, 5G·6G 등 정보통신, 양자기술(Quantum), 우주 등 신·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 국무부가 개최한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포럼에 함께 참여해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심화 방안을 모색했다.

## 2. 우주외교

정부는 2018년 2월 수립한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종 지향점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했다. 특히 미국 등 우주개발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우주개발협력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주요 관계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갔다.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우주외교를 추진한 결과 2021년 정부는 우주 분야에서 외교적 진전을 이루었다. 특히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 분야 합의 사항 후속조치로 미국 주도의 아르테미스 약정과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유엔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ICG: UN International Committee o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에 가입했다.

또한 외교부는 2021년 8월 12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주외교 전망’을 주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과 2021 우주외교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우주외교포럼에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우주개발국가와 유엔외기권사무소(UNOOSA: United Nations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를 포함한 국내외 우주외교 관련 전문가, 주한대사관 담당관이 참석해 외교적 관점에서 우주개발 관련 탐사, 규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관련 현황을 논의하고 주요국 간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 3. 북극권과 국제협력 강화

정부는 2013년 12월 ‘북극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수립 이후 2018년 7월 제2차 북극



정책 기본계획인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2018-2022년)’을 채택하고 북극권 국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2021년 10월 남극과 북극에서의 다양한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극지활동법」이 시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는 ‘2050 북극활동 전략’이 발표되었다.

또한 정부는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이후 북극이사회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를 위해 활동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북극이사회 협의에 참여했다. 제12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5.20,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 두 차례의 북극이사회 고위관료 회의(3.15~18, 12.1~2)와 6개 워킹그룹회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들을 위한 별도 회의(4.21, 화상)에 참석해 북극의 기후변화 대응, 북극 해운과 항로, 북극 과학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방지협정(CAOFA)의 당사국으로 북극권 공해상 상업적 조업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 거버넌스 확립에도 기여했다. CAOFA 협정은 중앙 북극 공해 지역의 해양생물자원 보존을 위해 한시적인 어업 방지, 동·생물 자원에 대한 공동 과학연구·모니터링 등을 통한 향후 북극해 공해상의 지역수산기구·약정 발족을 검토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북극이사회 회원국이 아닌 비북극권 국가가 참여한 최초의 북극 관련 지역다자협정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북극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0월 CAOFA 협정문에 서명했으며, 각 서명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되어 이 협정은 2021년 6월 발효되었다. 정부는 제1차 CAOFA 당사국총회 개최를 유치하고, 당사국총회 절차 규칙 회의 등 관련 준비 회의에도 참석하는 등 북극권 리더십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그 밖의 북극 관련 주요 고위급 국제포럼에도 참석해 북극권 의제 동향을 파악하고 북극권 국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2021년 북극서클총회(10.14~17,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는 외교부 제2차관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는 등 북극 관련 다자 논의에 참여했다.

또한 북극이사회 설립 25주년을 기념해 ‘2021 지속가능한 북극 포럼’을 개최(11.10, 대면·비대면 혼합)해 북극외교 리더십을 제고했다. 포럼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의 정부 대표가 참여했으며 동 포럼을 계기로 외교부 제2차관은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

# 06.

CHAPTER.

---

## 다자외교 및 개발협력

---

146

**제1절**

국제 평화·안보 증진 및  
인권·민주주의 기여 노력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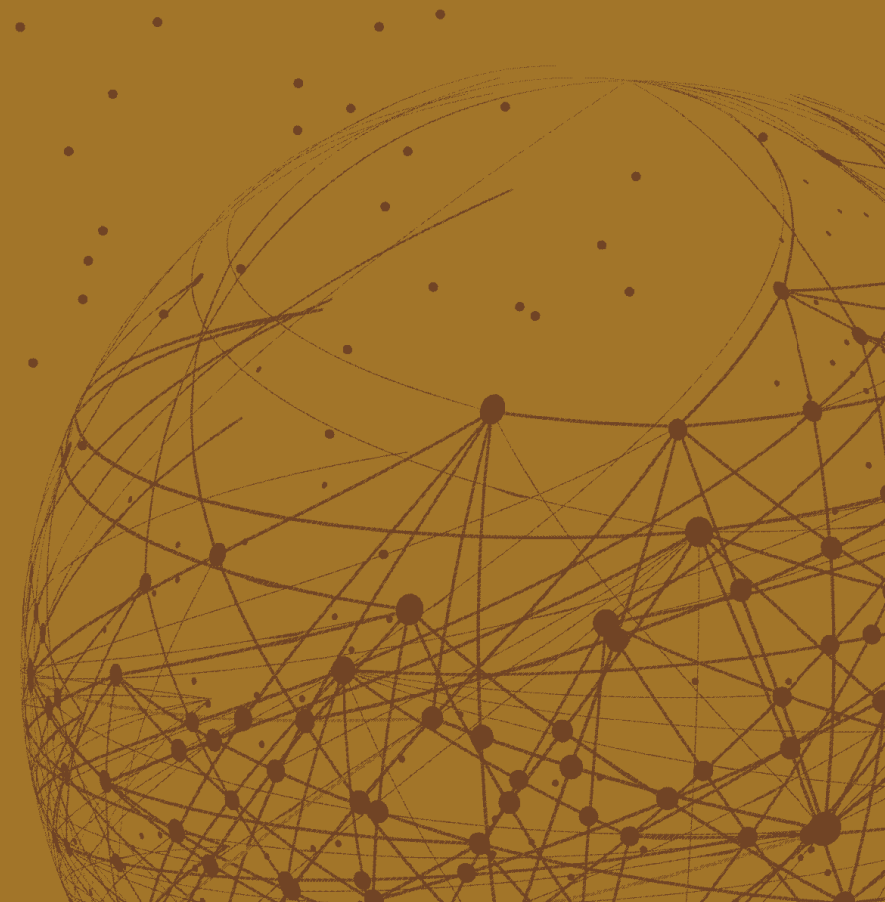
**제2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

171

**제3절**

외교관계 및 대외활동의  
법적 기반 확충



## 제1절

국제 평화·안보 증진 및  
인권·민주주의 기여 노력

## 1. 대유엔 외교 활동

## 1)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참석

우리 정부는 2021년 9월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한 유엔의 역할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포용적 회복,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기후위기 대응 등 전 지구적 과제 해결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코백스 공여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에 참여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발표와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하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다. 아울러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UN Peacekeeping Ministerial)’를 한국에서 주최하고 유엔의 분쟁 예방·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확대하는 한편,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 2) 유엔 평화 활동 참여

## (1) 유엔 평화유지 활동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공병대대(상륙수부대)를 파견한 이래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을 위해 2021년 12월 기준 병력 647명을 파견하고 있는 주요 병력 공여국이다. 2021년 12월에는 유엔레바논임무단(UNI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에 소속된 동명부대와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에 소속된 한빛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 유엔 평화유지 활동 병력 파견 현황

(2021년 12월 기준 5개 임무단, 647명 파견)

구분			인원
군	부대 단위	UNIFIL(유엔레바논임무단) 동명부대	352
		UNMISS(남수단임무단) 한빛부대	268
	개인 단위	UNIFIL(유엔레바논임무단)	4
		UNMISS(남수단임무단)	8
		UNMOGIP(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8
경찰	개인 단위	MINURSO(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3
		UNMISS(남수단임무단)	3
소계		UNISFA(수단 아비예이)	1
			647

또한 2021년 12월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평화유지 활동 예산 의무분담률이 2.574%로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 분담금 기준 세계 9위 재정 공여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병력과 재정 기여에 더해 평화유지 활동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2월 유엔 평화유지 활동 분야 유일의 장관급 정례 회의체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12월 7~8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통해 평화유지 활동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결집하고, PKO 기술 및 의료역량 강화 관련 서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국제 평화 및 안보 분야 관련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 (2) 유엔 평화구축 활동

안토니우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발생 이후뿐 아니라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 회복과 재건 과정에서 법치 확립,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화해를 위한 대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평화의 지속화(Sustaining Peace)를 추구하는 평화구축 의제를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는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2019~2020년 및 2021~2022년 위원국으로서 유엔의 평화구축 노력에 동참했다. 유엔 평화구축위원회는 평화구축 활동에 관해 유엔안보리, 유엔총회,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기관이다.

## 2.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정부는 청년과 전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근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유엔자원봉사단(UNV: UN Volunteers)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유엔사무국,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근무할 JPO 20명이 선발되었다.

또한 정부는 전문 분야 경력을 갖춘 인재에게 유엔 현장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는 UNV 전문봉사단 파견 사업과 청년 인재에게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UNV 청년봉사단 파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UNV 전문봉사단 20명과 UNV 청년봉사단 30명 선발이 추진되었다.

그 외에도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국제기구인사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기구 인사담당자를 초청해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에는 10개 주요 국제기구 인사담당관을 초청해 제14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해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 3. 국제기구 분담금법 제정

우리나라가 납부하는 국제기구 분담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증대됐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17년 국제기구 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를 신설해 매년 부처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공유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이재정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통합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공포되었으며, 외교부는 법률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제기구 분담금 관련 자료의 제출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다.

이 법률과 시행령 제정으로 외교부 소속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가 신설돼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가 수립되었다.

## 4. 인권·민주주의에 기여

### 1)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동참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으며, 정부는 동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2021년 3월 제46차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는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 영향하 북한인권 상황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자 수입과 인도지원기구 활동을 허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제한조치 관련 국경에서의 무력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또한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지속적 인권 침해 혐의를 우려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되었다.

11월 제76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 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됐으며, 이 결의에는 코로나19가 북한인권 상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제46차 인권이사회 결의에 새로 포함된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문안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제46차 인권이사회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상호 대화에 참여했다.

## 2)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활동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인권 논의에 참여했다. 2021년 인권이사회에서는 총 80개의 결의와 44개 결정이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그중 31개의 국별·주제별 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해 인권상황과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47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New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human rights)' 결의가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속에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도 전체적으로 조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남수단, 동티모르 등 42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심의했다. 정부는 심의 대상 회원국의 국내 인권 상황과 국제인권규범 등을 고려해 인권 증진을 위한 건설적 권고를 제시했다.

2021년 제76차 유엔총회 3위원회는 북한, 미얀마, 이란, 시리아, 크림리아 5개의 국별 인권 결의를 포함해 여성, 아동, 난민 보호 등 인권·사회 분야에서 총 63개의 결의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인권최고대표, 인권이사회 의장, 유엔난민최고대표,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상호대화 등에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 3)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노력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낸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해 왔다. 우리 정당은 '권위주의 방어, 부패 척결, 인권 존중 증진'을 의제로 2021년 12월 화상으로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동체(Community of Democracies) 운영이사회

(Governing Council) 이사국이자 집행위원국(2019~2022년 임기)으로서 활동했다. 특히 정부는 4월 제33차 민주주의 공동체 운영이사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과 함께 팬데믹 대응과 재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인권이사회에 상정되어 2013년 이래 국제사회의 지지하에 컨센서스로 채택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의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돌아보는 부대행사 등을 2021년 9월 제48차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개최했다.

## 4) 글로벌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2021년은 우리나라 유엔 가입 30주년과 난민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은 해였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고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 사회의 난민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글로벌 난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했다.

정부는 2021년 12월 난민글로벌콤팩트(GCR: Global Compact on Refugees) 이행 점검을 위한 제1차 고위급 회의에서 난민 수용국 부담 완화, 안전하고 존엄성 있는 귀환을 위한 난민출신국 조건 개선, 제3국 접근성 확대, 난민의 자립성 향상 등 GCR의 각 목표에 따른 정부의 이행 노력 및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난민과 수용국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협력과 연대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6년째 UNHCR에 2,000만 달러 이상을 공여한 국가의 모임인 'UNHCR 2,000만 달러 공여국 클럽'의 일원으로 참여해 80여 개 공여국 중 매년 상위 20% 수준의 기여를 유지 중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도 2021년에 전체 민간 기여 중 4위를 기록했다.

## 5) 분쟁 지역 성폭력 철폐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

정부는 분쟁하 성폭력 철폐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18년 출범시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제3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했다.

회의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 영국 국무장, 캐나다 여성평화안보 대사, 아세안 평화화

해연구소장 등 연사 20여 명이 참여하고 460여 명이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해 아시아 지역의 분쟁하 성폭력 현황과 평화구축, 화해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2021 국제 청년 영상 공모전’에서는 분쟁하 성폭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영상 작품이 상영됐다. 또한 정부는 회의 결과문서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 6) 취약계층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외교적 활동

2021년에도 정부는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속했다. 2021년 6월 제14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므타(MIKTA) 공동발언, 장애인우호그룹 공동발언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하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대응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중 하나인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에 관해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규정을 삭제해 이행했다.

## 7) 국내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 등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2021년 우리나라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 특별보고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초법적·악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 특별보고관,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의 정보 요청과 질의에 관련 정보와 답변을 제공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와 관련해 2020년 제75차 유엔총회 3위원회 사형제도 모라토리엄 결의에 찬성했으며, 사형집행 결정 과정의 투명성 보장과 사형수 및 그 가족의 기본적 권리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1년 인권이사회의 사형제도 문제 결의에도 찬성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 마약위원회의 2022~2025년 임기의 위원국으로 당선됐으며,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우리나라 인사가 2022~2026년 임기의 위원으로 재진출했다.

## 5. 국제 원자력·군축·비확산 체제 논의에 주도적 참여

### 1) 국제 원자력·군축·비확산 체제 강화 노력 참여

#### (1) 국제 원자력·군축·비확산 체제 논의 주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원자력·군축·비확산 관련 국제 협력체와 국제기구의 의장을 수임하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해 왔다. 대표적으로 2021년 9월 IAEA 이사회 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원자력 분야 핵심 이슈에 관한 정부의 관여를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2018~2021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군축비확산 회기간회의 공동의장국, 2019~2021년 핵군축환경조성(CEND: Creating an Environment for Nuclear Disarmament) 실무그룹, 2019~2022년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효과적 조약 이행 실무그룹(WGETI: Working Group on Effective Treaty Implementation) 의장국을 수임했다.

정부는 우주 안보, 자율살상무기 등 신형 도전과 관련한 국제 군축·비확산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먼저 2021년 제76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우주 안보 유사 입장국(영국, 미국 등 9개국) 공조하에 제2차 ‘우주에서의 책임 있는 행위에 관한 규범, 규칙, 원칙을 통한 우주 위협 감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또한 자율살상무기 정부전문가그룹과 외기관군비경쟁방지 정부전문가그룹(GGE: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등 특정 군축 주제에 관한 핵심 국가로 구성된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국제사회의 관련 규범 형성에 기여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1년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청년과 군축, 비확산’ 결의를 재상정해 채택한 이후, 유엔사무총장 군축 의제 중 청년 분야를 지속적으로 주도했다. 이 결의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교부는 국내외 청년 대상 ‘제1차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6.29~30)’을 개최한 데 이어, 유엔군축연구소(UNIDIR)와 공동으로 청년과 군축 분야 4개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주최 이래 국제 핵안보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2022년부터 방사능·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체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대응 및 완화 실무그룹(RMWG)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었고, 2021년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6.24~25)를 계기로 원전 수출 시 추가의정서(AP) 발효 수출 조건화 정책을 공식화 했다. 또한 2022년 3월 개정핵물질방호협약(A/CPPNM) 평가회의를

앞두고, 이 협약에 관한 아시아 국가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과 함께 ‘아세안 핵안보 국제워크숍(3.23~24)’을 개최했다.

## (2) 국제사회와 공조

정부는 유엔 및 다자 군축·비확산 회의체에 적극 참여해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2021년 군축 분야 유일의 다자협상 포럼인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2월), 주요 핵비보유국 간 핵군축에 관한 공동 입장을 모색하는 스톡홀름 이니셔티브(1월, 7월) 등 고위급 회의에 장·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우리 정부 입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하에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의 중요성과 이에 관한 우리 정부의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원자력 응용기술을 이용한 감염병 대응 등 IAEA의 역할 확대 노력에 발맞추어, IAEA가 동물원성 감염병 통합 대응을 위해 출범한 사업(ZODIAC: Zoonotic Disease Integrated Action)에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100만 달러를 공여하고, ZODIAC 프로젝트 산하 공동연구사업, 기술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해 왔다. 또한 IAEA 주관의 핵안보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해 IAEA 핵안보훈련센터 건설에 100만 유로 지원을 결정(2월)하고, 공여국 우호국 그룹(Friends of Center)에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WA),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AG) 등 4대 다자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서 민감 품목과 기술의 국제적 확산 방지도 기여하고 있다.

## (3)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및 전문가패널 등과 공조함과 동시에 국내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부처회의 개최를 통해 관련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다양한 양자·다자협의를 통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에도 참여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북한제재위원회 및 주요 위원국들과 소통·협력했다. 북한제재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자연재해 등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위해서는 제재 면제를 신속히 승인했다.

## 2) 국제 원자력·군축·비확산 네트워크 강화 및 아웃리치 활동

정부는 2021년 유엔군축실(UNODA: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 주관으로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11.11~12)’를 대면으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군축·비확산 외교의 과거와 미래, 핵비확산조약(NPT) 발효 50주년과 핵 비확산 체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지역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유엔 군축실, 유엔군축연구소, EU 및 학계 인사들과 별도 면담을 통해 이 회의를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

다자 군축·비확산 외교활동 강화 노력과 함께 정부는 영국(3.30), EU(3.31, 11.9), 독일(4.22), 프랑스(5.4), 미국(8.9, 10.26) 등 주요국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 국제 현안 공조를 위해 양자 네트워크를 강화·확충했다. 특별히 외교부는 점증하는 우주안보 위협에 관한 한·미 양국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제4차 한·미 우주정책대화(8월)를 개최했다.

정부는 2013년 이래 매년 IAEA와 고위급 정책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으며, 2021년도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IAEA 안전조치 담당 사무차장을 수석대표로 제10차 회의(11.12, 서울)를 대면 개최해 양측 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IAEA 핵안보 협의회를 신설(2월)하고 제1차 협의회를 개최(11.15, 빈)해 양측 간 핵 안보 분야의 우선순위를 공유했다.

# 6. 국제안보 협력 강화

## 1) 다자 안보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국제안보 논의 참여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다자안보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관련 논의에 참여해 국제안보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의 국제사회 이해를 제고해 왔다.



### (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NATO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외교부 제1차관이 벨기에 NATO 본부를 방문해 미르체아 제오아나(Mircea Geoana) NATO 사무차장과 면담하고 한·NATO 파트너십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

### (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우리나라는 정치·군사안보, 경제·환경안보, 인간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에 기초한 유럽·대서양 안보협력기구인 OSCE의 아시아 협력동반자국으로서 사이버안보,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OSCE-아시아협력동반자그룹(APCG: Asian Partners for Co-operation Group) 회의(9.3)와 제28차 OSCE 각료이사회(12.2~3)에 참석해 한반도 정세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을 설명하고 OSCE 회원국과 협력동반자국의 이해를 증진했다.

또한 OSCE와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OSCE와 공동으로 제3차 한·OSCE 사이버안보 콘퍼런스(6.22~23)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아시아 및 유럽 지역 정부, 국제기구 관계자와 관련 학계, 업계 인사 등이 참석해 사이버안보 분야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사이버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2) 세계신안보포럼

국제사회는 새로운 감염병 출현, 기후변화, 재난·재해, 사이버위협 등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 위협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상호작용하면서 더욱 복잡한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의지를 구현하고자 2021년 ‘세계신안보포럼’을 창설했다. 세계신안보포럼은 ‘포용적이고 통합적이며 투명한’ 국제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신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발전적인 협력 방향을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11.16~17, 대면·비대면 혼합)에는 미국, 중국, 러

시아, 프랑스 등 주요국 정부 고위 인사뿐 아니라 국제기구, 학계, 기업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해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신기술안보 등 최근 국제사회의 신안보 현안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 3)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사이버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이버위협은 국제평화안보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도전으로 부상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와 더불어 사이버공간에서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위협에 따른 피해의 확산 속도도 함께 증가했고,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져 왔다.

### (1) 다자 차원의 사이버안보 협력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다자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2021년에는 신규 출범한 유엔총회 1위원회 산하 정보안보 개방형 워킹그룹(OEWG: Open-Ended Working Group, 2021~2025)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인도네시아·호주·러시아와 함께 ARF의 ICT 안보 회기간회의(ISM: Inter-Sessional Meeting)의 공동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사이버안보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

### (2) 양자 및 지역 차원의 사이버안보 협력

정부는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21년에는 네덜란드와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호주와는 기존 양자 협의회의 논의 범위를 사이버·핵심기술로 확대해 양자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및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정부는 2021년 9월 개최된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계기로 외교장관 간 ‘사이버·핵심기술 MOU’를 체결했다.



2021년에는 동남아 국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의제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동남아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21년 ARF ICT 안보 회기간회의(ISM) 공동의장국을 수입해 역내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 및 신뢰구축조치(CBM) 발전에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영국 주도로 창설된 ‘사이버 억지·대응 유사입장그룹회의’에 미국, 호주, 일본, EU, 싱가포르, 멕시코 등과 함께 참여해 사이버위협 억지·대응을 위한 다양한 공조 방안 모색에 기여해 왔다. 특히 2021년 10월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의 참여국으로서, 최근 중요한 사이버위협으로 부상한 랜섬웨어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 중이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도미니카공화국, 케냐 등 30여 개국이 참여해 네트워크 안보와 회복력, 불법금융 대응, 랜섬웨어 네트워크 차단, 외교적 대응 등 보다 구체적인 랜섬웨어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4) 국제 테러 및 해적 대응

정부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리즘은 근절돼야 하며, 어떤 형태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방침하에 국제사회 대테러 공조에 동참하고 있다.

##### (1) 대테러 협력

정부는 유엔 대테러실(OCT: Office of Counter-Terrorism)과 함께 유엔의 대테러 활동 및 회원국의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교류의 제한을 감안해 유엔의 e플랫폼을 발족하고 대테러 정보, 커뮤니티 제공 등을 통해 유엔 회원국의 종합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국경 관리와 대테러 경험이 2021년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유엔 전 회원국과 이를 공유할 모범사례집을 작성 중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연중 세 차례(2월, 6월, 10월) 총회에 참여했다.

##### (2) 해적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을 퇴치하고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에도 청해부대를 파견했다. 청해부대는 연합해군사령부(CMF: Combined Maritime Forces)와 EU 연합해군의 해적 퇴치 작전에 참여하는 등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했다.

외교부는 2021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서·중부 아프리카 해상보안 신탁기금에 20만 달러를 기여했다. 이 기여금은 해적 사건이 빈발하는 서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해적에게 대응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 제2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개발협력 추진

## 1. 개발협력 분야 국제적 노력에 기여

##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정부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up>1)</sup>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시민사회 등 다양한 개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을 지원했다.

우리 정부는 2021년 9월 제76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SDG Moment)’에 대통령 특사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참석해 개회 세션 연설을 했다. 이를 통해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미래 세대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정부는 SDGs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주관 아태 지속가능발전포럼(APFSD: Asia-Pacific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3월),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7월), 동북아 SDGs 다주체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17가지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극심한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발전을 주로 다루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SDGs는 모든 형태의 빈곤과 불평등의 감소를 위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목표를 설정함.

포럼(Northeast Asia Multi-stakeholder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0월) 등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SDGs 이행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제4차 열린 SDGs 포럼(7월)은 국내 SDGs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활동

정부는 선진 원조 공여국 협의체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부의장직과 DAC 산하 분쟁·취약성 네트워크(INCAF: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 실무작업반 공동의장직, 환경네트워크 부의장직, OECD 민간재원 실무공동체 공동의장직 등을 맡아 수행했다. 또한 6월 개최된 OECD 연례 개발장관회의(Tidewater 회의)에도 참석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범 형성 등에 참여했다.

정부는 2021년 OECD DAC 동료검토 중간점검(Mid-term Review)을 수검했으며, OECD DAC는 2017년 동료검토 권고사항에 관한 정부의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이 실질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0월 개최된 OECD DAC 출범 60주년 기념 행사에 초청받아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성공요인을 공유하고, 지난 60년간 DAC의 성과와 도전과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G20 차원의 개발협력 논의에도 참여했다. 총 네 차례에 걸친 G20 개발실무그룹(DWG: Development Working Group) 회의와 6월 이탈리아 마테라에서 개최된 G20 외교·개발 합동장관회의와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해, G20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함께 개도국의 코로나19 상황에서 회복과 SDGs 이행 가속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10월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정상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정부는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아울러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다주체 협력체인 부산글로벌파트너십(GPEDC: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제21차(7월)와 제22차(12월) 운영위원회에 공여국 대표로 참여했다. 또한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포럼에서는 개발효과성 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를 통해 분기별로 개발협력 정보를 공개했으며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 논의에도 참여했다.

### 3) 주요 선진공여국과 협력

정부는 주요 선진공여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했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개발협력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외교부 제2차관과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 미국 국제개발처(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처장 면담(7월), 한·미 개발협력 국장급 협의(12월) 등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 주요 현안과 양국 간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신남방정책 대상 지역에 대한 기후변화, 디지털, 해양환경 분야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했고, 여타 지역 및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제9차 한·영 개발협력 정책협의회(3월, 화상), 제2차 한·불 개발협력 정책협의회(10월, 서울) 등을 계기로 개발협력 분야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므타(MIKTA) 개발협력기관 간 협의회 제1차 고위급회의(1월)에 참여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협력 분야 시너지효과를 도모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017년 7월 G20 함부르크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발도상국 여성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14개국의 참여로 출범한 여성기업가자금(We-Fi: Women Entrepreneurs Finance Initiative)의 공여국으로서 기금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

## 2.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 체계 강화 노력

정부는 2021년 1월 ODA 분야 국가 종합전략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①사람 중심의 '포용적 ODA' ②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상생하는 ODA' ③기술 및 민간재원 등을 활용하는 '혁신적 ODA' ④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함께하는 ODA'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개발협력 이행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협

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책무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진 체계 혁신을 포함했다.

정부는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11월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2021년 3월 출범시켰다. 전략회의는 무상원조 제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무상원조 분야의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와 조정, 사업 이행 점검과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021년에는 외교장관 주재로 세 차례(3.30, 6.9, 12.22)의 전략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 전략회의(3월)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 분야) 활성화, 그린뉴딜 ODA 추진,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 등 3개 전략을 의결하고 무상개발협력 전략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제2차 전략회의(6월)에서는 2022년 무상 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요구액 기준)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2022년도 부처별 요구액을 기준으로 한 무상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제3차 전략회의(12월)에서는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 ODA 연수사업 개선안, 2022년 무상 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확정액 기준)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ODA(무상 부분)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민간전문가단의 무상원조 사업 심의 참여를 통해 사업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협의회의 사업 심사·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2017년 6월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사업 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재외공관의 ODA 사업 상시점검 및 결과보고 체계를 운영했다. 또한 재외공관 주도하에 현지 ODA사무소(KOICA, EDCF 등)와 현지 활동 중인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ODA 현지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해 현장 중심으로 ODA가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21년에는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사업 시행기관 간 사업발굴·기획 단계에서 협의를 도입해 각 시행기관의 사업 발굴 현황 및 사업 간 연계를 점검했다.

3.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현황

1) ODA 지속적 확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우리의 역할에 관한 국제사회의 기대치 상승과 국제적 위상 제고의 필요성에 따라 ODA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2021년 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6%인 총 28.6억 달러로, OECD DAC 29개 회원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출처: OECD.Stat, 2021년은 OECD DAC 보고 통계)						
구분	1987~2016	2017	2018	2019	2020	2021(잠정)
공적개발원조(ODA)	18,435.8	2,201.4	2,358.3	2,463	2,250	2,855
① 양자 간 협력	13,111.6	1,615.0	1,734.5	1,857	1,751	2,145
• 무상원조	8,015.5	1,033.9	1,131.0	1,171	1,155	1,365
• 유상원조	5,096.1	581.1	603.4	686	597	780
② 다자 간 협력	5,324.2	586.3	623.8	606	499	710
ODA/GNI (%)		0.14	0.14	0.15	0.14	0.16

\* 2017년까지는 순지출 기준, 2018~2021년은 OECD DAC 통계 보고 기준 변경에 따라 증여등가액(지출액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인당 출국납부금 1,000원을 모금해 조성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국제기구, 글로벌 보건기구, NGO 등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3대 감염병(에이즈·결핵·말라리아)과 수인성 질환, 소외 열대질환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퇴치 활동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국제항공 수요가 감소하면서 출국납부금이 급감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예년 수준의 기금 조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일부 사업의 규모나 지출 시기를 조정하고 여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금 운용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2) 양자원조

정부는 주어진 ODA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27개 중점협력국(아시아 12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앙아시아 4개국, 중남미 4개국)을 선정해 약 57.6%에 해당하는 ODA 재원을 지원했다.

우리나라 ODA 지역별 지원 규모										
(출처: OECD.Stat, 2021년은 OECD DAC 보고 통계)										
구분	ODA 지원액(백만 달러)					양자 ODA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잠정)	2017	2018	2019	2020	2021(잠정)
아시아	715.0	724.2	876.3	868.1	938.4	44.3	41.8	47.2	49.6	43.7
아프리카	408.0	484.1	490.9	426.7	522.1	25.3	27.9	26.4	24.4	24.3
중남미	176.7	170.7	188.7	139.0	205.3	10.9	9.8	10.2	7.9	9.6
중동	71.5	78.07	82.7	66.9	76.0	4.4	4.5	4.5	3.8	3.5
오세아니아	11.6	16.1	15.9	15.5	16.4	0.7	0.9	0.9	0.9	0.8
유럽	-4.1	2.0	7.5	10.8	8.8	-0.3	0.1	0.4	0.6	0.4
지역 미배분	236.3	259.4	195.1	224.5	378.1	14.6	15.0	10.5	12.8	17.6
합계	1,615.0	1,734.5	1,857.0	1,751.4	2,145.2	100	100	100	100	100

\* 2017년까지는 순지출 기준, 2018~2021년은 OECD DAC 통계 보고 기준 변경에 따라 증여등가액(지출액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한 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

(1) 신남방·신북방정책 대상 지역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ODA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 11월에는 정부의 신남방정책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무상 분야의 ODA 지역 전략인 ‘신남방 ODA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 대상 지역에 대한 무상 ODA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으며, 2021년에는 2020년 예산 대비 18.1% 증액된 총 3,24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신북방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3개국을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선정했고, 2021년 신북방정책 지역 대상 무상 ODA 예산을 2020년 대비 약 8% 증액된 767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1년 정부는 전체 양자지원액의 약 44%인 9억 3,840만 달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제공했다. 신남방정책 대상 지역에 대한 베트남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2021~2025: 115억 원), 라오스 8번국도 교량과 도로안전 기능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2021~2023: 157억 원), 캄보디아 건강형평성 및 질 향상 프로그램(2017~2027: 총 200억 원), 인도네시아 홍수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사업(2020~2024: 119억 원), 필리핀 국립대학교 첨단 농업연구센터 설립(2021~2026: 180억 원) 등 경제 인프라와 보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다.

신북방정책 대상 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우르젠치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직업훈련 제도 역량 공고화 지원 사업(2020~2024: 167억 원), 몽골 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및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강화 사업(2021~2026: 169억 원), 키르기스스탄 행정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역량개발 사업(2020~2024: 55억 원) 등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나아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직업훈련원 역량강화사업(2014~2021: 66억 원), 아제르바이잔 IOM 물공급시스템(카흐리즈) 구축 지원사업(2018~2022: 51억 원) 등 일반협력국에 대해서도 지원했다.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역개발·교육·보건 분야에 중점을 두고 네팔 지진피해 보건 분야 재건복구 지원사업(2015~2021: 95억 원), 파키스탄 상수도공급 지원사업(2021~2026: 145억 원), 스리랑카 모자보건 의료역량강화 사업(2016~2022: 102억 원) 등을 진행했다.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2021년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체결했고, 기후변화 대응과 수자원관리 분야 등에서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기술협력과 물자 지원 중심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했다.

### (2) 아프리카 지역

정부는 국제사회의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지역이자 아시아 다음으로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중점 대상 지역인 아프리카 지역에 2021년 전체 양자지원액의 약 24%인 5억 2,210만 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탄자니아 1차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확산 및 의약품 공급망(SCM) 개선사업(2021~2024: 75.02억 원), 케냐 카지아도주 보건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자보건 개선사업(2021~2025: 73.21억 원), 우간다 응급의료중심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사업(2017~2022: 43.2억 원) 등 보건 분야 중점 지원 기조를 유지했다. 한편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토지복원 사업

(2021~2025: 145.2억 원), 가나대학교 연구 및 ICT 혁신센터 건립사업(2021~2025: 108.9억 원), 르완다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개선 컨설팅 사업(2020~2023: 22.85억 원) 등 환경·에너지, 교육, 공공행정 분야 사업도 진행했다.

### (3) 중남미 지역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와 협력을 확대한다는 기조에 따라 중남미 지역 지원을 강화했다. 2021년에는 전체 양자 지원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2억 530만 달러를 중남미 지역에 지원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온두라스 과나하섬 그린에너지 섬 구축지원(2021~2024: 179억 원), 파라과이 센트럴주 림피오시 보건의료체계 형성 및 일차의료 강화사업(2016~2022: 158억 원),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저수용댐 축조 및 관개수로 건설사업(2011~2023: 155억 원), 콜롬비아 보고타 USME 지역 하이브리드 전원공급 구축지원사업(2020~2022: 141억 원) 등을 진행했다.

## 3) 다자원조

정부는 주요 개발·인도지원 국제기구와 협력해 다양한 다자원조사업을 추진했다. 다자원조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집행이사국으로서 이들 기구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으며, 2021년 말 UNDP 및 UNICEF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협력사업을 점검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제3차 전략회의(12월)를 통해 기존의 <다자개발협력 추진전략(2016)>을 개정했다. 이 개정전략은 그간의 다자개발협력 논의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보다 균형적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다자개발협력 방안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통합적인 다자개발협력 추진체계, 정규재원 확대 등 주요 기구별 협력전략, 성과 제고 방안, 민간 기업 및 시민사회와 다자개발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G7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와 글로벌 보건기구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및 국제사회의 감염병 대응·대비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참여했다. 2021년 3월 글로벌펀드(Global Fund)와 공동으로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2021년 말

코로나19 외교장관회의와 코로나19 개발협력 장관급회의 등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6월 출범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Action with Women and Peace)’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분쟁하의 성폭력 방지 의제에 관한 기여를 지속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에는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과 협력으로 수단 다르푸르 서부 지역과 카메룬 국경 지역의 성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예방과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 4.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확대

### 1)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현황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분쟁, 자연재해 등 증가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해 인도적 지원을 시행했다. 특히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교부는 2021년 23개국에 1,300만 달러 상당의 진단기기와 산소발생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란에 340만 회분의 백신 현물을 공여했다. 2021년 6월 G7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공약을 바탕으로 2021년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2020년 1,000만 달러에 이어 1억 달러를 추가 기여했으며, 2021년 말에는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UNICEF를 통해 아프리카연합(AU)과 협의해 1,500만 달러 규모의 백신 공급을 추진했다.

아울러 정부는 분쟁 등에 따른 인도적 위기 상황을 경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했으며, 특히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 아동, 난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1년 2월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2017년부터 매년 지원해 온 로힝야 사태 관련 인도적 지원을 시행했으며,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이후 독립적인 국제기구(유엔 등)를 통해 생존 보장을 위한 긴급구호(긴급 식량 패키지 및 기초 의료서비스 지원 등), 아동 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역량 지원, 탈레반하 최취약층인 여성 인권 보호 및 기초 서비스 접근 보장 등 3,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

다. 그와 더불어 시리아, 예멘 등 기존의 만성적 위기 대응 지원도 계속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 다수의 긴급재난에도 적극 지원했다. 특히 2021년 지진으로 큰 타격을 받은 아이티에 100만 달러, 기근을 겪은 마다가스카르에 60만 달러, 홍수 피해를 본 동티모르에 10만 달러를 지원했다.

### 2) 해외긴급구호대 역량 강화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긴급구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2021년 개최된 연례 KDRT 국내 합동모의훈련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구호대 파견 가능성을 고려해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방역 활동과 지진대응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해외긴급구호대의 역량을 제고했다.

또한 정부는 해외긴급구호대 운영·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한 의약품과 소모품의 불용 최소화를 위한 장비·물품 운용과 관리 체계 개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운영·관리 체계 조정 등을 협의했다.

### 3) 취약국가 재건 및 평화구축 지원

정부는 협력국의 인도적 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HDP Nexus: Humanitarian Assistance-Development-Peace Nexus) 강화 노력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3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HDP 연계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하고, 인도적 지원과 분쟁 예방, 취약국 대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또한 정부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역의 분쟁과 갈등 예방, 취약성 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 5.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 추진

정부는 국내외 개발협력 논의에 우리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다양한 민간 개발주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1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을 수립한 이후 ‘기본정책 이행 방안’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국제개발협력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민사회 협력사업 다변화와 함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사업 역량도 강화했다.

아울러 개발협력 파트너십 확대의 일환으로 KOICA는 연간 80여 개의 교육, 보건, 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예비창업가,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FS: Inclusive Business Solution), 다양한 해외파트너들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혁신적 파트너십 프로그램(IPS: Innovative Partnership Program)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개도국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OECD DAC 가입을 기념해 같은 해부터 매년 ‘개발협력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다. 2021년에는 범부처 ODA 통합 홍보 강화를 위해 ‘개발협력주간(11.15~26)’을 운영했다. 2021년 개발협력주간에는 중앙부처와 함께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함께 참여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11.25)’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해 국내외 ODA 유공자들에게 포상하고, 기념사를 통해 우리 정부의 OECD DAC 가입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앞으로 우리나라 ODA의 방향과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제3절

## 외교관계 및 대외활동의 법적 기반 확충

외교부는 조약 체결을 비롯한 국제규범 형성, 해양 문제를 포함한 국제법의 역량 강화까지 국제법과 관련한 제반 현안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와 외교활동이 충실한 규범적 기반에 근거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와 함께 국제법 분야에서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 1. 2021년도 조약 체결

정부는 우리나라 외교의 외연을 넓히고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국제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조약을 체결했다. 2021년에는 총 37건의 조약에 서명했고 41건의 조약이 발효됐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협력, 보건 및 영사 분야에서 많은 조약을 체결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준한 데 이어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캄보디아, 베트남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 개정해 조세의 이중 부담과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짐바브웨와의 투자보장협정이 발효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앙골라 등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차관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조지아 및 핀란드와의 항공 협정이 발효되었다.

보건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스페인,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과 보건협력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했으며, 사법공조 분야에서는 키르기스스탄과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 이송조약, 범죄인 인도조약을 발효함으로써 형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다자협약 수락·비준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국제규범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21년 6월에는 해양생태계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이 각각 발효되었다. 2021년 12월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호의 유보를 철회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장애인 인권 보장 증진 노력에 동참했다.

## 2. 국제규범 형성 과정 참여 및 국제법 관련 국제기구 활동

외교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법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참여했으며 우리나라 국익을 바탕으로 전문적 논리와 축적된 경험 제시, 컨센서스 구축을 위한 교섭 노력 등을 통해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법 성안 관련 논의에 정부 대표단이 참여하고 우리나라 전문가의 국제법률기구 진출을 지원했다.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해 2021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우리 바다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해양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양법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ITLOS 소장을 비롯해 여러 ITLOS 재판관들과 저명한 국내외 학계 인사 2,400여 명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주요 당사국으로서 다방면에서 ICC의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ICC 당사국총회 이사국으로 활동한 데 이어 2022~2023년 임기 이사국으로 선출됐으며, 우리나라 감사원은 2021~2024년 ICC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 감사기관으로 임명됐다. 또한 2021년 12월 제2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ICC 재판관 후보자의 자격, 자질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재판관 추천 자문위원회(ACN: Advisory Committee on Nominations of Judges) 위원으로 재임되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비대면으로 개최된 2021년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회의에 대표단이 총 13회 참여해 국제상거래법 현안에 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신속중재절차에 관한 UNCITRAL 중재 규칙 성안 등 국제상거래법 분야의 다양한 모델법 형성에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진행 중인 ‘국가관할권 이원 영역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문서 성안 논의에도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4차 정부 간 회의가 2022년으로 재차 연기되었으나, 정부 대표단은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기간 작업 및 관련 워크숍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국제문서 초안 내용에 관한 세부 논의에 참여했다.

또한 제76차 유엔총회 6위원회(10.5~11.18, 뉴욕)에 대표단을 파견해 다양한 국제법 현안에 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대표단은 유엔 6위원회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작업보고 회의에 참석해 주요 의제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6위원회와 ILC 논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를 계기로 개최된 2023~2027년 ILC 위원 선거에서 이근관 서울대 교수가 차기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2021년 화상으로 개최된(11.29~12.1) 제59차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총회에 참석해 국제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강화,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 적용 등에 관한 정부의 의견을 개진했다.

2021년 6월 파리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43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남극조약체제의 목표



와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 측 활동을 공유하고, 남극 관광과 비정부기구 활동, 남극조약과 환경의정서에 따른 사찰 활동, 국가 간 과학연구협력 등을 논의했다.

또한 2021년 10월 호주 호바트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40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연례총회에도 참석해 남극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각국의 보존관리조치, 수역 내 선박 활동, 해양보호구역(MPA: Marine Protected Area) 지정 등에 관해 당사국과의 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제60차 유엔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UNCOPUOS: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법률소위원회 회의에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참여했다. 회의에서 정부 대표단은 우주의 장기지속성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다른 국가에 소개했다. 나아가 정부 대표단은 우주 자원 문제, 우주 쓰레기 경감 등 우주법의 중요한 주제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는 2021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제31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석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해저기구(ISA: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등에 관한 우리의 기여 및 활동을 소개하고 정부의 입장을 개진했다.

2021년 12월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제26차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와 이사회에 우리나라는 화상으로 참석해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개발규칙 조기 성안 문제, 법률기술위원 선거 조건 결정 등 주요 안건의 신속한 채택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 3. 주변국 간 해양경계획정 교섭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주변의 해양질서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외교 현안이다.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주변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중첩된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해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외교적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한반도 주변 수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해양국익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2015년부터 한·중 간 공식 협상 프로세스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3월, 11월 두 차례의 국장급 회담이 화상으로 개최되어, 양국은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양경계 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 4. 동해 표기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노력 지속

정부는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동해 병기 필요성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21년 5월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제2차 회의에 참석했다.

아울러 2020년 국제수로기구(IHO: 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제2차 총회의 결정에 따라 해역을 수치 식별자로 표기하는 S-130 전자해도 신 표준 개발 관련 논의도 지속했다. 2021년 10월 개최된 제5차 IHO 이사회에서 S-130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 참여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정부는 올바른 동해 표기의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 등 유관부처와 동북아역사재단, 동해연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했다.

### 5. 국제법 이해 제고와 역량 강화

외교부는 국제법 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국제법 실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국제법의 국내 저변 확대와 국가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법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국제법 학회와 각종 협력사업을 진행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국제법 저변 확대 차원에서 2021년 8월 제13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으며 11월에는 제21회 국제법 논문 경시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계간지 <국제법 동향과 실무>를 발간해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국제사법 기구의 최신 판결과 조약체결 동향, 국제회의 논의 동향, 시의성 있는 국제법 논문 등을 소개했다.

한편 독도 영토주권과 동해 표기의 국내 인식 제고를 위해 각급 학교, 시민단체 등 대상 정책설명회를 총 22회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하고 독도·동해 정책과 관련해 국민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더욱 직접적인 대국민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는 2021년 외교부 홈페이지 ‘국제법 소통’란에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8차 국장급 회담 개최 결과, 제22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이사회 결과 등 국내외 국제법 관련 논의 동향 및 행사 관련 정보를 게재했다.

---

# 07.

CHAPTER.

---

##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

180

**제1절**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공공외교 추진

190

**제2절**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193

**제3절**

외교 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198

**제4절**

해외 체류 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211

**제5절**

해외 진출 우리 국민  
편익 증진



## 제1절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공공외교 추진

## 1.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외교부는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6일 범정부 공공외교 통합·조정 기구인 공공외교위원회 제5차 회의를 제2차관 주재로 대면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시한 공공외교 결과를 공유했으며, 재외공관 및 부처, 지자체 공공외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022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외교부는 지자체와의 공공외교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18명의 국제관계대사를 파견해 국제 업무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중앙·지방 간 다양한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에서 지자체별 코로나19 대응 국제교류 데이터를 통합해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자체가 방역 노하우와 관련해 해외 지자체와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외교부는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도모하고 민간을 통한 공공외교의 저변 확대를 위해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10개 민간단체의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했다.

외교부는 정책공공외교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지역의 우리나라 대사관을 거점 공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소재 총영사관과 공공외교 관련 정보와 콘텐츠

를 공유하는 협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주미국대사관을 시작으로 2020년 중국, 일본, 러시아 3개 대사관을 추가해 거점 공관과 지역 총영사관 간 협업을 추진했다.

한편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공외교 환경이 유사한 지역과 문화권별로 공공외교 담당관 회의를 연례 개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 지역(1월), 미국 지역(7월), 일본 지역(8월), 중남미 지역(10월), 유럽 지역(11월) 등 여러 지역의 재외공관과 화상 또는 대면으로 공공외교 담당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공공외교 현황과 주안점을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2. 분야별 공공외교 추진

## 1) 코로나19 상황 속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외교부는 코로나19로 공공외교 수행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공공외교 SNS 채널인 'KOREAZ'를 통한 디지털 공공외교 활동을 지속 추진했다. 3월에는 정책공공외교 2과를 디지털 공공외교 전담부서로 개편했으며, 디지털 공공외교 센터인 'MOFA 스튜디오'를 개소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KOREAZ 채널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총 1,993건이며 채널 구독자는 27만 명을 넘어섰다.

외교부는 KOREAZ 채널을 통해 우리 문화, 지식, 정책공공외교 관련 이슈를 소개하고 주요 외교 일정과 현안을 홍보했다. 김치의 날, 한복의 날 제정을 기념해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 대중에게 정확한 우리 문화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유엔 가입 30주년 영상, 평화유지 장관회의 영상,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환경 관련 영상 등 주요 외교 행사 특별 콘텐츠를 제작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소개했다.

인종차별 반대, 환경보호 등 범지구적 이슈에 관한 콘텐츠도 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두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의 '#LiveTogether' 글로벌 SNS 캠페인에 동참했고, 온라인 K-POP 콘서트,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제작 등을 통해 인종차별 반대 메시지를 확산했으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기후 관련 영상



등을 제작했다.

## 2) 정책공공외교

외교부는 정부의 외교 사안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국가에 지역별 맞춤형 메시지를 발신하고 정책공공외교 플랫폼을 강화했다. 또한 정책공공외교 대상 인사를 해외 전문가, 언론인 등에서 차세대 신진학자, 주한 외국인 등으로 확대하고, 정책공공외교 주제를 안보 사안 외에 보건안보, 기후변화 등으로 다변화했다.

### (1) 미국

외교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교류와 소통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대미 정책공공외교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2021년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팬데믹 신속 대응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 한·미 간 전문가 회의 주요 개최 사례

- 한·미 기후변화 협력 방안 웨비나(2021.5.6)
-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2021.5.10, 보스턴)
- 팬데믹 신속 대응 체계 모색 관련 한·미 전문가 웨비나(2021.5.14)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계기 기후변화 세미나(2021.5.21, 서울)
- 우주외교 포럼(2021.8.12, 대면·비대면 혼합)
- 한국의 양성평등에 관한 세미나(2021.10.6, 로스앤젤레스)
- 한·미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세미나(2021.11.9, 샌프란시스코)
- 국제공급망 위기에 대한 세미나(2021.11.17, 로스앤젤레스)

또한 배터리·바이오·반도체 분야 대미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했으며, 한·미 공공외교 포럼(10.5)을 개최해 양국의 공공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한·미 파트너십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과 이해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 (2) 중국

외교부는 2021년 8월 26일 제9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양국의 정부·학계·언론계 인사가 참석해 ‘한·중 우호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또한 외교부는 2021년 11월 12일 제9회 한·중 공공외교연구포럼을 개최하고, 2021년 12월 6일에는 제3회 한·중 싱크탱크 대화를 개최하는 등 한·중 간 논의의 장을 이어 나갔다.

한편 중국 지역 공관에서는 ‘중국 지역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사업으로 현지 전문가 대상 디지털, 에너지 정책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해 정부의 정책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차세대 대상 강연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 (3) 일본

외교부는 2021년 ‘한·일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공모전을 개최해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한 두 나라 국민의 미담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2021년 6월 12일 개최된 ‘한·일 관계 전문가 및 언론인 세미나’를 통해 미국 바이든 정부 이후 한·미·일 협력과 한·일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한·일이 함께하는 미래포럼’은 지역별 주일 공관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양성평등, 환경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 (4) 러시아

외교부는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2021 한·러 상호 교류의 해’를 실시했다. 특히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에서는 러시아 청년층의 한·러 교류사 인식 확대와 러시아 내 미래 한국 전문가 발굴과 육성을 위해 이범진 대한제국 초대 러시아 상주공사를 주제로 한 정책공공외교 다큐멘터리 ‘이범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삶’을 제작해 상영했으며 ‘제2회 이범진 학술상 대학생 논문공모전’을 개최했다.

러시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러 관계 속 한반도 정세 관련 세미나’를 2회 진행해 한반도 정세의 전망과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양국 전문가 간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신북방정책 핵심 지역인 극동지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러 극동지역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 (5) 유럽

외교부는 2020년 유럽 소재 주요 정책연구소와 ‘한·유럽 정책대화’를 개설하고, 2021년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2차 한국·유럽 상호이해와 신뢰를 위한 정책대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세미나를 대면 행사로 개최했다. 유럽 측에서는 독일 국책연구소인 독일 국제안보연구소(SWP: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를 비롯해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영국 채텀하우스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프랑스 전략연구재단(FRS: Fondation pour la Recherche Stratégique) 등 9개 싱크탱크가 참석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비확산, 미·중 경쟁 시대에 한국·유럽 협력,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한국과 유럽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6) 아세안

외교부는 2021년 11월 11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ASEAN-ISIS: ASEAN Institutes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와 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공동 개최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학 구조 변화,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신남방정책의 역할,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 외에도 아세안 지역 우리나라 재외공관 주도로 보건안보 협력을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7) 주한 외국인 대상 정책공공외교 강화

외교부는 정책공공외교 대상 인사를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했다. 특히 차세대 신진 전문가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 재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재한 미국인 유학생 33명을 대상으로 한국 관련 연구보고서 경연, 한·미 공공외교 포럼 등을 개최했다.

## 3) 문화 공공외교

### (1) 한국주간행사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정부·경제·문화가 융·복합된 종합 공공외교 행사인

‘한국주간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1년에는 전 세계 130여 개 재외공관에서 김치 페스티벌, 한복 패션쇼, 한국 영화제, K-POP 댄스, 전통예술 공연 등 한국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현지인에게 소개하는 공공외교를 전개했다.

주이탈리아대사관은 이탈리아 유명 디자이너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9개의 의자와 91점의 한국 전통 공예작품을 전시한 VR 공예전 ‘아홉 개의 의자’를 개최했다. 주로 스캔젤레스총영사관에서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한글 서예 체험행사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했다. 주상파울루총영사관은 국경일을 맞아 중남미 최대 한인타운인 브라질 봉헤치로의 주요 거리를 청사초롱으로 밝히고 한복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 (2) 주요 외교관계 계기 기념사업

외교부는 외교관계를 수립한 각 국가와 매 10주년 및 해당 국가와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를 기념하는 공공외교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는 16개 국가(19개 공관)에서 60여 건의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미디어월 동영상 제작, 외교관계 사진집 제작, 한국 콘텐츠 방영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대면 행사도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개최해 팬데믹 속에서도 외교관계 수립의 의미와 협력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과 폐막식이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2020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예술인이 합동 무대를 펼쳤으며, 폐막식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였다.

### (3) 너도나도 한국알기 프로그램

외교부는 주한외교단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의 역사, 전통, 가치를 체험하고 한국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19개국 주한공관의 공공외교사업 담당자를 초청해 ‘공공외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시대 각국의 공공외교 현황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탐방, 전통 보자기 매듭법 수업 등 ‘한국탐방’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외교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알리미’ 44명을 선발했다. 대한민국 알리미는 한국 문화 경험담, P4G 등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참관기 등을 소재로 1,511건의 한국 관련 콘텐츠를 제작했다.

#### (4) 재외공관 국가 브랜드 전시 사업

외교부는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서 임차한 미술품 1,020점을 100여 개 공관에 지원했고, 외교부 소장 미술품 4,000여 점을 각 재외공관에서 전시했다. 특히 독일, 싱가포르, 멕시코 등 주재 공관은 미술품 컨설팅을 통해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우수한 우리나라 작가 작품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우수한 문화재를 제작·전시해 국외에 우리나라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 (5)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 사업

외교부는 EBS 지식채널 프로그램을 통해 신북방 11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특집편을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북방 정책 8대 분야 중 문화·교육 교류 이행을 통한 외교관계 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의 이해와 더불어 문화 다양성에 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 (6)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

외교부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에 대한 문화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를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2021년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스포츠를 주제로 11월 4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Juan Antonio Samaranch)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 국내외 스포츠·문화계 인사가 참여해 ‘스포츠를 통한 차별과 한계의 극복, 평화와 연대의 촉진’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대화’는 외교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되었으며, 이후 포럼 주요 내용을 tvN에서 ‘미래수업’ 프로그램의 특집 편으로 두 차례 방영했다.

#### (7) 퀴즈 온 코리아

2021년에는 23개 재외공관에서 ‘퀴즈 온 코리아’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국

가별 우승자를 우리나라로 초청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예선전과 결승전을 치렀다. 국내 예선전에는 65개 국적의 참가자 577여 명이 지원해 그중 15개국 15명이 결승에 진출했고, 결승전은 한글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KBS 1TV와 KBS World TV를 통해 방영됐다.

#### (8) 스포츠 공공외교협력 사업

외교부는 2021년 스포츠 공공외교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전 세계 77개 재외공관에서 태권도, 바둑, 양궁, e스포츠 등 다양한 종목의 87개 스포츠 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에는 개최하지 못했던 대사배 태권도대회 세계결선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온라인 품새대회 형식으로 개최했다. 세계 결선에는 각 재외공관 공관장배 태권도대회에서 우승한 39개 공관 210여 명이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가했다.

#### (9)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K-POP World Festival) 개최

외교부는 2021년에는 10주년을 맞이한 K-POP World Festival 최종 본선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했다. 2021년에는 74개국의 91개 공관에서 K-POP World Festival 지역 예선이 개최되었다. 10개국 팀이 최종 본선에 진출했으며 최종 본선은 SNS를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전 세계 120개국에서 방영되었다.

#### (10) 해외 주요 관광지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

외교부는 해외 주요 관광지와 박물관·미술관 등에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 설치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2021년에는 9개 국가에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를 개설했다.

2021년 한국어 음성안내 서비스 설치 현황

국가	장소	국가	장소
노르웨이	국립박물관	러시아	크렘린 박물관 무기고, 정치사 박물관, 유스포프 궁전, 바이칼 박물관
르완다	키갈리 제노사이드 추모관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음악당
요르단	페트라	체코	로브코비츠키 궁전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프랑스	세르누치 극동 예술전문 박물관
헝가리	국립 부다페스트 미술관		

## 4) 지식 공공외교

### (1) 해외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외교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F: Korea Foundation)을 통해 1992년부터 2021년까지 20개국 98개 대학에 153석의 한국학(한국어) 교수직을 설치했고 해외 한국학 전공생, 교수 등 7,963명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8개국 23개 대학에 한국학(한국어) 교수직을 설치했고, 현지 한국학(한국어) 교원을 15개국 31개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50개국 87개 대학에 90명의 KF 객원교수를 파견했다. 또한 국내외 대학 간 또는 해외 대학 간 실시간 화상강의를 제공하는 ‘KF 글로벌 e-스쿨 사업’을 통해 해외 44개국 154개 대학에 한국학 강좌를 제공했다.

한편 해외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19개국 67개 대학에서 수학 중인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21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4개국 14명의 신진 학자에게 박사후과정인 펠로십을 제공했다. 아울러 총 26개국 외교관 27명에게 3개월간의 한국 언어·문화 연수를 제공하고, 주요 전략국가인 신남방 지역의 공무원 펠로십을 통해 6개국 15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다.

### (2) 코리아코너(Korea Corner) 설치

외교부는 2021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해 루마니아, 동티모르 등 14개국 15개 기관에 코리아코너를 신설했다. 코리아코너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70개국 107개 기관에서 외국 현지 국민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한국 문화 복합 홍보관’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관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0개국 116개 기관에 한국 연구자료 8,085부를, 12개국 30개 기관에 한국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전자자료 구독을 지원했다.

### (3) 교육·학술 분야 국제교류 협력 지원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2021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GKS)’의 학부·대학원 장학생 선발(133개국 1,351명)을 지원했다. 또한 각국 교육부와 우리나라 교육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기관 간 교육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한·오스트리아 교육협력 의향서 체결(6.14)에 따른 양국 교육협력 양해각서 추진을 지원했다.

## 3. 한·유네스코 파트너십 구축

외교부는 교육, 과학, 문화 최대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와 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3개 회원국 중 정규분담금 10위(2021년 기준, 776만 달러), 자발적 기여금 5위(2020~2021년 기준 2,401만 달러) 공여국으로서 유네스코 집행이사국과 10여 개의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을 수임했다. 또한 외교부는 제11차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검토회의(3.15~19)와 국내 공여주체 회의(12.1)를 개최해 48개 신탁기금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2021년 외교부는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 활동을 지원하며 유네스코와 차별과 혐오 대응을 위한 다양한 국제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글로벌 SNS 캠페인을 추진했다.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3.22), 교육을 통한 혐오발언 대응 이해관계자 포럼(9.30~10.1), 세계교육장관회의(10.26), 제5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발전·건강한 삶을 위한 변혁교육 포럼(11.29~12.1) 등을 통해 교육을 통한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인종차별 대응을 위한 유네스코 차원의 노력에 동참했다.

또한 우리나라 주도로 2021년 4월부터 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SNS 캠페인 #Live Together 챌린지를 전개해 국제기구, 정·관계, NGO, 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가 다수 참여(좋아요 수 510만, 도달 수 6,200만 달성)하는 등 인종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모두가 공존하자는 메시지를 전파했다.

2021년에는 ‘한국의 갯벌’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완도’가 아홉 번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2021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11.30)를 개최해 국제사회에 세계유산 보전 관련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물권보전지역과 평화 워크숍(9.16)을 개최해 생물권보전지역이 평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 제2절

##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

## 1. 국민 참여 도모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를 추진해 왔다. 민주주의의 성숙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정부 정책에 국민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는 국민외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5~7월), 국민참여사업(10월), 국민외교 디자인단과 함께하는 국민외교 기획행사, 국민외교 모바일앱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외교정책에 반영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34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그중 7건의 제안에 대해 시상했고, 대상을 수상한 제안을 반영해 국민외교 모바일앱에 청소년 전용 메뉴를 개설했다.

국민참여사업은 외교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외교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21년 제3차 국민참여사업은 ‘수교 60주년 계기 중남미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국민 약 300명이 온라인 오리엔테이션과 토론회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외교정책, 한·중남미 민간협력 현황 등 주요 쟁점에 관해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교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외교 디자인단 4기(21명)를 모집했다. 국민외교 디자인단은 ‘같이 울리자! 청소년 외교 골든벨’ 행사에서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사회자로 참여하는 등 국민외교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2021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과 국민외교센터 이용 신청 웹페이지를 홍보하고 국민외교 모바일앱을 활용한 ‘외교정책 제안 챌린지’를 운영하는 등 국민과 외교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 2. 국민소통사업

외교부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5월 광화문 외교부 청사에 개소한 국민외교센터에 우리 국민을 초청해 외교 분야 소통·참여 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출입이 용이한 소통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2020년 10월 19일 ‘국민외교타운’ 출범을 계기로 외교타운(1층)에 국민외교센터(양재)를 추가 개소했다. ‘국민외교센터(양재)’는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준수할 경우 여타 부처·공공기관과 비영리 민간단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외교 분야 소통 공간으로 외교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외교센터(광화문·양재)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대면·비대면으로 114건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어 3,0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2021년에는 국민외교센터 개소 3주년 특별 기념행사로 최태성 역사 강사를 초청해 ‘외교정책 수립·추진 과정 관련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특별 소통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또한 주요한 정책·현안·동향 등을 우리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의견과 제안을 듣는 ‘국민외교 공감팩토리’ 행사를 국민외교센터에서 총 28회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했다. 또한 공공외교와 국민외교를 주제로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국민 소통 행사인 ‘찾아가는 공감팩토리’도 진행했다.

한편 외교부는 2019년 서울시와 체결한 MOU에 근거해 서울시 산하 서울시민대학과 협업으로 ‘국민외교 열린캠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에게 외교 관

런 설명과 주한대사관 현장 체험 등을 제공하고 외교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로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싱가포르, 네덜란드 편을 개최했다.

2019년 6월 27일 서비스를 개시한 ‘국민외교 모바일앱’을 통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외교정책을 제안하고 국민 참여·소통행사 개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는 17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되어 그중 13건은 정책으로 반영되었다.

### 3. 국민외교아카데미 운영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2021년 ‘국민외교아카데미’를 개설했다. 국민외교아카데미는 국립외교원이 전문 교수진, 외교부의 전·현직 외교관이라는 인적 자원과 2020년 개소한 ‘국민외교타운’이라는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직접 운영하는 대국민 외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1년 국민외교아카데미는 4개 정기 교육과정(청소년, 대학생, 국민, 언론인)과 비정기적인 ‘외교 특별 강연’을 운영했다. 국립외교원 교수진과 전·현직 외교관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외교타운 5층에 설치된 ‘국민외교아카데미관’을 활용해 대면·비대면 동시 중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리나라 국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외교 배움터’ 과정은 주요 외교 이슈와 국제 현안 관련 강의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직접 외교 전문가와 소통하며 진로 설정에 도움을 받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생 외교 연수 과정’은 강의와 실습을 병행한 2주간의 심층 외교 학습 과정으로, 특히 현직 외교 실무자가 구성한 협상과 발표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강생이 실제 외교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국민 열린 외교 강좌’는 18세 이상 일반 국민이 국립외교원의 전문가 멘토의 지도 아래 특정 주제(상반기: 중동, 하반기: 개발협력)에 관한 강의 및 토론에 참가하는 과정이다. ‘언론인 연수과정’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력해 언론인에게 최신 외교 사안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국민외교아카데미는 대학생서포터스 ‘큰다(KNDA)’와 전용 SNS를 운영했으며, 서울 P4G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교 특별 강연(4.23)’을 진행했다.

## 제3절

## 외교 사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 1. 개관

외교부는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행사의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누리소통망(SNS) 등 디지털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대상 강연과 외교부 견학(비대면), 대학생 기자단 등 다양한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Public Outreach)을 전개했다. 또한 외교정책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기획홍보 사업으로 선정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와 동시에 외교부는 주요 외교정책과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했다. 재외공관에서도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우리나라에 우호적·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고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 2. 대국민 온라인 소통·참여 강화

외교부는 국민과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

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정부의 외교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고위급 양자·다자 외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 재외국민 보호, 공공외교, 국민외교, 청년 해외 진출 등 주요 외교 사안과 외교정책에 관한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특히 기존의 단편적, 일방향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30초 줌인뷰, 외교관 탐구생활, 웹툰 등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했다. 외교 현장의 뒷이야기를 담은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통해 외교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유명인과 외부매체를 활용해 파급력 큰 홍보를 추진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외교부는 2012년 9월 소셜 방송 ‘라이브모파(LiveMOFA)’를 개국하고 2021년 12월까지 총 153회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했다. 라이브모파는 주요 외교 사안 또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생방송으로 직접 전달함으로써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있다. 출범 10년 차인 2021년에는 라이브모파 프로그램을 총 22회 진행했으며 평균 조회 수는 1만 6,743회였다. 특히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 기자회견’ 편은 4만 명이 시청했다. 이렇듯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소통을 통해 2021년 외교부 SNS 구독자 수와 영향력이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sup>1)</sup>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390여 개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외교부 본부를 비롯한 전 재외공관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경량화(텍스트 모드)된 화면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접근성·편의성을 강화했다. 그리고 주발리 분관과 주필라델피아 출장소 홈페이지를 신설해 공관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재외공관의 SNS를 활성화하고자 본부에서 주요 외교정책과 한국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전 재외공관에 제공하고, 현지 사정에 적합한 콘텐츠를 공관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그래픽 디자인 플랫폼을 지원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외교 소식과 국내외 정보를 청년의 시각에 맞춰 흥미 있게 소개하는 정책 블로그 ‘모파랑’도 10년째 운영하고 있다. 모파랑은 다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맞추어 2020년 개설된 별도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청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 3.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 및 기획 홍보

외교부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 홍보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을 전개했다.

그간 외교부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이 외교부를 방문해 현직 외교관과 만나는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과 외교부 실무직원 또는 국제관계 자문대사가 전국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외교관 학교 방문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하지 진행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외교부 견학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 랜선 견학’ 영상 제작과 SNS 게재, 외교부를 실제와 같이 구현한 메타버스<sup>2)</sup> 구축을 통해 비대면 견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대학생 기자단 ‘프렌즈 오브 모파(Friends of MOFA)’를 10년째 운영하며 젊은 세대의 참신한 시각으로 다양한 외교정책을 홍보했다.

외교부는 2011년부터 매년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주요 외교정책과 사업을 선정해 집중 홍보하는 ‘기획홍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청년 해외 진출 지원사업 통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해 온 ‘지구청년’ 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유엔 가입 30주년, 한·메콩 교류의 해,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등 주요 행사와 정책을 홍보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1) 페이스북 팔로어 20만 1,403명, 트위터 팔로어 20만 5,432명, 유튜브 구독자 9만 700명, 인스타그램 구독자 8만 7,180명

2) 초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하며,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2021년 외교부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현황		
구분	매체(수단)	주요 활동
온라인 매체	소셜미디어	•국·영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운영 - 신속한 정보 전달과 다양한 기획 콘텐츠 게재 - 각종 민원 응대 등 국민과 쌍방향 소통
	블로그	•주요 외교부 뉴스와 행사, 국제 이슈, 대학생·청년들의 관심 주제 등을 글·동영상·사진으로 설명 •대학생 기자단 취재 기사 게재 •모바일 우선 전략에 따라 전면 카드뉴스 제작 방식 도입
	홈페이지	•본부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총 393개 운영 - 국·영문 각 1개, 재외공관 국문 187개, 외국어 203개(영어 87개, 현지어 116개), 어린이·청소년 홈페이지 1개
	뉴스레터·정책메일	•총 59회 발송
대국민 직접 접촉 활동	외교부 견학	•학생 및 일반인 대상 월 2회 실시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잠정 중단 - 견학 홍보 영상을 통한 비대면 견학, 메타버스를 통한 가상공간 견학 진행
	학교 방문 강연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
	대학생 기자단	•연 2기수 운영(반기별 기수당 국내외 총 40명) •외교특독: 메타버스상 '외교관과의 대화' 진행
기획 홍보	'지구청년'	•코로나19 상황 감안, 온라인으로 적극 홍보 시행 - 해외 채용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홍보 -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해 노출 확산
	P4G 서울 정상회의	•팬수, 월벤저스 등 유명인을 섭외해 홍보 영상 제작
	유엔 가입 30주년	•유튜브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채널과 협업해 홍보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	•웹툰 작가 이숨을 섭외해 홍보물 제작
	한-메콩 교류의 해	•배우 이광수를 홍보대사로 임명
	차세대 전자여권	•가수 현아를 섭외해 소개 영상 제작

4. 내외신 공보 서비스 강화

외교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한·미 정상회담, P4G 서울 정상회의,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현지인 특별기여자 입국 지원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장·차관 브리핑을 총 15회 진행했다.

또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정세불안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한·일관계 현안,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경제안보 등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특정 사안에 대해 더 상세한

정책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 백그라운드 브리핑과 브라운백 세미나도 87회 개최했다.

그 외에도 대변인 브리핑과 부대변인 일정 설명 브리핑(총 152회), 대언론 간담회(총 72회), 언론 취재 지원(총 86회), 언론 인터뷰와 기고(총193건), 보도자료(총 1,111건), 언론 응대 자료 배포(총 658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언론과 소통하고, 정확한 사실을 신속히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외교부는 외신 대상 정례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실시(총 7회)해 북핵문제, 한·일관계 등 외신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의 배경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정부의 외교정책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그 외에도 SNS, 이메일, 유선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외신 매체와 소통을 강화했다.

장·차관 등 외교부 본부 고위 간부급이 외신 대상 인터뷰·기고(총 9건), 간담회(총 4회)를 실시했고 재외공관장들은 현지 언론 대상 인터뷰(총 308건), 기고문(총 93건), 언론간담회(총 217건) 시행, 해외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영문 뉴스레터 발송(총 47건) 등을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홍보했다.



## 제4절

해외 체류 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1. 재외국민보호 활동 적극 수행

## 1)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조직예산 확충

## (1)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기반인 「영사조력법」이 2019년 1월 15일 제정된 데 이어, 국민토론회(2019.11.17, 12.1) 개최와 하위법령인 시행령(2020.12.29)·시행규칙(2021.1.13) 제정 등 일련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되었다. 그간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에 근거해 재외국민보호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재외국민보호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통합적인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외교부는 법 시행 이후 통일성 제고를 위해 관련 외교부지침(예규 및 훈령)을 일괄 정비했고(2021.3.11),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행정보제도 운영지침」과 「여행정보의 단계별 위험수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2021.10.7)했다.

영사조력법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와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행정보 발령, 신속 해외송금 등 다양한 재외국민보호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와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책무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 잡힌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 (2)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과 집행계획 수립

외교부는 2021년 「영사조력법」 시행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위원회(위원장: 외교부장관)’를 출범시켰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13개 중앙부처 정부위원(차관급)과 외교, 재난, 언론·홍보,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민간위원)로 구성되며, 재외국민보호 관련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심의·확정하며,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2021년 10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재외국민보호 활동 관련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 등 각 수행 주체의 기본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1년 11월에는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재외국민보호 집행계획을 작성했다.

## (3) 해외 사건·사고 상시 근무 정비

코로나19 대유행과 해외 위난 상황의 대형화·다변화로 위난 상황과 사건·사고 발생 시간·지역, 주말 등 취약 시간대를 보완하는 상시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21년 11월 현업 공무원 근거 규정을 신설해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 근무 체계의 법적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 근무자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 (4) 사건·사고 담당인력 증원과 재외국민보호 예산 확보

외교부는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영사 8명이 증원되었다.

한편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 지원, 영사조력 역량 제고, 해외안전정보 제공 노력 강화, 영사콜센터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2022년도 재외국민보호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145억 7,900만 원을 확보했다.

## 2) 예방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활동

### (1) 해외안전여행 정보 제공

외교부는 해외안전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안전문자 로밍 서비스 등을 통해 주요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YTN 해외안전여행정보’, KBS World 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국민일보 ‘해외선교·성지순례 안전기상도’ 등의 미디어 채널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해외안전여행 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왔다. 외교부는 여행 대상 국가의 최신 알림소식을 실시간 푸시 알림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동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는 국민의 재외국민보호와 영사 정보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7월 재외동포영사실에서 운영 중인 5개 홈페이지(해외안전여행·영사민원24·여권안내·워킹홀리데이·아포스티유)를 통합한 대표 홈페이지(04portal.mofa.go.kr)를 개설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영사조력법 시행 원년을 맞이해 외교부와 소방청 공동 주관으로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관련 영상물·웹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2021년 11월부터 온·오프라인상에서 수상작 홍보를 진행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공모전 개최와 수상작을 통한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사고와 재난 관련 안전의식을 높이고 영사조력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배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사조력법 시행 관련 홍보 효과를 보면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수상작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 2,000만여 회, 네이버 조회 수 100만여 회에 달하며, 영사조력법 시행 영상은 유튜브 조회 수 400만여 회를 돌파했다.

### (2) 여행경보제도

외교부는 2004년부터 해외 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네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인 여행경보 발령을 위해 2020년 3월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출국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위험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외교

부는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정세, 치안상황, 재난, 테러, 보건 등을 고려해 여행경보 수준을 일 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조정해 왔으며, 상황 변동에 따라 필요시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2020년 3월 23일부로 전 국가(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다음 2021년 말까지 계속 연장해 왔다.

### (3) 여행금지제도

외교부는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위난 상황으로 우리 국민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국가나 지역을 여행금지국가(지역)로 지정하고 있다. 2021년에는 이라크, 리비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소말리아가 여행금지국가로,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제도)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원칙적으로 우리 국민은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지역)를 방문·체류하거나 해당 국가(지역)에서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권법에 따른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여행금지제도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우리 국민이 방문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3) 대응 차원의 재외국민보호 활동

### (1)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

2018년 5월 개소한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 전파와 공관 지시 등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상시 대응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재외공관과 영사콜센터에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재외공관에 관련 업무 지시,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가동, 피해자의 국내 연고자 파악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해외 사건·사고 초동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호르무즈해협 우리나라 선박 억류(1월), 가나 해역 우리 국민 1명 피랍 사건(5월), 베냉 해역 우리 국민 4명 피랍 사건(5월), 아이티 우리 국민 부부 피랍 사건(6월) 등의 사건 해결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 내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해 현지 공관에서 활용 중인 선박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센터에 도입해 우리 국민 탑승 선박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2) 영사콜센터 운영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재난, 질병, 사건·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민원의 접수창구이자 1차적인 영사민원 대응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권·영사확인 관련 문의 등 영사 민원 업무 전반에 걸쳐 24시간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긴급 상황 시 통역 제공, 신속해외송금 지원, 해외여행객 대상 국가별 맞춤형 로밍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사콜센터가 제공하는 상담 건수는 2005년 개소 당시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해 코로나19 이전까지 연간 20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해외여행객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국가별 출입국 및 방역 조치 변경 관련 문의가 다수 접수되어 영사콜센터 상담 실적은 약 17만 건을 기록했다.

한편 영사콜센터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차세대 서비스 구축 사업을 진행했다. 2020년 무료전화 모바일앱과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위챗과 라인 상담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민원인의 국제전화 비용 부담을 낮추고 기존에는 유선전화로만 가능했던 민원상담 채널을 확대했다. 또 스마트폰 위치 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해 신속, 정확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로밍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의 현지 전화에도 안전문자 발송을 시행하는 등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강화했다.

## (3) 신속대응팀 운영

외교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의 전문 인력을 현장으로 파견하는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2021년에도 미얀마 비상사태 재외국민보호업무 지원(3월), 아이티 한국 선교사 납치사건 피랍자 구출 지원(6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업무 지원(7월) 등을 위한 신속대응팀을 적시에 파견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평시 대응 태세와 신속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건·사고 상황을 가정한 상황조

치 훈련 등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먼저 2월 주청다오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활주로 이탈 상황을 가정한 메시지 훈련을 실시했으며, 3월 주몽골대사관과 공동으로 지진 대응 상황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6월 신속대응팀 예비대상자 응소태세 점검을 위한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고, 11월에는 주호놀룰루총영사관과 공동으로 화산폭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 (4)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영사 회의 개최

외교부는 2021년 총 11회의 지역별 사건·사고 담당영사 회의를 개최했다. 3월 서남아·태평양 지역, 4월 일본·중국·대만·몽골·중유럽 지역, 5월 중남미·아프리카·동남아(2회)·중동·러시아·CIS 지역, 11월 중순 유럽 지역 사건·사고 담당영사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나, 11월 중순 진행된 유럽 지역 사건·사고 담당영사 회의는 밀라노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사건·사고 담당영사 회의를 통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 사건·사고 대응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본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영사의 역량을 강화했다.

## (5) 영사협력원 위촉

외교부는 2007년부터 재외공관이 주재하지 않거나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우리 국민이나 동포를 영사협력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외교부는 늘어나는 영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협력원 수를 매년 확대해 왔으며, 2021년 12월 기준 75개국에서 206명의 영사협력원이 활동하고 있다.

## (6)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 제도 운영

법률전문가 자문 지원 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대응 과정에서 담당 영사가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2021년 12월 기준으로 총 103개 공관에서 158명의 법률전문가와 자문약정을 체결했다. 국가별 사건·사고 관련 법령·규정에 관한 현지 전문가의 조언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 (7) 신속해외송금 지원

신속해외송금 제도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을 도난·분실하는 등 일시적인 재정 궁핍 상황에 처할 경우 국내 연고자 등의 긴급경비 송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부는 농협, 우리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신속해외송금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114건, 약 4억 7,300만 원의 송금을 지원했다.

### (8) 긴급지원비

긴급지원비는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사건사고 발생 시 자신이 수습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다른 기관이나 연고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정된 예산이다. 2021년에는 16건의 긴급지원을 집행했다.

## 2. 2021년 주요 사건·사고 대응

### 1) 개관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외 출국자 수가 줄어들어 전체 사건·사고 건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2020년 1만 6,135건→2021년 1만 1,472건), 코로나19 관련 사건·사고 및 민원(귀국 지원·방역물품지원·응급의료지원 수요, 격리 등 출입국 관련 민원, 재외국민 확진자)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현지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방역 강화 조치하에서 영사조력을 제공해야 함에 따라 기존 대비 사건·사고 대응 난도가 크게 높아졌다. 또한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파급 정도가 높은 복합 재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난과 2차 피해, 신종 감염병 출현, 테러와 쿠데타, 정정불안 등 해외 위난 유형이 다양화하면서 각종 유형의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증가했다.

### 2) 사건·사고 대응 주요 사례

#### (1) 미얀마 비상사태 대응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의 총선 결과를 문제 삼아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구금하고 2021년 2월 1일 신내각을 구성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3월에는 양곤 일부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어 미얀마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안전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외교부는 미얀마 군부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했다. 4월 2일 신한은행 미얀마 현지인 직원 사망 직후 미얀마 정정불안 관련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하는 등 재외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미얀마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재외국민의 귀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항공사와 협의를 통해 양곤~인천 간 직항 정기편 증편과 재외국민만 탑승 가능한 부정기편 별도 편성을 추진했다. 미얀마 내 정정불안으로 PCR 검사나 음성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재외국민을 위해서는 미얀마 체류 재외국민의 귀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얀마 체류 재외국민 1,568명이 무사히 귀국했다.

#### (2) 호르무즈해협 우리나라 선박 억류 사건 대응

2021년 1월 4일 오만 하사브(Khasab) 인근 해역을 운항 중이던 우리나라 국적 선박인 한국 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당시 한국 케미호에는 한국인 선장 외에 4명의 한국인 선원과 15명의 외국국적 선원(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총 20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직후 정부는 억류된 선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주이란한국대사관에는 현장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고, 24시간 신속대응체제를 가동하기 위해 우리나라 선박이 억류된 반 다르아바스항으로 현장지원팀을 급파했다. 또한 정부는 이란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억류 해제를 촉구하는 한편,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인도 등 관련 국가, 국제기구와 다자 차원의 공조를 추진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이란 정부는 2021년 2월 2일 선원 19명, 4월 9일 선박과 선장의 억류를 해제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약 10주간 매주 평균 4회), 정부대표단 파견(2회) 등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가동했다. 또한 반다르아



바스 현장지원팀을 중심으로 역류 선원들과 통화(60회 이상), 영사 접견(7회 이상), 병원 진료와 물품 반입 지원 등 영사조력을 제공했다.

### (3) 애틀랜타 총격사건과 미국 지역 증오범죄 대응

2021년 3월 16일 미국 애틀랜타 인근에서 백인 남성의 연쇄 총격으로 한국계 여성 4명이 사망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우리 국민 피해 사실 확인과 유가족 지원, 증오범죄 예방 대책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24시간 사건·사고 모니터링 체제 강화 등을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취했다. 한인사회의 여타 소수민족 커뮤니티와 연대활동 지원, 미국 정부·의회와의 증오범죄 대응 활동 지지, 한인사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등 다방면으로 증오범죄 대응 노력을 병행했다.

### (4) 기니만 인근 우리 국민(5명) 피랍 사건 대응

2021년 5~6월 기니만 해상에서 2건의 우리 국민 피랍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사건 접수 직후 본부에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현지 공관에는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본부-재외공관-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했다. 또한 피랍된 우리 국민의 국내 가족과도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억류되었던 우리 국민 총 5명이 전원 무사히 귀환했으며, 외교부는 우리 국민 석방 이후에도 신병 인수, 건강 확인, 귀국 지원 등 영사조력을 지원했다.

#### • 가나 해상 우리 국민 피랍 사건

- 2021년 5월 20일(한국 시간), 가나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 1명을 포함한 선원 5명이 해적 세력에 피랍. 피랍 41일째인 6월 29일 오전(한국 시간) 전원 무사히 석방

#### • 베냉 해상 우리 국민 피랍 사건

- 2021년 6월 1일(한국 시간), 베냉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 4명을 포함한 선원 5명이 해적 세력에 피랍. 피랍 62일째인 8월 1일 오후(한국 시간) 전원 무사히 석방

### (5) 아프가니스탄 치안 악화 관련 대응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임무 종료(2021.8월) 기한이 공표되며 아프가니스탄 내 정정이 불안해지고 치안이 악화되었다.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의 안전을 위해 현지 체류 국민의 철수를 지원했다. 외교부는 우선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본부 합동 안전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을 실사했다. 또한 현지 정세 악화와 급격한 위기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미국 정부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은 모두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다.

### (6) 아이티 선교사 부부 피랍 사건 대응

2021년 6월 24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우리 국민 선교사 부부, 한국계 미국 선교사 부부, 현지인 1명(총 5명)이 차량 이동 중 갱단에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본부와 주도미니카대사관(아이티 겸임)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해 긴급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아울러 외교부 제1차관과 아이티 총리 겸 외교장관 간 통화 등 아이티 관계당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본부-공관 간 합동대책회의 개최, 주도미니카대사를 포함한 신속대응팀 현지 파견 등 우리 국민을 무사히 석방시키기 위해 총력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17일째인 7월 10일 우리 국민 선교사 부부를 포함한 피랍자 전원이 무사히 석방되었다. 사건 해결 이후에도 외교부는 아이티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치안상황 안내, 출국 권고(여행경보 3단계) 등 아이티 체류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 (7) 히말라야 정상 완등 우리 국민 조난 대응

2021년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를 등정하던 우리 국민이 조난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교부는 사고 발생 즉시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인근 주중국대사관, 주파키스탄대사관을 통해 주재국 정부에 수색헬기 등 구조대 파견을 요청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본부 및 공관 간 상황점검과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구조·수색 작업이 공식 중단될 때까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속했다.

### 3. 재외동포 지원 강화

#### 1)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 (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국무총리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1996년 설립되어 2021년까지 총 20차례의 정책위원회와 30차례의 실무위원회가 개최됐다.

2021년에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외교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 국내 체류 동포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사할린동포법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했다.

##### (2)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및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의 날(10.5)은 전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733만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의를 되새기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전 세계 한인회장이 모이는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연계해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2020년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되지 못했으나 2021년에는 방역 조치를 준수한 가운데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외교부의 후원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는 ‘하나 된 동포, 더 강해진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4~7일 개최되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 동포사회와 모국간 유대 강화의 장이 되었다.

#### 2)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

##### (1) 재외 한글학교 지원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차세대 동포가 모국의 언어와 역

사, 문화에 대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1,470개 한글학교의 운영비 등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수업 제약 극복을 위해 한글학교 온라인 수업 활용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한글학교 교사 연수를 진행하는 등 한글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했다.

##### (2)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은 2021년 9월 7~10일 전 세계 한인 차세대를 초청해 세계한인 차세대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7개국 136명의 차세대 대표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를 통해 한인 차세대 인재의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국무총리 화상간담회를 개최해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방안과 동포사회 주요 현안 해소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 3) 역사적 특수동포 등 지원 강화

##### (1) 사할린동포의 안정적 귀국과 고국 정착 지원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담당부처로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원했으며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안정적 고국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업 대상자가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과 피해구제가 강화되었다.

2021년도에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으로 총 334명의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했다. 외교부는 2021년도 영주귀국 사업 시행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이후에도 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2) 해외 한인입양인 지원

외교부는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한인입양인이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거주국 내에서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한 지원을 지속했다. 특히 미국으로 입양되었으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한인입양인에게 는 법률상담과 정보 제공 등 체류자격 안정화를 위한 동포단체 활동을 지원했다.

2021년 11월에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차세대 해외 입양동포 모국 방문 행사를 개최해 해외 입양동포의 모국에 대한 유대감 형성과 해외 입양동포 간의 교류 강화를 도모했다.

### (3)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동포 지원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장기화를 감안해 2020년에 이어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실직자, 홀몸 고령자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동포를 지원했다. 27개국 49개 동포단체에 약 2억 원을 지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에게 식료품, 생필품, 방역물품 등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재외동포사회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간의 유대, 동포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제5절

## 해외 진출 우리 국민 편익 증진

### 1. 사증면제협정 체결 확대

우리나라는 2021년 말 기준 총 111개 국가와 사증면제협정<sup>1)</sup>을 체결했다. 2021년에는 아르헨티나(일반여권), 이라크(외교관여권), 카타르(외교관·관용·일반여권), 파푸아뉴기니·카메룬·북마케도니아(외교관·관용여권), 케냐(외교관여권) 등 국가와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2.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우리나라는 1995년 호주를 시작으로 2021년 말 기준 총 24개 국가(지역)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했다.

외교부는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설명회를 총 44회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워킹홀리데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 경험이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워킹홀리데이 홍보단 ‘위홀 프렌즈’를 선발해 워킹홀리데이 예비 참가자의 사전 준비를 지원했다. 외교부는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위홀프렌즈 운영, 위홀 설명회, 콘텐츠 공모전 등 모든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1)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사증 없이 상대국을 일정 기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약.

그와 함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에 주재하는 각 재외공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관할지역 최신 안전정보 제공, 법률상담 제공, 권익침해 시 구제절차 안내 등 참가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워홀러 상담원’ 운영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현지 정착을 지원했다.

외교부는 또한 워킹홀리데이 가이드북을 국문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6개 국어로 제작해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참가자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 3. 운전면허 상호 인정 확대

정부는 2021년 말 기준 총 27개 국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약정)을 체결해 우리나라 국내면허를 인정하는 국가는 2021년 12월 말 기준 총 136개국이다. 한편 우리나라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는 2021년 12월 말 기준 54개국으로, 2020년의 37개국에서 17개국이 늘어나 우리 국민의 체류 편익이 더욱 확대되었다.

### 4.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및 제도 개선

#### 1)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외교부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과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재질의 개인정보면을 채택한 전자여권을 도입했다. 새롭게 도입된 전자여권의 PC 재질의 개인정보면은 내충격성·내열성 등을 갖추었으며 개인정보를 레이저로 각인해 위·변조를 어렵게 했고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를 제외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 2)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외교부는 여권을 신청할 때마다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는 병역의무자의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국외여행허가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기존에는 여권 수령 시 신분증 제시를 통해 해당 여권의 명의인임을 증명했으나, 여권 수령 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21년 8월 5일부터 433개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신분증뿐만 아니라 안면인식, 지문확인, 인터뷰 등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여권발급제도 개선을 시행해 병역의무자도 2021년 12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과 동시에 여권의 사증란 추가 폐지,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출생지 기재 시행 등 여권행정민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 3)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및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 운영

외교부는 여권 신청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252개 기관, 출장소 12개 포함)에서 여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2014년 3월부터 8명의 강사가 상주 근무하는 여권실무교육연구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외 2,000여 명의 여권업무 담당자에게 여권 실무와 법령 등에 관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합교육이 아닌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해 화상 여권실무연수(기초, 기본, 사례집 특강 포함) 교육을 진행해 249개 국내 대행기관에서 1,612명이 98개 재외공관에서 286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 4) 긴급여권 제도 개선 및 발급기관 확대

외교부는 2021년 1월 5일 여권법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제도를 신설해 발급 근거를 마련한 후 7월 6일부터 보안성과 발급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차세대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했다. 또한 긴급여권 발급을 위한 민원인의 접근성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했다.



## 5. 영사 서비스 품질 향상

### 1) 재외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개선

정부는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영사민원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영사민원서비스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국내행정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맞춤형 온라인 민원포털인 ‘영사민원24’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했다.

2021년에는 전자문서 지갑, 여권 관련 온라인 신규 서비스, 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등 온라인 서비스를 총 26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7월 코로나19 격리면제서 신청과 발급을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방역당국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입국자 편의 증대 및 방역을 강화했다. 12월 영사민원24에 격리면제서 관련 상담서비스(챗봇)를 시범 구축함으로써 24시간 대국민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 2) 순회영사 활동 강화

순회영사는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담당 영사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영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2021년에는 139개 공관에서 총 752회의 순회영사 활동을 전개해 5만 102건의 영사 민원(여권, 공증, 병무 등)을 처리했다. 또한 순회영사 활동을 계기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재국 지역 경찰, 이민청 등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도 한층 강화했다.

---

# 08.

CHAPTER.

---

## 외교역량 강화 노력

---

218

제1절  
조직 및 인사

221

제2절  
교육·평가제도 및 연구 활동



## 제1절

## 조직 및 인사

## 1. 외교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외교부는 외교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본부와 재외공관 조직을 개편했다. 무상 원조 정책 및 전략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개과(개발전략과)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원활한 시행과 통합적 무상원조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외교부는 급증하는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계속 정비해 왔다. 호주 브리즈번에 출장소를 신설하는 한편, 「영사조력법」의 시행 지원을 위한 본부 인력을 보강하고,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담당 인력도 증원했다.

## 2. 외교 인력의 효율적 운용

외교부는 급변하는 외교 업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②능력과 실적에 기반한 공정·균형 인사 운영 ③개방형 직위와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한 열린 공직사회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 1) 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외교부는 2013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을 도입해 대한민국 외교를 이끌어 갈 정예 외교인재를 육성해 왔다. 2021년에 8회 차를 맞이한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은 외교 전문성, 공직가치, 전략적 사고 등을 갖추어 국익을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외교관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참사관(과장급)과 고위외무공무원(국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능력과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외교역량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총 4회의 정기 외교역량평가를 비롯해 인사 교류, 개방형 직위, 경력 경쟁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수시 외교역량평가를 10회 수행했다.

## 2) 능력과 실적에 기반한 공정·균형 인사 운영

외교부는 선호·비선호 직위 순환근무 등 규정과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인사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외교역량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금융, 방위산업, 영사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관장을 해당 업무 수요가 있는 공관에 배치하는 등 맞춤형 인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능력 있는 참사관급 직원을 소규모 공관장(분관장)으로 발탁하고, 실무직원 공관 발령 시 지역·언어 전문성과 연계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여성 고위공무원과 본부 과장급 관리자를 적극 발굴, 육성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 3) 개방형 직위와 인사교류 확대를 통한 열린 공직사회 구현

외교부는 공직 개방성·전문성 확대와 부처 간 소통·협업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전문성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외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과 부처 간 인사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역 전문성과 외국어 구사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재외공관 개방형 직위에 임용해 열린 공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

확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통일부 등 여러 유관 부처와 다양한 직급에서 인사 교류를 시행해 부처 간 소통·협력 증진에도 기여했다.

## 제2절

## 교육·평가제도 및 연구 활동

### 1. 외교 인력 교육

국립외교원(KNDA)은 2021년 ‘제8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을 약 46주 동안 운영했다.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교육생 총 47명(일반 외교 44명, 지역 외교 3명)이 공직소명의식, 전문지식, 실무역량, 외국어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나아가 전·현직 외교관, 국내외 학자 등의 특강을 통해 외교관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과 소양을 키웠다. 제8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은 코로나19 상황 속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대면·비대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공관 현장실습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체교육이 이루어졌다. 대체교육은 정부, 재외국민 보호,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공공외교 등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제8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은 국민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해 외교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4주간의 본부 업무 실습을 통해 실무를 직접 경험했다. 아울러 국가인재개발원 5급 신입 관리자 과정 교육생들과 온라인 합동교육을 통해 부처 간 협업 능력을 배양했다. 국립외교원 주관하에 실제 외교협상 사례를 기반으로 한 모의협상 시뮬레이션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대외 협상 이해도를 높이고, 부처 간 조정·통합 역



량과 협상 기술을 익혔다.

한편 ‘외무영사직 기본과정’에서는 신규 직원들의 영사역량 배양을 위해 해외 위난 상황 대응 실습, 영사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재외국민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학습했다. 아울러 2021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외교원은 대국민 영사서비스 제고 노력의 일환으로 영사 교육 커리큘럼을 실습형·참여형 위주의 3주 집중 과정으로 재편했다. 그와 더불어 해외 사건·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건·사고 담당영사 기본교육을 진행(8월)해 재외공관의 영사 역량 제고에 기여했다.

국립외교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계획된 모든 교육과정을 진행해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공관장 과정(4월, 10~11월), 공관 중간관리자 과정(1월, 7월), 재외공관 발령자 과정(1월, 7월), 초임국장 과정(12월), 초임과장 과정(11월), 사무관 과정(12월), 일반직 실무자 과정(11월) 등 직급별·단계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해외 사건·사고의 신속한 대처와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영사시뮬레이션 교육을 세 차례(6월, 9월, 12월) 진행하고,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국립외교원은 외교 환경 다변화를 반영해 특수어권 연수 신설, 재외공관 현지어 교육 강화, 코로나19 환경에 맞춘 부내 외국어 수업 과정에 온라인 교육 방식 전면 도입 등을 통해 외국어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했다.

아울러 지리적·예산상 제약,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충분한 대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재외공관 근무 직원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화상 교육 시스템인 ‘외교배움e’ 개발을 진행했다. 또한 ‘재외공관 역량 강화 워크숍’을 대면·비대면(실시간 화상) 혼합 방식으로 진행[주프랑스대사관(11월), 주이스탄불총영사관(11월), 주라오스대사관(12월), 주볼리비아대사관(12월)]해 재외공관 직원들의 소통과 협업 역량 제고에 일조했다.

대외과정으로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국장급 간부 대상)과 국제협상 및 국제회의 과정(정부·지자체·공공기관 국제업무 담당 실무자 대상)을 운영해 타 기관의 국제업무역량 강화에 기여했으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2021년 25개 대학에서 약 6,000명 참여) ‘주요 국제문제 특강’을 진행해 외교 현장 이해도를 제고했다. 또한 주한외교관 한국 소개 프로그램, 국제외교관 연수 과정 등 외국 외

교관 대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 홍보 및 친한 인사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국립외교원은 대외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 외교관 대상의 글로벌 교육과정인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EADP: East Asian Diplomacy Program)’을 정식 출범시켰다.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은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외국 외교관들과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동아시아 외교 현안을 논의하는 외교 전문 교육 과정이다. 국립외교원은 국립외교타운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 전용관’에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면 방식으로 2021년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한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 특별과정(4.19~5.12)과 동아시아 담당 주니어급 외교관을 대상으로 8주간의 동아시아외교전문과정 정규과정(10.5~11.26)을 개최해 한국어·문화와 정부의 외교정책 이해도 제고를 통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지지 기반 확충에 기여했다.

또한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역량개발교육(2개 과정, 총 4회)과 외교역량평가를 수행했다.

## 2. 외교안보 연구 활동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외교 현안의 심층 분석과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 중장기 대외전략 구상,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구축,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외교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는 <국제정세전망(국문 1회, 영문 1회)>, <IFANS FOCUS(국문 22회, 영문 23회)>, <주요국제문제분석(36회)>, <정책연구과제(26회)> 등 간행물을 발간해 국제 이슈와 외교 현안의 심층 분석과 정책 건의 역할을 수행했다. 또 <IFANS BRIEF>, <특별정책보고> 등 보고서를 작성해 정책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영문 보고서 <IFANS PERSPECTIVES(10회)>를 발간해 해외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정책공공외교 활동을 확대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정부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정책 제언의 시의성을 높였다.

IFANS 국제문제회의, 한·중·일 3자 협력포럼, 한·EU 전략대화,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서울국제법아카데미 등 총 20건의 다양한 국제 학술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

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대국민 강연회인 ‘IFANS Talks(2회)’를 개최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KNDA 학술논문상을 공모했으며, 외교 현안 분석보고서를 쉽게 설명한 ‘IFANS Dialogue(3건)’를 제작했다. 또한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에 연구 성과물을 공개하고, 소속 교수진의 언론을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개최 주요 국제회의		
행사명	일자 및 장소(형식)	관련 기관
4개 외교안보 싱크탱크 공동 학술회의	3.24~26, 제주 (웨비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
한-EU 전략대화	6.17, 국민외교타운 (웨비나)	유럽연합안보연구소(EUISS)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세션 참가	6.23~27, 제주	국제평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 동아시아재단, 외교부 정책기획담당관실
2021년도 IFANS 국제문제회의	7.28~29, 국민외교타운 (웨비나)	-
제10차 한·미·일(KNDA-CEIP-JIIA) 3자회의	7.29~30, 국립외교원 (웨비나)	미국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제30차 한·중 학술회의	9.9, 국민외교타운 (웨비나)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제36차 한·일 학술회의	9.16, 국민외교타운 (웨비나)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한·미·중 3자 회의	9.29, 국립외교원 (웨비나)	-
한·러 싱크탱크 네트워킹 세미나	9.30, 국립외교원 (대면·비대면 혼합)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외교부 유라시아과
한·러 정경 콘퍼런스 (한·러 대화)	10.1, 국립외교원 (웨비나)	사단법인 한러대화(KRD)
2021 동북아 평화협력 포럼	10.6~7, 국민외교타운 (웨비나)	외교부 아태지역협력과
2021 서울국제법아카데미	10.18~29, 국민외교타운 (웨비나)	-
제1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	10.27, 국민외교타운 (웨비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도세계문제협회(ICWA),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RIS)

행사명	일자 및 장소(형식)	관련 기관
국립외교원·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례회의	10.28, 국민외교타운 (웨비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11.11, 국민외교타운 (웨비나)	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ASEAN-ISIS) <sup>1)</sup>
한·미·중 3자 회의	11.16, 국립외교원 (웨비나)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국제전문가 화상회의	11.25, 서울 (웨비나)	서울국제법연구원
제14차 한·중·일 3자 협력포럼	12.8, 국민외교타운 (웨비나)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중국사회과학원(CASS),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국제회의	12.15, 국립외교원 (웨비나)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제6차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NTCT) 대표자 회의 및 2021 NTCT 콘퍼런스	12.29, 국민외교타운 (웨비나)	중국외교학원(CFAU), 일본국제포럼(JFIR)

3. 공관장 성과평가

2021년 외교부는 「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을 개정해 정무, 경제·통상, 영사, 공공외교·홍보, 운영지원, 개발협력 등 6대 업무 분야에 걸친 재외공관장의 성과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했다. 이를 통해 재외공관 외교활동의 전반적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1) 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ASEAN-ISIS): 라오스 국제문제연구소(IFA: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ISIS Malaysia: Institut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 미얀마 전략국제문제연구소(MISIS: Myanmar Institut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브루나이 정책전략연구소(BDIPSS: Brunei Darussalam Institute of Policy and Strategic Studies), 베트남 외교아카데미(DAV: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싱가포르 국제문제 연구소(SIIA: Singapor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Indonesia: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donesia), 캄보디아 평화협력연구소(CICP: Cambodian Institute for Cooperation and Peace), 태국 안보국제문제연구소(ISIS Thailand: Institute of Security and International Studies Thailand), 필리핀 진보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협력 재단(APPPFI: Asia Pacific Pathways to Progress Foundation Inc.)

# 부록.

228

외교부  
조직도

230

외교관계  
수립 현황

233

재외공관  
현황

235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239

2021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

240

경제·통상  
관계 현황

244

2021년 조약  
발효 현황

246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248

재외동포  
현황

249

운전면허  
상호인정 현황

252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253

2021년 주요  
국제 관계 일지







2 외교관계 수립 현황

1) 남·북한 수교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지역	한국	북한	동시수교
아주	37	25	25
미주	34	24	23
구주	54	49	49
중동	18	16	14
아프리카	48	46	46
계	191	160	157

\* 한국은 191개 유엔회원국(남·북한 제외) 중 189개국(시리아, 쿠바 미수교) 및 유엔비회원국인 교황청, 쿡제도와 수교  
- 미수교국: 시리아, 쿠바, 코소보

2) 남·북한 단독 수교국 현황

지역	한국	북한
아주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부탄, 사모아, 솔로몬제도, 일본,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쿡제도, 말레이시아(12)	
미주	미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11)	쿠바(1)
구주	교황청, 모나코, 안도라, 에스토니아, 프랑스(5)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4)	시리아, 팔레스타인(2)
아프리카	보츠와나, 에스와티니(2)	
계	34	3

3) 남·북한 동시 수교국 현황

지역	국명
아주 (25)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미주 (23)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구주 (49)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중동 (14)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아프리카 (46)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계	157

4) 한국 수교국 현황

지역	국명
아주 (37)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쿡제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호주
미주 (34)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구주 (54)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18)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아프리카 (48)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계	191

3 재외공관 현황

1) 남·북한 재외공관 현황

(2021년 12월 기준, ()는 북한)

지역	상주 대사관	총영사관	대 표 부	계
아주	24 (13)	22 (2)	1 (0)	47 (15)
미주	21 (5)	13 (0)	1 (1)	35 (6)
구주	36 (13)	9 (1)	3 (2)	48 (16)
중동	17 (6)	2 (0)	0 (0)	19 (6)
아프리카	18 (10)	0 (0)	0 (0)	18 (10)
계	116 (47)	46 (3)	5 (3)	167 (53)

\* 한국의 경우: 타이베이대표부, 13개 분관(오克蘭드, 카라치, 라스팔마스, 본, 라고스, 킹스턴, 멜버른, 말라보, 세부, 트빌리시, 시엠립, 아르빌, 발리), 7개 출장소(하트나, 유즈노사할린스크, 앵커리지, 다렌, 댈러스, 필라델피아, 브리즈번)는 통계에서 제외

2) 지역별 남·북한 상주공관 현황

지역	구분	한국	북한
아주	대사관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24)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13)
	총영사관	중국(8) <sup>1)</sup> , 일본(9) <sup>2)</sup> , 시드니, 호치민, 뭄바이, 첸나이, 다낭(22)	선양, 홍콩(2)
	대표부	아세안(1)	
미주	대사관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21)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쿠바, 페루(5)
	총영사관	미국(9) <sup>3)</sup> , 캐나다(3) <sup>4)</sup> , 상파울루(13)	
	대표부	유엔(1)	유엔(1)

1) 광저우, 상하이, 선양, 시안, 우한, 청두, 칭다오, 홍콩  
2) 고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요코하마, 후쿠오카, 히로시마  
3)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호놀룰루, 휴스턴  
4)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

지역	구분	한국	북한
구주	대사관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36)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체코, 폴란드(13)
	총영사관	밀라노, 바르셀로나, 블라디보스톡, 상트페테르부르크, 알마티, 이르쿠츠크,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9)	블라디보스톡(1)
	대표부	제네바, 오이시디(파리), 유네스코(3)	제네바, 프랑스(일반대표부·유네스코 겸임)(2)
중동	대사관	리비아, 레바논,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17)	리비아, 시리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6)
	총영사관	두바이, 젯다(2)	
아프리카	대사관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18)	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니,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10)
계		167	53

4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현황

1) 유엔 및 유엔 산하·전문·독립기구

열번	기구명	한국가입	북한가입	소재지
1	국제연합(UN)	1991	1991	뉴욕
2	세계보건기구(WHO)	1949	1973	제네바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1977	로마
4	만국우편연합(UPU)	1900	1974	베른
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1974	파리
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1975	제네바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52	1977	몬트리올
8	국제통화기금(IMF)	1955	-	워싱턴DC
9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55	-	워싱턴DC
10	국제개발협력(ODA)	1961	-	워싱턴DC
11	국제금융공사(IFC)	1964	-	워싱턴DC
12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	-	워싱턴DC
13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1967	-	워싱턴DC
14	세계기상기구(WMO)	1956	1975	제네바
15	국제해사기구(IMO)	1962	1986	런던
16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1980	빈
17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1979	1974	제네바
18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978	1987	로마
19	국제노동기구(ILO)	1991	-	제네바
20	세계관광기구(UNWTO)	1975	1987	마드리드
21	세계무역기구(WTO)	1995	-	제네바
22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1974 가입 1994 탈퇴	빈
23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1996	제네바
24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4	1992	방콕
25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2007	-	칠레
2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4	1973	제네바
27	유엔 외가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1994	-	빈

\* 유엔산하기구(Funds and Programs)인 경우, 유엔 회원국 모두가 회원국으로 간주되므로 미표기  
\* 소재지는 도시명으로 표기(단, 알기 어려운 도시의 경우 국가명으로 표기)

2) 정부 간 기구

(OECD 준독립기구 및 협력기구 포함)

일련 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6	-	파리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	-	싱가포르
3	아시아개발은행(ADB)	1966	-	마닐라
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991	-	런던
5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1980	-	코트디부아르
6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982	-	코트디부아르
7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0	-	쿠알라룸푸르
8	동남아·뉴질랜드·호주중앙은행기구(SEANZA)	1966	-	호주
9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1982	-	쿠알라룸푸르
10	국제백신연구소(IVI)	1997	-	서울
11	유엔기념공원(UNMCK)	1959	-	부산
12	국제결제은행(BIS)	1997	-	바젤
13	세계관세기구(WCO)	1968	-	브뤼셀
14	아시아생산성기구(APO)	1961	-	도쿄
15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1970	1974	뉴델리
16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963	-	뉴델리
17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	1981	1995	방콕
18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1962	-	방콕
19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1979	1994	방콕
20	국제의회연맹(IPU)	1964	1973	제네바
21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1971	1981	로마
22	콜롬보플랜(Colombo Plan)	1962	-	스리랑카
23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1962	-	마닐라
24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2013 (준회원 재가입)	제네바
25	국제도량형국(BIPM)	1959	1981	프랑스
26	지구환경금융(GEF)	1994	1994	워싱턴DC
27	국제연·아연연구그룹(ILZSG)	1987	-	리스본
28	상품공동기금(CFC)	1982	1987	암스테르담
29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997	-	헤이그
30	세계채소센터(WVC)	1971	-	대만
31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1954	-	워싱턴DC
3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1970	-	마드리드
33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1968	1986 가입 1996 탈퇴	로마
34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1985	2013	런던
35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TSO)	1967	2001	워싱턴DC
36	국제수로기구(IHO)	1957	1987	모나코

일련 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37	아시아-태평양양수산업위원회(APFIC)	1950	-	방콕
38	중서대서양수산업위원회(WECAFC)	1974	-	바베이도스
39	중동대서양수산업위원회(CECAF)	1968	-	가나
40	중서부태평양수산업위원회(WCPFC)	2004	-	마이크로네시아
41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1996	2012 (옵서버)	세이셸
42	북서대서양수산업기구(NAFO)	1993	-	캐나다
4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1985	-	호주
44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978	1974	파리
45	국제포경위원회(IWC)	1978	-	영국
46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1995	-	캐나다
47	국제이주기구(IOM)	1988	-	제네바
48	국제포플러위원회(IPC)	1973	-	로마
49	국제설탕기구(ISO)	1993	-	런던
50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1981	-	로마
5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1953	2001	파리
52	국제곡물이사회(IGC)	1953	-	런던
53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1985	-	요코하마
54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2007	파리
55	국제해저기구(ISA)	1996	-	자메이카
56	상설중재재판소(PCA)	2000	-	헤이그
57	국제에너지기구(IEA)	2002	-	파리
58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2002	-	제네바
59	미주개발은행(IDB)	2005	-	워싱턴DC
60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2006	-	누르술탄
61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2006	-	벨기에
62	국제미작연구소(IRRI)	1991	-	필리핀
63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2018	1956	폴란드
64	아시아지역해적퇴치협정(ReCAAP)	2006	-	싱가포르
65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1998	-	영국
6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1999	-	빈
67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1970	-	대만
68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2001	-	호주
69	금융안정위원회(FSB)	2009	-	바젤
70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009	-	바젤
71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2011	-	아랍에미리트
72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2012	-	서울
73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2003	-	밴쿠버
74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2005	-	샌디에이고



일련 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75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2011	-	나미비아
76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2012	-	뉴질랜드
77	OECD 개발센터(DEV)	1991	-	파리
78	OECD 원자력기구(NEA)	1993	-	프랑스
79	국제교통포럼(ITF)	2007	-	파리
80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2009	-	파리
8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009	-	파리
82	국제형사재판소(ICC)	2003	-	헤이그
83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1997	-	헤이그
84	국제핵융합실험로국제기구(ITER)	2003	-	파리
85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2014	-	레위니옹
86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2015	-	도쿄
8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2015	-	베이징
88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1996	-	함부르크
89	불어권국제기구(OIF)	2016 (옵서버)	-	파리
90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2018	-	서울
91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2020	-	온두라스
92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2011	-	서울
93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2011 (부문별 대화동반자)	-	이스탄불
94	아태방송개발기구(AIBD)	1978	-	쿠알라룸푸르
95	미주농업협력기구(IICA)	1981 (옵서버)	-	코스타리카
96	아시아재보험기업(ARC)	2005	-	방콕

5 2021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

구분	행사 내용
대통령 해외 순방 (5회 8개국) ※ 미국 2회, 영국 2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미국 공식 실무 방문(5.19~23)</li><li>• G7 정상회의 참석(영국) 및 오스트리아·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국빈 방문(6.11~18)</li><li>• 제76차 유엔총회(뉴욕) 참석 및 호놀룰루 방문(9.19~23)</li><li>• 교황청 공식 방문, G20 정상회의(이탈리아 로마) 및 COP26 정상회의(영국 글래스고) 참석, 헝가리 국빈 방문 및 한·비셰그라드그룹(V4) 정상회의 참석(10.28~11.5)</li><li>• 호주 국빈 방문(12.12~15)</li></ul>
국무총리 해외 방문 (1회 1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란 방문(4.11~12)</li></ul>
정상급 외빈 접수 (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8.16~17)</li><li>•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8.24~26)</li><li>• 필리프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 실무 방한(11.14~16)</li><li>•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11.21~24)</li><li>•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12.16~18)</li></ul>

6 경제·통상 관계 현황

1) 경제·통상 관련 주요 지표

(잠정수치인 경우 연도 옆 'p' 표시)

구분	2017	2018	2019	2020 <sup>p</sup>	2021 <sup>p</sup>
국내총생산 (명목GDP, 억 달러)	16,233	17,252	16,510	16,382	17,978
1인당 국민총소득 (명목GNI, 달러)	31,734	33,564	32,204	31,881	35,168
경제성장률 (실질GDP기준, %)	3.2	2.9	2.2	-0.9	4.0
소비자물가상승률(%)	1.9	1.5	0.4	0.5	2.5
실업률(%)	3.7	3.8	3.8	4.0	3.7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기준, 억 달러)	229	269	233	206	290
경상수지(억 달러)	752	775	597	759	883
외환보유액(억 달러)	3,893	4,037	4,088	4,431	4,631
대외채무(억 달러)	4,120	4,412	4,707	5,449	6,285

\*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2) 우리나라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2017	573,694	15.8	478,478	17.8	95,216
2018	604,860	5.4	535,202	11.9	69,658
2019	542,233	-10.4	503,343	-6.0	38,890
2020	512,498	-5.5	467,633	-7.1	44,865
2021	644,400	25.7	615,093	31.5	29,307

\* 출처: 한국무역협회

3) 우리나라 해외 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sup>p</sup>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아시아	8,228	21,348	8,589	24,892	6,212	21,505	3,962	11,963
중동	176	883	148	795	110	843	81	174
북미	2,053	14,542	2,202	21,779	2,020	20,845	1,616	23,970
중남미	685	7,765	888	16,758	696	9,643	614	11,889
유럽	1,355	14,432	1,497	17,498	1,174	17,095	881	12,708
아프리카	151	147	157	742	115	563	100	132
대양주	246	496	240	1,323	248	1,426	188	2,404
전체	12,894	59,613	13,721	83,786	10,575	71,919	7,442	63,240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4)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sup>p</sup>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미주	523	7,834	538	8,582	501	8,757	556	6,591
아주	1,650	9,356	1,627	6,624	1,212	6,504	1,825	9,001
구주	380	9,040	419	7,359	387	4,829	437	12,867
중동	69	594	56	756	67	547	127	562
아프리카	68	76	58	7	35	5	135	14
전체	2,669	26,902	2,674	23,328	2,184	20,642	3,073	29,035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건수는 1개 사업에 여러 나라가 투자한 경우 국별로 각각 건수를 계산함에 따라 지역별 합계와 상이할 수 있음

\* 2020년, 2021년 통계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미포함

5) 우리나라의 10대 교역 상대국

(교역 규모 순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교역 규모
1	중국	162,913	138,628	301,541
2	미국	95,902	73,213	169,115
3	일본	30,062	54,642	84,704
4	베트남	56,729	23,966	80,695
5	대만	24,285	23,486	47,771
6	호주	9,750	32,918	42,668
7	홍콩	37,467	2,247	39,714
8	독일	11,110	21,996	33,106
9	사우디아라비아	3,325	24,271	27,596
10	러시아	9,980	17,357	27,337

\* 출처: 한국무역협회

6) 10대 무역수지 흑자국

(통관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9		2020		2021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1	홍콩	30,133	홍콩	29,114	홍콩	35,220
2	중국	28,974	베트남	27,932	베트남	32,763
3	베트남	27,106	중국	23,680	중국	24,285
4	미국	11,465	미국	16,624	미국	22,689
5	인도	9,531	인도	7,036	인도	7,547
6	싱가포르	6,108	마셜제도	4,836	튀르키예	5,789
7	멕시코	4,767	폴란드	4,805	필리핀	5,765
8	필리핀	4,707	튀르키예	4,228	폴란드	5,494
9	폴란드	4,544	필리핀	4,040	싱가포르	3,458
10	튀르키예	4,109	헝가리	2,248	멕시코	3,401

\* 출처: 한국무역협회

7) 10대 무역수지 적자국

(통관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9		2020		2021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1	일본	-19,161	일본	-20,925	일본	-24,580
2	사우디아라비아	-18,144	사우디아라비아	-12,678	호주	-23,168
3	호주	-12,717	호주	-12,518	사우디아라비아	-20,946
4	카타르	-12,680	독일	-11,105	카타르	-11,191
5	독일	-11,251	카타르	-7,223	독일	-10,886
6	쿠웨이트	-9,815	쿠웨이트	-5,168	쿠웨이트	-7,905
7	러시아	-6,793	러시아	-3,730	러시아	-7,377
8	이라크	-6,050	이탈리아	-3,430	이라크	-4,345
9	아랍에미리트	-5,521	이라크	-3,333	이탈리아	-3,409
10	칠레	-2,746	프랑스	-2,898	네덜란드	-3,352

\* 출처: 한국무역협회

7 2021년 조약 발효 현황

1) 양자조약

연번	조약명	서명일/각서교환일	발효일
1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2019.8.22	2021.1.1
2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2의정서	2019.11.27	2021.1.20
3	한·우즈베키스탄 2021~2023 EDCF 기본약정	2021.1.28	2021.1.28
4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2019.11.25	2021.1.29
5	한·캄보디아 형사사법공조조약	2019.11.25	2021.2.24
6	한·베트남 원산지 누적조항 이행을 위한 교환각서	2020.12.11/ 2020.12.11	2021.3.1
7	한·뉴질랜드 농림수산업협력약정 종료		2021.3.2
8	한·마카오 도망범죄인 인도협정	2019.10.23	2021.3.11
9	한·마카오 형사사법공조협정	2019.10.23	2021.3.11
10	한·모잠비크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차관약정	2021.3.26	2021.3.26
11	한·짐바브웨 투자보호협정	2010.5.24	2021.4.7
12	한·인도네시아 2016~2020년 EDCF 기본약정 개정 교환각서	2021.4.12/ 2021.4.22	2021.4.22
13	한·스리랑카 2020~2022 EDCF 기본약정	2021.5.10	2021.5.10
14	한·조지아 항공협정	2021.2.4	2021.5.16
15	한·핀란드 항공협정	2019.6.10	2021.5.28
16	한·카자흐스탄 수형자이송조약	2019.4.22	2021.6.5
17	한·이탈리아 국방협력협정	2018.10.17	2021.6.9
18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연장 교환각서	2021.6.23/ 2021.7.1	2021.7.1
19	한·아시아산림협력기구 본부협정	2020.12.23	2021.7.2
20	한·러시아 국방협력협정	2021.3.29	2021.7.9
21	한·세계식량계획(WFP) 기본협력협정	2021.6.30	2021.7.21
22	한·리투아니아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협정	2021.6.7	2021.8.19
23	한·미국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2021.4.8	2021.9.1
24	한·키르기스스탄 범죄인인도조약	2018.11.14	2021.9.11
25	한·키르기스스탄 수형자이송조약	2018.11.14	2021.9.11
26	한·키르기스스탄 형사사법공조조약	2018.11.14	2021.9.11
27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	2021.7.13	2021.10.14
28	한·방글라데시 2021~2025년 EDCF 기본약정	2021.10.24	2021.10.24
29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2019.7.9	2021.11.1

연번	조약명	서명일/각서교환일	발효일
30	한·EU 항공협정	2020.6.25	2021.11.1
31	한·우즈베키스탄 항공협정 개정 각서교환	2021.7.26/ 2021.11.8	2021.11.8
32	한·유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협정	2021.9.27	2021.11.19
33	한·베트남 기후변화협력 기본협정	2021.5.31	2021.11.27
34	한·파키스탄 채무재조정협정	2021.12.6	2021.12.6
35	한·앙골라 치안 쇄신 2단계 사업 차관 약정	2021.12.13	2021.12.13
36	한·스페인 세관상호지원협정	2021.6.16	2021.12.24

2) 다자조약

연번	조약명	기탁일	우리나라 발효일
1	WTO 설립협정 쌀 관세화 관련 양허표 일부개정	2021.1.5 (통보일)	2021.1.5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2021.3.5	2021.6.3
3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2021.10.22	2021.6.25
4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부속서 2-다 개정 결정	2021.4.29 (서명일)	2021.7.1
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2021.12.23	2021.12.23



8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1)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총 체결 건수	적용 대상	국가명	
111개 협정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90일간 체류 가능)	외교관여권 소지자 (2개)	요르단, 우즈베키스탄(60일)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43개)	가봉, 라오스, 라이베리아, 모잠비크, 몰도바(180일 중 90일),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라루스, 벨리즈, 볼리비아, 사이프러스,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앙골라(30일), 에콰도르 (외교관: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에티오피아(미발효), 오만, 우크라이나, 이란(3개월),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적도기니(미발효), 조지아, 중국(30일), 카보베르데, 캄보디아(60일), 쿠웨이트(180일 중 90일),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30일),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30일), 파라과이, 파키스탄(3개월), 필리핀(무제한), 탄자니아(180일 중 90일)	
	외교관· 관용· 일반여권 소지자 (66개)	아주지역 (4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지역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외교관·관용 30일, 일반 90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구주지역 (32개국)	[생권국(26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외교관·관용 180일),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180일 중 90일]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
			[비생권국] 루마니아(180일 중 90일), 불가리아, 영국, 아일랜드, 튀르키예(180일 중 90일), 러시아(외교관·관용 90일, 일반 180일 중 9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60일), 카자흐스탄(외교관·관용 90일, 일반 180일 중 6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30일)
		아중동지역 (5개국)	모로코, 레소토(60일),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30일)

\* 에티오피아, 적도기니(외교관·관용): 서명되었으나 현재 미발효  
\* 뉴질랜드: 인터넷상 전자여행허가(ETA) 발급 사전 신청 필요  
\* 생권국은 생권협약 가입국 합산, 최종 출국일로부터 이전 180일 기간 중 90일간 체류 가능  
\* 이탈리아: 협정상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2003.6.15)  
\* 포르투갈: 협정상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180일 중 90일간 체류기간 부여(2018.7.10)

2) 기타 사증 관련 현황

적용 대상	대상 국가
복수사증(14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독일(주재, 투자 등), 러시아(단기 복수), 몽골, 미국(단기 종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상용),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 (상용·주재 등), 인도(상용, 고용, 관광), 일본, 중국, 캐나다(상용), 호주(상용)
취업관광사증(24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러시아, 중국

9 재외동포 현황

1) 재외동포 현황 총계

(2020년 12월 기준, 교역 규모 순 / 단위: 명)

연도별	지역별	2017	2019	2021	백분율(%)	전년 대비 증가율(%)
총계		7,539,821	7,493,587	7,325,143	100	-2.25
동북아시아	일본	818,626	824,977	818,865	11.18	-0.74
	중국	2,548,030	2,461,386	2,350,422	32.09	-4.51
	소계	3,366,656	3,286,363	3,169,287	43.27	-3.56
남아시아태평양		557,791	592,441	489,420	6.68	-17.39
북미	미국	2,492,252	2,546,982	2,633,777	35.96	3.41
	캐나다	240,942	241,750	237,364	3.24	-1.81
	소계	2,733,194	2,788,732	2,871,141	39.20	2.96
중남미		106,794	103,617	90,289	1.23	-12.86
유럽		739,826	687,059	677,156	9.24	-1.44
아프리카		10,853	10,877	9,471	0.13	-12.93
중동		24,707	24,498	18,379	0.25	-24.98

2)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2020년 12월 기준 / 단위: 명)

거주자격별	지역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 계
		영주권자	일반 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		1,018,045	1,322,133	171,343	2,511,521	4,813,622	7,325,143
동북아시아	일본	342,839	78,953	13,082	434,874	383,991	818,865
	중국	8,979	213,822	34,074	256,875	2,093,547	2,350,422
	소계	351,818	292,775	47,156	691,749	2,477,538	3,169,287
남아시아태평양		94,355	285,457	38,020	417,832	71,588	489,420
북미	미국	434,458	626,005	43,459	1,103,922	1,529,855	2,633,777
	캐나다	60,269	19,114	17,357	96,740	140,624	237,364
	소계	494,727	645,119	60,816	1,200,662	1,670,479	2,871,141
중남미		41,200	8,910	320	50,430	39,859	90,289
유럽		34,344	65,405	23,497	123,246	553,910	677,156
아프리카		1,470	7,356	500	9,326	145	9,471
중동		131	17,111	1,034	18,276	103	18,379

10 운전면허 상호인정 현황

1)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총 136개국)

(2021년 12월 기준)

지역	국가명
아시아 (31개국)	네팔, 뉴질랜드,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호주, 우즈베키스탄*, 인도(우타라칸드주, 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라주),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쿡제도, 키르기즈공화국*,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 (19개국)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이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애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유럽 (35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아르빌),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8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지부티, 짐바브웨,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

\* 양자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 국가

2) 양자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 국가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연번	국가	체결일자	성격	비고
1	벨기에	1990.1.8	협정	
2-1	캐나다	온타리오주	1998.11.17	약정
2-2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000.9.1	"
2-3		퀘벡주	2000.11.23	"
2-4		앨버타주	2000.12.14	"
2-5		매니토바주	2003.8.6	"
2-6		서스캐처원주	2004.12.29	"
2-7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2007.11.14	"
2-8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2007.11.15	"
2-9		뉴브런즈윅주	2008.2.12	"
2-10		노바스코샤주	2011.3.10	"
3	폴란드	1998.11.25	협정	
4	아일랜드	1999.10.26	약정	
5	스페인	2000.1.14	협정	
6	이탈리아	2002.3.5	협정	
7	칠레	2007.7.2	협정	
8	슬로바키아	2007.11.23	협정	
9-1	미국	메릴랜드주	2010.12.16	약정
9-2		버지니아주	2011.3.14	"
9-3		워싱턴주	2011.5.24	"
9-4		매사추세츠주	2011.8.8	"
9-5		텍사스주	2011.9.9	"
9-6		플로리다주	2011.10.22	"
9-7		오리건주	2011.12.2	"
9-8		미시간주	2012.2.15	"
9-9		아이다호주	2012.4.6	"
9-10		앨라배마주	2012.8.2 서명 2017.7.27 개정	"
9-11		웨스트버지니아주	2012.9.20	"
9-12		아이오와주	2012.10.30	"
9-13		콜로라도주	2013.4.17	"
9-14		조지아주	2013.7.1	"
9-15		아칸소주	2014.7.11	"
9-16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014.7.22	"
9-17		테네시주	2016.4.14	"
9-18		하와이주	2016.8.24	"

연번	국가	체결일자	성격	비고
9-19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2016.10.25	"
9-20		위스콘신주	2017.2.16	"
9-21		오克拉호마주	2017.3.16	"
9-22		애리조나주	2017.6.27	"
9-23		루이지애나주	2019.1.28	"
10	라트비아	2011.5.28	협정	
11	불가리아	2011.9.27	협정	
12	에콰도르	2012.2.15	약정	
13	페루	2012.12.17	협정	
14	피지	2013.5.23	협정	미발효이지만 상호주의로 인정
15	아제르바이잔	2013.10.23	협정	
16	키르기스스탄	2013.11.19	협정	
17	리투아니아	2014.10.14	협정	
18	헝가리	2014.11.28	협정	
19	이스라엘	2014.12.22	협정	
20	과테말라	2015.5.14	협정	
21	우즈베키스탄	2015.5.28	협정	
22	온두라스	2015.7.20	협정	
23	이란	2016.4.27	약정	
24	니카라과	2016.11.4	협정	
25	모잠비크	2018.4.30	협정	
26	콜롬비아	2018.8.1	협정	
27	아랍에미리트	2019.11.12	약정	

11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1) 여권 발급 현황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내	외교관	1,819	1,756	1,771	1,840	2,071	1,862	1,784
	관용	13,754	13,854	14,462	12,208	14,051	13,243	6,829
	거주	2,621	3,206	3,666	3,739	-	-	-
	계	3,034,117	3,814,526	4,533,045	5,090,925	4,785,289	4,528,220	944,157
	일반**	1,493,509	1,845,715	2,196,851	2,477,236	2,410,733	2,299,350	498,002
국외	남	1,540,608	1,968,811	2,336,194	2,613,689	2,374,556	2,228,870	446,155
	여	98,668	106,363	117,673	127,629	145,856	174,469	124,393
	재외공관	131,100						
계		3,150,979	3,939,705	4,670,617	5,236,341	4,947,267	4,717,794	1,077,163

\* 2017년 12월 21일 거주여권 폐지

\*\* 일반여권 발급 건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 수치임

2) 해외여행자 현황

연도	해외여행자 수	연도	해외여행자 수
1994	3,778,140	2008	12,315,221
1995	4,508,076	2009	9,804,725
1996	5,351,974	2010	12,807,359
1997	5,275,183	2011	13,019,134
1998	3,393,198	2012	14,065,176
1999	4,659,935	2013	15,155,660
2000	5,759,044	2014	16,372,830
2001	6,379,255	2015	19,580,398
2002	7,441,059	2016	22,659,640
2003	7,386,088	2017	26,496,447
2004	9,139,314	2018	28,695,983
2005	10,372,409	2019	28,714,247
2006	11,833,511	2020	4,276,006
2007	13,620,503	2021	1,222,541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12 2021년 주요 국제 관계 일지

1) 한국 관계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1.5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부속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발효
		1.6	제3차 핵군축·NPT 관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화상)
1.7	제1차 한·인도 고위급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회 (화상)		
1.8	한·스페인 외교장관 통화		
1.9	한·일 외교장관 통화		
1.10~13	외교부 제1차관 이란·카타르 방문		
1.14	한·미 LNG 회의 (화상)		
1.14	한·유엔 고위급 군축비확산협의회 (화상)		
1.15	한·일 국방급 협의 (화상)		
		1.18~19	제113차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집행이사회 (마드리드)
		1.18~20	OECD 물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Water Governance Initiative) 회의 (화상)
		1.18~21	제11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화상)
1.19	한·노르웨이 국제기구국장 정책협의회 (화상)		
1.20	“1994년 5월 20일 하노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제2의정서” 발효	1.20	제10차 미타(MIKTA) 고위관리회의의(SOM) (화상)
		1.20~27	제21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2차회의 (파리)
1.21	제3차 한·유엔 정부평화구축국(DPPA) 정책 대화 (화상)	1.21	Asia-Pacific Water Forum (웹비나)
		1.21~22	2021년 제1차 G20 세르파 회의 (화상)
1.22	한·코스타리카 정상 통화		
1.25	한·아프가니스탄 외교장관 통화	1.25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서울)
		1.25~26	2021 기후적응 정상회의 (Climate Adaptation Summit) (화상)
		1.25~29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 어젠다 주간 (화상)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26	한·중 정상 통화	1.26	유엔 평화구축기금(PBF) 재원 보충을 위한 고위급회의 (화상)
1.27	한·미 외교장관 통화		
1.27	한·프랑스 국제기구국장 정책협의회 (화상)		
1.28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서명 및 발효		
1.28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화상)		
1.28	한·파키스탄 기후변화·과학 국장급 협의회 (화상)		
1.29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발효		
		2.1~4	2021년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UNFPA)/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제1차 정례 집행이사회 (화상)
		2.1~4	영국 싱크탱크 윌턴파크(Wilton Park) 주최 회토류 회의 (화상)
		2.1~5	제14차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 다양성 증진 및 보호를 위한 2005년 협약 정부간위원회 (화상)
2.2	한·이란 외교차관 통화		
2.2	제1차 한·케냐 고위급 글로벌이슈 정책협의회 (화상)		
		2.3	제18차 므타 외교장관회의 (화상)
		2.3	제1차 G7 세르파회의 (화상)
2.4	한·미 정상 통화	2.4	제7차 Asia-Pacific Water Forum (웹비나)
2.4	한·멕시코 국제기구국장 정책협의회 (화상)		
2.4	제3차 한·EU 에너지·환경·기후변화 작업반회의 (화상)		
2.5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8차 회의 (화상)	2.5.	2021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서울)
		2.8~11.	제47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안보위원회 (화상)
2.9	제17차 한·EU 공동위 (화상)		
		2.9~12	2021년 UNICEF 제1차 정례 집행이사회 (화상)
2.10~16	국회의장 증동(UAE, 바레인) 순방		
2.12	한·러 외교장관 통화		
2.12	한·미 외교장관 통화		
2.15	한·UAE 외교장관 통화		
2.16	한·중 외교장관 통화		
2.17	외교장관, 캐나다 글로벌부 외교장관 통화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2.17~18	제5차 므타 영리더스 캠프 개최 (화상)
2.18	외교부 제1차관, 미국 이란특사 통화		
		2.22~24	2021년 세계식량계획(WFP) 제1차 정례 집행이사회 (화상)
		2.22~25	제네바 군축회의(CD) 고위급 회기 (화상)
2.23	한·영국 외교장관 통화		
2.23	외교부 제2차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 (화상)		
2.24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발효	2.24	외교부 제2차관, 다자주의 연대 회의 참석 (화상)
2.24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2.24	제3차 한·아프리카연합(AU) 정책협의회 개최 (화상)		
		2.24~25	2021 제1차 G20 개발실무그룹(DWG) 회의 (화상)
		2.24~25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 에너지 대화 상설그룹 회의(SGD) (화상)
		2.24~26	제3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에너지위원회 (화상)
2.25	외교장관, 아세안 사무총장과 통화 (서울)		
3.1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발효	3.1	2021년 예멘 인도적 위기 고위급 공약회의 (화상)
3.1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통화		
		3.1~5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일반사무정책이사회 (화상)
3.2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종료		
3.4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8차 국장급회담 (화상)		
3.5	한·튀르키예 외교장관 통화		
3.5	외교부 제1차관-주한 아세안대사단 간담회 (서울)		
3.5~7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제9차 회의 (워싱턴DC)		
3.8	한·EU 외교장관 통화	3.8	제3차 한·일·중 외교연수원장 회의 (화상)
3.8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통화		
		3.8~12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워킹그룹(OEWG, 2019-21) 3차회의 (대면·비대면 혼합)
3.9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	3.9	제2차 불어권국제기구 아태지역 조정관 회의 (화상)
		3.9	제15차 아세안+3 외교연수원장 회의 (화상)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3.9~11	제1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 (화상)
		3.9~12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 (화상)
3.10	외교부 제1차관, 주한 중남미 대사단 (GRULAC)과 면담 (서울)	3.10	2021년 P4G 정상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 (서울)
		3.10~11	제19차 기후행동 증진 비공식회의 (화상)
3.1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 형사사법공조협정” 발효		
3.1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간 도망범죄인 인도 협정” 발효		
3.11	외교장관, 유엔 사무총장 통화		
3.12	한·호주 외교장관 통화		
		3.15~16	OECD 글로벌전략그룹(GSG) 회의 (화상)
		3.15~18	2021년 제1차 북극이사회 고위관리(SAO) 총회 (화상)
3.15~19	제2차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고위급 검토회의 및 제11차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실무급 검토회의 (화상)		
3.16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장관 접견 (서울)		
3.16	제9차 한·이란 인도적 교역 실무협약 회의 (화상)		
3.17	한·과테말라 외교차관 면담 (서울)	3.17	제7차 베를린 에너지전환 대화 (화상)
3.17	한·미 외교장관회담 (서울)		
3.17~18	미국 국무장관 방한		
3.17~18	2021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 개최 (서울)		
3.17~18	한·오만 투자보장협정 제1차 개정 회의 (화상)		
3.18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서울)		
3.18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식 (서울)		
3.18	제9차 한·영국 개발협력정책협의회 (화상)		
3.19	한·과테말라 외교장관 면담 (서울)	3.19	외교부 제1차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역내 7개국 외교차관 간 제15차 협의 (화상)
3.19	한·코스타리카 외교장관 면담 (서울)		
3.19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우크라이나 기본시설부 제1차관 및 재무부 차관 면담 (서울)		
3.19	외교장관, 미 대통령 기후특사와 통화		
3.19	국회의장, 미국 연방 하원의장 회담 (화상)		
		3.22	유네스코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 (파리)
3.23	비세그라드그룹(V4) 공관장 회의 (화상)		
		3.23	제5차 기후행동 각료회의(MoCA) (화상)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3.23~24	개정 핵물질방호협약(A/CPNM) 이해 증진 아시아 핵안보 국제워크숍 개최 (대면·비대면 혼합)
3.23~25	러시아 외교장관 방한		
3.24~26	바이든 신 행정부 대한민국도 정책 관련 4개 기관 공동 세미나 (웨비나)		
		3.25	G7 세르파회의 (화상)
3.25	한·러 외교장관회담(서울)		
3.26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서명 및 발효		
3.26	신북방지역 공관장 회의 (화상)		
3.26	한·프랑스 외교장관 통화		
3.26	외교장관, 미 대통령 기후특사와 통화		
3.29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통화	3.29	외교장관, 평화유지구상(A4P) 출범 3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 (화상)
3.30	우리 회소금속·배터리 업계 간담회 개최 (서울)	3.30	제2차 G7 세르파회의 (화상)
		3.30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NEACHS) 트랙1 회의 (화상)
3.30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출범 (화상)		
		3.30	제5차 시리아 및 주변국 지원 관련 공여국 회의 (화상)
3.31	국무총리-주한 아세안대사단 간담회 (서울)		
3.31	제2차 한·글로벌 고위급 심포지엄 (대면·비대면 혼합)		
3.31~4.8	국회의장 중앙아 3개국 순방		
4.1	한·일 국장급 협의 (도쿄)		
4.1	한·브루나이 외교장관 통화		
4.1	주한아프리카대사단 초청 간담회 (서울)		
4.2~3	외교장관 중국 방문		
4.3	한·중 외교장관회담 (베이징)		
4.5	한·태국 외교장관 통화		
4.5	한·UAE 투자보장협정 제3차 개정 회담 (화상)		
4.7	제1차 한·아프가니스탄 정책협의회 (서울)		
4.7	“대한민국 정부와 짐바브웨공화국 정부 간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발효		
4.7	한·스웨덴 외교장관 통화		
4.7	한·UAE 투자보장협정 제3차 개정 회담 (화상)		
4.7~9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방한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4.7~21	제21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화상)
4.8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 (서울)		
4.8	유럽지역 공관장 회의 (화상)		
4.9	한·독일 외교장관 통화	4.9	2021 P4G 정상회의 참여 대상국 공관장 회의 (화상)
4.9	국립외교원장, 아프가니스탄 정부차관 면담 (서울)		
4.11~12	국무총리 이란 방문 (테헤란)		
4.12	한·이란 외교차관 면담 (테헤란)		
4.13	한·싱가포르 외교장관 통화		
4.14	한·러 연금협력협정 제7차 회담 (화상)		
4.16	대중미 협력 확대를 위한 공관장 회의 (화상)		
4.16	외교부 제2차관, 프랑스 경제부 디지털담당 국무장관 면담 (서울)		
4.16	백신 수급 지원을 위한 공관장회의 (화상)		
4.17~18	미 대통령 기후특사 방한		
4.18~26	외교부 제1차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방문		
4.19	외교부 제1차관, 콜롬비아 외교차관 면담 (보고타)		
4.21	제4차 한·코스타리카 고위정책협의회 (산호세)	4.21	제27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화상)
4.22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발효	4.22	미국 주최 기후정상회의 (화상)
4.22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대화협의체 (산호세)		
4.23	외교장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통화		
4.23	외교부 제1차관, 멕시코 외교차관 회담 (멕시코시티)		
		4.26~27	2021년 제2차 G20 에너지·기후작업반 (2021 G20 2nd Energy Transition and Climate Sustainability Working Group Meeting) (화상)
		4.26~29	제77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총회 (화상)
4.27	한·덴마크 외교장관 통화	4.27	2021 P4G 정상회의 제6차 준비위원회 (서울)
4.27	우리 신재생에너지 업계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서울)		
4.28	한·베트남 외교장관 통화	4.28	제3차 ARF ICT안보 회기간회의(ISM) (화상)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4.29	제4차 한·핀란드 경제공동위 (화상)		
4.30	한·태국 외교장관 통화		
5.3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런던)		
		5.3~7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제2차 회의 (화상)
		5.4~5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런던)
		5.4~5	제40차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제3실무작업반(IDS) 속개 회의 (화상)
5.4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브루나이 외교장관회담(런던)		
5.5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런던)		
5.5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런던)		
5.5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 약속 양자회담 (런던)		
5.5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독일 외교장관회담 (런던)		
5.5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EU 외교장관회담 (런던)		
5.6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영국 외교장관 전략대화 (런던)		
5.10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2020~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서명 및 발효	5.10	P4G 정상회의 포용적 녹색 파트너십 포럼 개최 (서울)
5.10	제202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개최 (평양)		
5.10~13	이스라엘 외교 및 경제산업부장관 방한		
5.11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통화		
		5.11~12	글로벌펀드 제45차 이사회 (화상)
		5.11~12	2021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 에너지 대화 상설그룹 회의 (화상)
5.12	한·필리핀 외교장관 통화		
5.12	외교부 제1차관, 몽골 외교차관 면담 (서울)		
5.12	제15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 (화상)		
5.13	한·미 아세안 정책대화 (화상)		
5.13~14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3차 회의 (화상)		
5.14	한·이탈리아 외교장관 통화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5.16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 항공업무협정" 발효		
5.19~23	대통령, 미국 방문 (워싱턴DC, 애틀랜타)		
		5.20	제12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대면·비대면 혼합)
		5.20	OECD 동남아시아지역프로그램(SEARP) 포럼 (화상)
5.21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DC)	5.21	국무총리, G20 글로벌 보건 정상회의 참석 (화상)
		5.24	제21차 IRENA 이사회 정책의제 세션 (화상)
		5.24~25	제2차 G20 개발실무그룹(DWG) 회의 (화상)
		5.24~29	제2차 P4G 정상회의의 녹색미래주간 (화상)
5.25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 통화		
5.25	한·아세안 의장국 고위관리회의 대표 회의 (화상)		
		5.25~26	1970년 문화재불법거래방지협약 제6차 총회 (파리)
		5.25~26	제21차 IRENA 이사회 (화상)
		5.25~27	제2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화상)
5.26	한·카자흐스탄 외교장관 통화		
		5.26~27	2021년 G20 제3차 에너지·기후 작업반 회의 (화상)
		5.27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NEACHS) 3차 회의 (화상)
5.27~6.1	외교부 제2차관, 오스트리아·헝가리 방문		
5.28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협정" 발효		
5.28	한·태국 정상 통화		
5.28	'2021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학술 세미나 (대면·비대면 혼합)		
		5.29~6.3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 (화상)
5.30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계기, 한·덴마크 정상회담 (화상)		
		5.30~31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화상)
		5.31~6.1	2021년 제1차 OECD 각료이사회(MCM) (화상)
		5.31~6.17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기구회의 (화상)
		6.1~4	2021년 UNICEF 연례 집행이사회 (화상)
		6.2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 정상회의 (화상)
6.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발효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6.3	한·영국 정상 통화		
6.3	외교부 제1차관, 주한아랍대사단 간담회 주재 (서울)		
6.3	제6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화상)		
6.3~6	미 연방 상원의원단 방한		
6.4~12	중남미 인프라협력 사절단 파견(멕시코, 온두라스, 파나마, 페루)		
6.5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발효		
6.7	한·카자흐스탄 물산업 협력간담회 및 사업상담회 (대면·비대면 혼합)		
		6.7~11	2021년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연구기금 (UNFPA)/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연례 집행이사회 (화상)
6.8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회담 (서울)		
6.8~10	외교부 제1차관, 미국 방문 (워싱턴DC)		
6.9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		
6.9	한·중 외교장관 통화		
6.9	한·미 외교차관회담 (워싱턴DC)		
		6.11~13	2021년 G7 정상회의 (콘월)
6.12	G7 정상회의 계기, 한·EU 정상회담 (콘월)		
6.12	G7 정상회의 계기, 한·독일 정상회담 (콘월)		
6.12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런던)		
6.12	G7 정상회의 계기, 한·영국 외교장관회담 (콘월)		
6.12	G7 정상회의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 (콘월)		
6.13	G7 정상회의 계기, 한·영국 정상회담 (콘월)		
6.13	G7 정상회의 계기, 한·프랑스 약식 정상회담 (콘월)		
6.13~17	대통령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 방문		
6.14	한·오스트리아 정상회담 (빈)		
		6.14~18	유엔 해양·해양법 비공식 협의(ICP) 참석 (화상)
		6.14~24	제43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ATCM) (파리)
		6.14~25	제31차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총회 (화상)
		6.15	국무총리, 2021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정상회의의 기조연설 (화상)
		6.15	제11차 미타 고위관리회의 (화상)
		6.15	2021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 담화(Seoul Debates) (대면·비대면 혼합)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6.15~16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 준비 총회 (화상)
6.16	한·스페인 정상회담 (마드리드)		
6.16	제6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 (서울)		
		6.16~17	제52차 OECD 개발원조 고위급회의(Tidewater) (화상)
		6.16~18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제38차 집행이사회 (화상)
6.17	한·EU 전략대화 (웨비나)	6.17	대통령,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 (화상)
		6.17	유엔 가입 30주년 기념 국제포럼 개최 (대면·비대면 혼합)
		6.17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제13차 운영소위원회 (화상)
		6.17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 공여국회의 (화상)
6.21	한·일 국장 협의 (서울)		
6.21~25	외교장관 동남아시아 3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순방	6.21~25	2021년 세계식량계획(WFP) 연례 집행이사회 (화상)
		6.21~25	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SPLOS) 참석 (뉴욕)
		6.21~72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화상)
		6.21~713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6.22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 방한	6.22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 (화상)
		6.22	외교장관, ASEM 출범 25주년 기념 고위정책대화 참석 (하노이)
6.22~23	제3차 한·OSCE 사이버안보 콘퍼런스 (화상)		
6.23	제1차 한·UAE 영상공동위 (아부다비)		
6.23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하노이)		
		6.23~25	제61차 APEC 에너지실무그룹(EWG) 회의 (화상)
6.24	한·싱가포르 외교장관회담 (싱가포르)	6.24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 (화상)
		6.24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 2022~2026년 임기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재선 (뉴욕)
6.24~25	한·조지아 투자보장협정 제정 제2차 실무협상 (화상)		
6.25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발효		
6.25	제4차 한·SICA 정상회의 (화상)		
6.25	한·인도네시아 외교장관회담 (자카르타)	6.25	외교부 제2차관,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여 (제주)
6.28	제8차 한·수단 정책협의회 개최 (수단 카르툼)	6.28	2021년 유엔인도지원조정실(OCHA) 공여국지원그룹(ODSG) 고위급 회의 (화상)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6.28~30	유네스코 국제수문학사업(IHP: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제24차 정부간 이사회 (파리)
		6.28~7.16	제54차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본회의 (대면·비대면 혼합)
6.29	한·수단 비즈니스 협력 포럼 (수단 카르툼)	6.2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 (화상)
		6.29	제168차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화상)
6.29~30	한·유엔 청년과 군축·비확산 포럼 (대면·비대면 혼합)	6.29~30	G20 외교개발 장관회의 (마테라, 브린디시)
6.29~30	한·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 제정 제5차 실무협상 (화상)		
6.29~7.3	중남미협력 대표단 대스페인 파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6.30	제4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 회의 개최 (마드리드)		
6.30	한·세계식량계획(WFP) 기본 협력협정 서명 (이탈리아 브린디시)		
6.30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사무국장 회의 (화상)		
7.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다의 부록 2-다-2 및 2-다-3의 개정에 관한 한·유럽연합 무역위원회 결정 제3호" 발효		
7.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		
7.1	한·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통화		
7.2	"대한민국 정부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간의 본부협정" 발효		
7.5	국립외교원장, 주한호주대사 면담 (서울)	7.5	제4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화상)
7.5~7	EU 수석부집행위원장 방한		
7.5~11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아프리카 3개국(민주콩고, 콩고, 가나) 방문		
7.5~12	정부 합동 농업협력사업단 중남미 3개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견		
7.6	한·아세안 다이얼로그 (화상)		
7.6~11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하원의원 대표단 방한		
7.7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화상)	7.7	제2차 ASEM 고위관리회의 (화상)
7.7	외교장관, AU 집행위원장 통화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7.9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	7.9	제2차 ASEM 고위관리회의 (화상)
7.9	한·체코 외교장관 통화		
7.9	한·중미 북부 농업 협력포럼 (과테말라)		
7.9	제2차 한·콜롬비아 문화공동위원회 (화상)		
7.9	제5차 한·칠레 국장급 남극정책대화 (화상)		
7.9~10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과테말라 방문		
		7.12~13	제2차 G20 세르파회의 (화상)
		7.12~15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공업개발이사회 (IDB) (화상)
		7.14~15	2021년 유엔 PKO 파견 국군부대 성과평가단 회의 (화상)
7.15	대통령,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		
7.16	한·이스라엘 정상 통화	7.16	2021 APEC 비격식 정상회의 (화상)
		7.16~31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화상)
7.20	한·일 외교차관회담 (도쿄)		
7.21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세계식량계획 간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	7.21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도쿄)
7.21	한·칠레 외교장관회담 (서울)		
7.21	제1차 한·유엔평화활동국(DPO) 고위급 정책 협의회 (뉴욕)		
7.21	제4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워싱턴DC)		
7.21	제7차 한·호주 경제공동위 (화상)		
7.21~23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7.22	한·베트남 총리 간 통화		
7.22	한·싱가포르 아세안 고위관리회의 (화상)		
7.22	제1차 한·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고위급 정책협의회 (뉴욕)		
7.22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국장급 협의 (워싱턴DC)		
7.23	제9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서울)		
		7.25~26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준비 각료급 회의(July Ministerial) (런던)
		7.26~27	제2차 ASEM 고위관리회의 (화상)
7.27	한·몽골 총리 면담 (서울)		
		7.27~28	제6차 미타 영리더스 캠프 개최 (화상)
		7.27~28	제3차 G20 개발실무그룹(DWG) 회의 (화상)
7.28	주페루대사, 페루 대통령 취임식 참석 (리마)		
		7.28~29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 재정공약 회의 (화상)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7.28~29	2021년도 IFANS 국제문제회의 (웨비나)
		7.29~30	제10차 한·미·일(KNDA-CEIP-JIIA) 3자 회의 (웨비나)
7.30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회담 (서울)		
8.3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화상)	8.3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화상)
8.3~7	국무조정실장 콜롬비아 방문		
8.4	제11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화상)	8.4	EAS 외교장관회의 (화상)
8.4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통화	8.4	APEC 디지털 무역 소비자보호 워크숍 (화상)
8.4~6	외교부 제1차관, 제13대 이란대통령 취임식 참석 (테헤란)		
		8.5	메콩우호국 장관급 회의 (화상)
8.6	외교장관, 미국 국무부 장관 통화	8.6	ARF 외교장관회의 (화상)
8.10	제4차 한·미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 (워싱턴DC)		
8.10	외교부 제1차관, 미국 국무부 부장관 통화		
		8.12	2021 우주외교포럼 (대면·비대면 혼합)
8.13~21	국회의장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순방		
8.15~19	외교부 제1차관 북서아프리카 3개국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방문		
8.17	한·카자흐스탄 정상 회담 (서울)		
8.17	한·카타르 외교장관 통화		
8.18	한·브루나이 외교장관 통화	8.18	외교부 제2차관,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 아프간 상황 관련 20개국 외교차관 전화 회의 참여
8.18	한·튀르키예 외교장관 통화		
8.19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	8.19	제12차 미타 고위관리회의 (화상)
8.20	한·파키스탄 외교장관 통화	8.20	외교부 제2차관,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 아프간 상황 관련 외교차관 회의 (화상)
8.21~26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 방한		
8.23	제19차 한·러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		
8.23~26	한·네덜란드 주한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세미나 (화상)		
		8.23~27	2021 스톡홀름 국제물주간 (화상)
8.24	제1차 한·인도네시아 외교·국방 2+2 고위급 회의 (화상)		
8.24~26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방한	8.24~26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 (화상)
8.25	한·콜롬비아 정상회담 (서울)		
8.26~29	외교장관 태국 및 라오스 공식 방문		
8.27	한·태국 외교장관회담 (방콕)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8.28	한·라오스 외교장관회담 (비엔티안)		
8.29~9.1	브라질 통신장관 방한		
		8.30	2021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 (화상)
8.30	차관보 주재 비세그라드그룹(V4) 공관장 회의 (화상)		
		8.30~9.2	2021년 유엔개발계획(UNDP)/유엔인구기금(UNFPA)/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제2차 정례 집행이사회 (화상)
		8.31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NEACHS) 4차 회의 개최 (화상)
		8.31~9.3	제3차 APEC 고위관리회의 (화상)
9.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발효		
9.2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화상)		
		9.2~4	제6차 동방경제포럼 (대면·비대면 혼합)
9.6~8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방한		
		9.7~10	2021년 UNICEF 제2차 정례 집행이사회 (화상)
9.8	한·캄보디아 외교장관회담 (서울)	9.8	아프간 관련 주요국 장관급 회의 (화상)
9.8	제1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대면·비대면 혼합)		
		9.8~9	APEC 전자상거래 협상역량강화 워크숍 (화상)
		9.8~9	2021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 에너지 대화 상설그룹 회의(SDG) (화상)
9.9	제30차 한·중 학술회의 (웨비나)	9.9	예측적 조치에 관한 고위급 인도적 지원 회의 (화상)
9.10	한·몽골 정상회담 (화상)		
9.11	“대한민국과 키르기스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발효		
9.11	“대한민국과 키르기스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발효		
9.11	“대한민국과 키르기스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발효		
9.13	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서울)		
9.13	한·호주 2+2 회의 계기, 외교장관 간 사이버·핵심기술 협력 양해 각서 서명 (서울)		
		9.13~14	제4차 G20 개발실무그룹(DWG) 회의 (화상)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9.13~15	외교부 제2차관 카타르, 오만 방문		
		9.13~17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사업 국제조정위원회(MAB-ICC) (대면·비대면 혼합)
		9.13~10.11	제48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
9.14~15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공식 방한	9.14~15	2021년 UN Women 제2차 집행이사회 (화상)
9.15	한·중 외교장관회담 (서울)	9.15	제11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 (화상)
9.15	한·영국 외교장관 통화		
9.15	외교부 제1차관, 미국 국무부 부장관 통화		
9.15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서울)		
		9.15~16	제3차 G20 셰르파회의 (피렌체)
9.16	한·일 국장 협의 (도쿄)		
9.16	외교부 제1차관, 주한캐나다대사 이임 접견 (서울)		
9.16	제1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대화 (화상)		
9.16	제36차 한·일 학술회의 (웨비나)		
		9.16~17	ASEM 제3차 고위관리회의 (화상)
9.17	제6차 한·V4 정무차관보호회의 (부다페스트)	9.17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경제국포럼(MEF) (화상)
9.20	대통령, 유엔사무총장 면담 (뉴욕)	9.20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 회의) (뉴욕)
9.20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영국 정상회담 (뉴욕)	9.20	2021년 OCHA 공여국지원그룹(ODSG) 고위급 회의 (화상)
9.20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슬로베니아 정상 회담 (뉴욕)		
		9.20~21	2021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아시아회의의 참석 (화상)
		9.20~24	제65차 IAEA 총회 (빈)
9.21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베트남 정상회담 (뉴욕)	9.21	대통령,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뉴욕)
9.21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인도 외교장관회담 (뉴욕)		
9.22	외교장관, 미 외교협회(CFR) 초청 대담회 참석 (뉴욕)	9.22	대통령,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 연설 (화상)
9.22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뉴욕)	9.22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뉴욕)
		9.22	제10차 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 (화상)
		9.22	외교부 제2차관,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신기술 부대행사 개최사 (화상)
9.23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뉴욕)	9.23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안보리 개혁 관련 UIC 장관급 회의 (화상)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9.23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이집트 외교장관회담 (뉴욕)		
9.23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회담 (뉴욕)		
9.23~10.1	외교부 아프리카 협력대사, 에티오피아 및 말라위 방문		
9.24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 (뉴욕)		
		9.27	외교부 제2차관,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 기금 부대행사 개최사 (화상)
9.28	제16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화상)		
9.28~29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제정 제3차 협상회의 (화상)		
9.29	제11차 한·파키스탄 정책협의회 (이슬라마바드)		
9.29~10.1	수단 투자장관, 산업장관 전략적 주요인사 초청 사업 계기 방한		
9.30	제8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서울)		
9.30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		
9.30	제8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워싱턴DC)		
		9.30~10.1	ASEM 제3차 고위관리회의 (화상)
		9.30~10.2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사전총회(Pre-COP26) (밀라노)
		10.3~7	제15차 UNCTAD 총회 (화상)
		10.4~8	제72차 UNHCR 집행이사회 (대면·비대면 혼합)
10.5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 약식 회담 (파리)	10.5	OECD DAC 60주년 기념행사 (화상)
10.5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회담 (파리)		
10.5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이탈리아 외교장관회담 (파리)		
		10.5~6	2021년 제2차 OECD 각료이사회(MCM) (대면·비대면 혼합)
10.6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룩셈부르크 외교장관회담 (파리)		
10.6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프랑스 외교장관 회담 (파리)		
10.6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헝가리 외교장관 회담 (파리)		
		10.6~7	2021 동북아평화협력포럼 (대면·비대면 혼합)
		10.6~20	제212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파리)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0.7	제12차 한·브라질 고위정책협의회 (서울)		
10.7	외교부 제1차관, 미 이란 특사 통화		
10.7	제3차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화상)		
10.8~11	외교장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10.10~16	디지털협력 사절단 파견 (과테말라, 페루)		
		10.11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 회의 (누르술탄)
		10.11	제18차 고문방지협약 당사국회의 (제네바)
10.13	외교부 제1차관,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 통화		
		10.13~14	백악관 NSC 주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 회의 (화상)
		10.13~15	제4차 G20 셰르파회의 (화상)
10.14	“대한민국 정부와 피지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발효		
10.14	제6차 한·나이지리아 공동위 (서울)		
10.14	제2차 한·아일랜드 글로벌 이슈 정책협의회 (더블린)		
		10.14~17	2021 북극서클총회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10.15	한·일 정상 통화		
10.15	제4차 한·키르기스스탄 경제공동위 (비슈케크)		
10.15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IAEA 사무총장 면담 (빈)		
10.17~23	외교부 제1차관 영국, 벨기에, EU, 프랑스 방문		
10.19	제7차 한·EU 고위정치대화 (브뤼셀)		
10.19	제4차 한·타지키스탄 경제기술과학협력 공동위원회 (두산베)		
		10.20	동북아 평화협력 정부간 협의회 (서울)
		10.20~22	제62차 APEC 에너지실무그룹(EWG) 회의 (화상)
		10.21	제1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 (화상)
		10.21	유엔 가입 30주년 계기, 유엔의 날 문화공연 개최 (뉴욕)
		10.21	제48차 유엔기념공원(UNMCK) 관리위원회 (부산)
		10.21	제5차 G20 셰르파회의 (화상)
10.22	한·튀르키예 외교장관회담 (서울)	10.22	유엔의 날(10.24) 및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기념 학술포럼(다자주의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개최 (화상)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0.22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부산시 주최 제76회 유엔의 날 기념식 참석 (부산)
10.22	제3차 한·앙골라 국장급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		
10.22	국무총리, 튀르키예 외교장관 접견 (서울)		
10.24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21~2025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서명 및 발효		
		10.25~11.4	제76차 유엔총회 제6위원회 회의 (ILC 작업보고서 보고 등) (뉴욕)
10.26	한·과테말라 외교차관회담 (서울)		
10.26	한·엘살바도르 외교차관회담 (서울)		
10.26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화상)		
10.26	외교부 제2차관, 주한오만대사 접견 (서울)		
10.26	한·미 고위급 군축비확산 협의회 (워싱턴DC)		
		10.26~27	IRENA 22차 이사회 (아부다비)
10.26~28	외교장관 러시아 방문		
10.27	한·러 외교장관회담 (모스크바)	10.27	제24차 아세안+3(APT) 정상회의 (화상)
10.27	한·통상산업무차관 면담 (서울)	10.27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화상)
10.27	한·온두라스 외교차관 면담 (서울)		
10.27	한·코스타리카 외교차관 면담 (서울)		
10.27	한·도미니카공화국 외교차관 면담 (서울)		
10.27	한·벨리즈 외교차관 면담 (서울)		
10.27	한·파나마 통상산업부차관 면담		
10.27	제1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 (웹비나)	10.27~29	제6차 G20 세르파회의 (로마)
10.28	한·중미 특별 라운드테이블 (서울)	10.28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제10차 총회 및 제14차 이사회 (서울)
10.28	국무총리, 중미 7개국 차관 접견 (서울)		
10.29	대통령, 교황 및 교황청 국무원장 면담 (교황청)		
10.29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로마)		
10.30	G20 정상회의 계기, 한·EU 정상회담 (로마)		
10.30	G20 정상회의 계기, 한·프랑스 정상회담 (로마)		
10.30	G20 정상회의 계기, 한·호주 정상회담 (로마)	10.30~31	2021년 G20 정상회의 (로마)
10.31	G20 정상회의 계기, 한·독일 정상회담 (로마)		
10.31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로마)		
10.31~11.3	외교부 차관보 리비아, 튀니지 방문		
		10.31~11.13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영국 글래스고)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1.1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발효		
11.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항공업무 일부 분야에 관한 협정” 발효		
11.1	외교부 제1차관,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면담 (서울)		
11.1	COP26 계기, 한·영국 외교장관회담 (영국 글래스고)		
		11.1~2	COP26 정상회의 (영국 글래스고)
		11.1~13	제343차 ILO 이사회 (화상)
11.3	한·헝가리 정상회담 (부다페스트)		
11.3	한·헝가리 외교장관회담 (부다페스트)		
11.3	외교부 차관보, 튀니지 외교장관 예방 (튀니스)		
11.3	제1차 한·카타르 정책협의회 (서울)		
11.3~4	한·UAE 투자보장협정 개정 4차 협상 (두바이)		
11.3~5	제3차 한·러시아 지방협력포럼 (대면·비대면 혼합)		
11.4	외교부 제2차관, 몽골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서울)		
11.4	한·타지키스탄 외교차관회담 (두산베)		
11.4	제2차 한·V4 정상회의 (부다페스트)		
11.4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 (부다페스트)		
11.4	한·폴란드 정상회담 (부다페스트)		
11.4	한·체코 정상회담 (부다페스트)		
11.4	한·OECD 공동주최 아시아와 취약성 고위급 회의 (화상)		
11.5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준비를 위한 한·중앙아 차관급 준비회의 (두산베)	11.5	제6차 국제기구분담금 관계부처 협의회 (화상)
		11.5	2021년 APEC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화상)
11.5~12	미 연방의회 의원보좌관단 방한		
11.7~8	제20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 (서울)		
11.8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	11.8	글로벌펀드 제46차 이사회 (화상)
		11.8	COP26 계기, P4G 부대행사 개최 (대면·비대면 혼합)
		11.8~9	2021년 제32차 APEC 합동각료회의(AMM) (화상)
11.8~12	외교부 제2차관 아프리카 3개국 (우간다, 르완다, 카메룬) 방문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1.9	제5차 한·네팔 정책협의회 (카트만두)		
11.9	국립외교원장, 주한잠비아대사 면담 (서울)		
		11.9~24	제41차 유네스코총회 (파리)
		11.10	미 국무장관 주최 코로나19 외교장관 회의 (화상)
11.10	한·태평양동맹(PA) 그린경제 포럼 (서울)	11.10	2021 지속가능한 북극 포럼 (대면·비대면 혼합)
11.10	한·콜롬비아 외교장관회담 (서울)		
11.10	국무총리, 콜롬비아 부통령 면담 (서울)		
11.10	한·에콰도르 외교차관 면담 (서울)		
11.11	제3차 한·아세안 싱크탱크 전략대화 (화상)		
11.11	한·미 외교차관보 회담 (서울)		
		11.11~12	AI 글로벌 파트너십(GPAI)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대면·비대면 혼합)
11.12	제3차 한·크로아티아 정책협의회 (서울)	11.12	2021년 제28차 APEC 정상회의(AELM) (화상)
11.12	제10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		
11.14~20	외교부 제1차관 미국 방문 (워싱턴DC, 보스턴)		
		11.15	중미 북부 3개국 공여국회의 (화상)
11.15	한·모잠비크 정상 간 친교오찬 회담 (거제)		
11.15	KF-CSIS 한미전략포럼 (워싱턴DC)		
		11.15~18	WFP 제2차 정례 집행이사회 (화상)
11.16	제4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화상)		
11.16	한·미 외교차관회담 (워싱턴DC)		
		11.16~17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개최 (대면·비대면 혼합)
11.17	한·일 외교차관회담 (워싱턴DC)	11.17	제9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워싱턴DC)
		11.17	외교장관,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TCS) 사무총장단 접견 (서울)
		11.17	제21차 환인도양연합(IORA) 각료회의 (다카)
11.18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통화		
11.18	한·감비아 외교장관 오찬회담 (서울)		
		11.18~19	제6차 부산글로벌파트너십 포럼 (대면·비대면 혼합)
11.19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협력연락 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발효	11.19	제23차 환인도양연합(IORA) 고위관리회의 (다카)
11.19	제18차 한·캐나다 포럼 개최 (대면·비대면 혼합)		
11.21~24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문		
11.22	한·일 국장 협의 (서울)	11.22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 (서울)
		11.22~23	ASEM 제4차 고위관리회의 (화상)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1.23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서울)		
11.23	제10차 한·흑해경제협력기구(BSEC) ICT 협력 프로그램 (화상)		
11.23~25	미 하원 보훈위원회 대표단 방문		
11.24	한·그리스 외교장관 통화	11.24	제14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화상)
11.24	외교부 제1차관-주한아랍대사단 간담회 (서울)		
11.24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9차 국장급회담 (화상)		
		11.24~26	제23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총회 (파리)
11.25	외교부 제1차관, 이탈리아 외교차관 면담 (서울)	11.25	제3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대면·비대면 혼합)
		11.25~26	제13차 ASEM 정상회의 (화상)
11.26	외교부 제1차관,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통화		
11.27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발효		
11.27~30	외교부 차관보 베트남 방문 (하노이)		
11.29	한·타지키스탄 외교장관회담 (두산베)	11.29	제8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대면·비대면 혼합)
11.29	외교장관, 타지키스탄 대통령 예방 (두산베)		
11.29	제3차 한·EU 대테러특별작업반 회의 (브뤼셀)		
		11.29~121	제5차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발전·건강한 삶을 위한 변혁교육 포럼 (화상)
		11.29~121	제112차 국제이주기구(IOM) 총회 (대면·비대면 혼합)
		11.29~123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총회 (대면·비대면 혼합)
11.30	제14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두산베)	11.30	제21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FEALAC) 고위관리회의 (화상)
11.30	한·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회담 (두산베)	11.30	2021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회의 (화상)
11.30	한·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회담 (두산베)	11.30	2021 글로벌기술외교포럼 (대면·비대면 혼합)
11.30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회담 (두산베)		
11.30	한·카자흐스탄 외교차관회담 (두산베)		
11.30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 (화상)		
		11.30~121	제3차 프라하 5G 안보 컨퍼런스 참석 (화상)
		11.30~121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대면·비대면 혼합)
		11.30~123	제24차 세계관광기구(WNTO) 총회 및 제114차~115차 집행이사회 (마드리드)
12.1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대면·비대면 혼합)		
12.1	제16차 한·UNDP 정책협의회 (뉴욕)		
		12.1~2	북극이사회 고위관료회의(SAO)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2.1~3	2022년 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 (푸켓)
12.2	한·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차관 면담 (서울)		
12.2	제9차 한·스웨덴 정책협의회 (서울)		
12.2	제17차 한·UNICEF 정책협의회 (뉴욕)	12.2	외교부 제2차관, 우리나라의 불어권 국제기구(OIF) 가입 5주년 기념 행사참석 (서울)
		12.2~3	제28차 OSCE 각료이사회 (스톡홀름)
12.3	국립외교원장, 스웨덴 SIPRI 소장 면담 (서울)		
12.3	외교부 차관보, 아프리카지역 공관장 회의 개최 (화상)		
12.3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에 지급해야 하는 파키스탄 대외채무 재조정에 관한 협정" 서명 및 발효		
12.3	제1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 (화상)		
		12.6~7	USAID 주최 코로나19 개발협력장관회의 (화상)
		12.6~11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0차 당사국총회 (대면·비대면 혼합)
12.7	제32차 한·UNESCAP 연례협의회 (화상)		
12.7	외교장관, 유엔사무국 사무차장단 접견 (서울)		
12.7	제19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 (화상)		
12.7	외교부 제1차관, 미 이란특사 통화	12.7	제19차 동아시아포럼(EAF) (대면·비대면 혼합)
		12.7~8	2022년 제1차 G20 셰르파회의 (대면·비대면 혼합)
		12.7~8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화상)
12.8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화상)	12.8	제14차 한·중·일 3자 협력포럼 (웨비나)
12.8	한·헝가리 외교장관 전화 회담	12.8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고위급 공약회의 (화상)
12.9	제33차 한·독일 경제공동위 (화상)	12.9	제14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대면·비대면 혼합)
12.9	제1차 한·호주 사이버·핵심기술 정책협의회 (화상)		
		12.9~10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12.10	제1차관, EU 대외관계청 사무차장 통화	12.10	우리나라,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 당선 (런던)
12.10	제4회 서울아프리카대화 (대면·비대면 혼합)		
12.11~12	G7 외교개발 장관 확대회의 계기, 한·미 외교 장관 약식 회동 (리버풀)	12.11~12	2021년 제2차 G7 외교·개발 장관 확대회의 (리버풀)
12.12	G7 외교·개발 장관 확대회의 계기, 한·독일 외교장관회담 (리버풀)		
12.12	G7 외교·개발 장관 확대회의 계기, 한·영국 외교장관회담 (리버풀)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2.12	G7 외교·개발 장관 확대회의 계기, 한·필리핀 외교장관회담 (리버풀)		
12.12	G7 외교·개발 장관 확대회의 계기,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리버풀)		
12.13	한·호주 정상회담 (캔버라)		
12.13	"대한민국 정부와 앙골라공화국 정부 간의 치안 쇄신 2단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서명 및 발효		
		12.13~18	제16차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화상)
		12.14	제5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 (화상)
		12.14	제169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화상)
		12.14~15	2021년 난민글로벌콤팩트(GCR) 고위급회의 (화상)
12.16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및 제3차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간담회 (서울)	12.16	NEACHS 5차 회의 (화상)
12.16	제9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화상)		
12.17	제6차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 (서울)	12.17	제44차 BSEC 외교장관회의 (화상)
12.17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서울)		
		12.17~21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워킹그룹(OEWG, 2021~2025) 1차 실질회의 (대면·비대면 혼합)
12.21	'2021~2022 한·메콩 교류의 해' 계기, 한·메콩 포스트 코로나 상호교류 회복 워크숍 개최 (대면·비대면 혼합)		
		12.22	오미크론 대응 외교장관 화상회의
12.23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화상)	12.23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5조 마호에 대한 유보 철회" 발효
12.24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세관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발효		
12.24	외교부 제1차관, 주한이란대사 면담 (서울)		
12.29	국립외교원장, 주한카타르대사 면담 (서울)	12.29	제6차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NTCT) 대표자 회의 및 2021 NTCT 콘퍼런스 (웨비나)

2) 북한 관계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15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1.19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독일 외교부 정무차관 유선협의		
1.26	한·중 정상 통화		
1.26	한·러 북핵 차석대표 유선협의		
1.28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 유선협의		
2.9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한러시아대사 면담 (서울)		
2.10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유선협의		
2.15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2.19	북핵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협의 (화상)
2.25	북핵문제 관련 한·미 유선협의		
3.17	한·미 외교장관회담 (서울)		
3.19	북핵문제 관련 한·미 양자 협의 (서울)		
3.25	북핵문제 관련 한·미 유선협의		
3.25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3.25	한·러 외교장관회담 (서울)		
		4.2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4.3	한·중 외교장관회담 (베이징)		
4.22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유선협의		
5.3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 (런던)		
5.5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런던)	5.5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런던)
5.21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DC)		
5.22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5.28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5.28	한·러 북핵 차석대표 유선협의		
6.12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런던)		
6.21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서울)	6.21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서울)
6.21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서울)		
		6.22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프랑스 국제관계 전략연구소(IRIS) 화상 컨퍼런스 기조 연설
6.23	한·중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6.23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서울)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7.8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7.29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8.2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8.4	한·미 국장급 협의		
8.21~24	미국 대북특별대표 방한		
8.24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 (서울)		
8.29~9.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9.12~14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방문		
9.13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도쿄)		
9.14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도쿄)	9.14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도쿄)
9.15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9.15	한·중 외교장관회담 (서울)		
9.15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9.16	한·미 국장급 협의		
9.16	한·미 북핵 차석대표 협의 (서울)		
		9.22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뉴욕)
9.22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뉴욕)		
9.23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뉴욕)		
9.28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9.29	한·중 북핵 수석대표 협의 (화상)		
9.29~30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인도네시아 방문		
9.30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자카르타)	9.30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9.30	한·러 북핵 차석대표 유선협의		
10.13~16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러시아 방문		
10.14	한·러 수석대표 협의 (모스크바)		
10.15	한·일 정상 통화		
10.16~19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10.18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유선협의 (워싱턴DC)		
10.19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워싱턴DC)	10.19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워싱턴 D.C.)
10.23~24	미국 대북특별대표 방한		
10.24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서울)		
10.27	한·러 외교장관회담 (모스크바)		
10.29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10.29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로마)		



양자 관계		다자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0.31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 (로마)		
11.1	한·미 국장급 협의		
11.1	한·중 북핵 수석대표 협의 (화상)		
11.2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		
11.22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서울)		
12.11~12	G7 외교개발 장관 확대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약속 회동 (리버풀)		

# 2021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외교부  
[www.mofa.go.kr](http://www.mofa.go.kr)

**디자인** 디자인메카

\*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외교부 정책기획담당관실(02-2100-7268)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